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3> I. '음모'에 대해 말해보자

2003-03-27 오전 8:41:28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지구 정치경제는 어디로: 전세계적 자본 축적과 이라크 전쟁

들어가며

모두 다 잠들어 고요하다. 지금 이 시각 인류 문명의 요람지였던 이라크에서 색색의 불벼락이 쏟아지고 있을 것이고, 남녀노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팔다리 머리통이 툭툭 굴러다니고 있을 지도 모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옆집 이웃의 살타는 불고기 냄새"를 지겹게 맡게 될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죽기로 죽이고자 하던 일부 미국인들 얻고자하는 것을 얻고 말았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이제 CNN이 신나게 중개할 전황을 프로 야구보듯 넋놓고 보는 것 말고 할 일이 없는 것일까.

물론 인간 세상의 어처구니 없는 부조리가 어디 한 두번이었으며 그 앞에 그냥 맥놓고 퍼질 수 밖에 없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가. 그러니 적당히 해두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 그래도 될까? 이번 부시 일당의 이라크 전쟁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역사에 가득한 "예사의" 부조리와 달리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첫째, 그들의 다음 "무대"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을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다. 둘째, 이 사건은 단지 좁은 의미의 지정학이나 국제 정치학의 사건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와 사회 전체의 재구조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후 약 10년간 우리에게 친근했던 "지구화 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는 이제 이번 전쟁을 전환점으로 아주 새로운 방향의 세계 질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즉, "먼곳에서 벌어지는 비인륜적 학살"이라는 윤리적 의의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현실적 문제로 나타날 심대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번 전쟁을 전지구적 정치 경제 체제의 구조 변환이라는 포괄적인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토론토 요크 대학교의 죠나단 닛잔(Jonathan Nitzan)과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는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축적 체제의 해명을 위하여 실로 괄목할만한 작업을 해온 바 있다. 필자는 이후의 일련의 기사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성과 중 현재의 전쟁과 관련하여 함의를 던져주는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독자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제학과 정치 사회학 이론의 논의는 피하고자 하였으며, 그 부분의 논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구적 축적과 변형의 이론>(닛잔과 비클러 저, 홍기빈 역, 삼인출판사) 이라는 이름으로 곧 출판될 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서명 변경 가능)

앞으로 게재할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I. 연재에 앞서서: "음모"에 대해 말해보자
II. 보데의 법칙? :무기-석유 연합의 "차등적" 이윤율과 중동의 분쟁
III. 90년대의 축적 체제: 신자유주의의 번성과 지구적 인수 합병
IV. 부시 집단의 성격
V. 앞으로의 축적 체제: 지구적인 군사 분쟁과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VI.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I. 연재에 앞서서: "음모"에 대해 말해보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음모이론"과 과학적 이론에 관하여 몇 가지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하여 분명 어떤 이들이 "음모이론"이라는 딱지를 붙이고자 할 것이 분명하기도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우리의 사고를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능력한 기존의 "사회 과학" 이론의 사고 방식의 맹점을 짚고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음모이론이란 이런 저런 사회적 현상과 사건들을 소수의 특정 집단의 "음모(conspiracy)"의 결과로 돌리는 태도이다. 유럽의 모든 혁명과 정변은 모조리 비밀 결사 프리메이슨(Freemason)의 음모로 돌린다든가, 국제 정치 정세의 변화의 모든 원인을 소위 "시온 의정서(Zion Protocol)"에 나타난 바 있는 "유태인의 세계적 음모"로 돌리는 따위의 것들이 고전적인 예이며, 가깝게는 케네디의 암살에서 소련의 몰락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외계인"과 그 앞잡이인 "그림자 세계 정부"의 책동으로 설명하는 것 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다.

이러한 음모이론이 불신과 냉소를 받는 것은 두가지의 다른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음모 이론은 그 진위 여부를 아예 검증할 수도 없도록 짜여진 논리 구조로 자의적인 인과 관계를 설정하는 비과학적 이론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이 통념으로 갖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기상천외한 원인을 들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을 음모이론으로 몰아 잘못된 것으로 공박하는 주장들을 볼 적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두 번째 종류의 이유에서의 비판은 자칫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무조건 기각해버리는 반대의 지적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 음모이론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의 관점 즉 그 이론이 철저하게 "과학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간 사회의 많은 일들은 실제로 특정 집단의 의도적 행동 – "음모"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 을 통해 결정된다. 여기에 소개하는 닛잔/비클러 이론도 그런 의미에서라면 분명히 세계적 자본 축적과 전쟁을 둘러싼 지배 계급 분파의 "음모"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통상의 사회과학자들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음모이론으로 취급되는 것은 단연코 거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명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과학성"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과학성: 인과율과 경험적 논박 가능성의 문제

대부분의 이론은 어떤 현상의 인과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즉 A 라는 사건의 원인을 B, C, D....등 무수한 사건 중에서 특별히 B 라는 사건으로 돌리는 인과귀속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즉 "싹이 나왔다"라는 사건 A의 원인을 "물을 주었다"는 사건 B에 돌려, "물을 주면 싹이 나온다"라는 이론이 갖추어 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인과귀속에 근거한 이론도 있지만, 아주 자의적이고 엉뚱하게 들리는 인과율에 근거한 이론들도 있다. "까마귀날면 배가 떨어진다"든가 "초치면 풍나온다"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이 세계의 만물은 서로 연관된 흐름안에서 존재하며, 인과율이란 그 흐름에서 두 개의 사건 만을 쏙 뽑아 내어 그냥 얽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리상 어떤 이론의 인과율이 다른 이론의 인과율보다 본질적으로 더 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이거나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물을 주면 싹이 나온다"는 주장이나 "초치면 풍나온다"는 주장이나 임의적인 인과관계 설정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어느 쪽이 특별히 우월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벌어진 월식을 설명하려는 각종의 "과학적 명제"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분노"로 돌리는 미신적 주장과 비교하여 어떤 형식적 특수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것은 그 과학적 명제가 "경험적으로 논박가능(empirically falsifiable)"한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할 것이다. 흄이 말하는대로 인과율이라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게 아니라면, 어떤 명제가 "과학성"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 이론이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인생에서 유의미한 진리들에 과학적 명제만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최소한 누군가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 명제로 내세우려면 반드시 그 "경험적 논박 가능성"을 갖춘 형태로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월식이 벌어졌다"는 명제는 과학적 명제가 아니다. 이 명제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거나 논박하려면 우선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사건 A와 "월식이 벌어졌다"는 사건 B가 독립적으로 관찰 가능해야 하며, 둘째 그 두 개의 사건 발생의 상호 연관이 어떠한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를 어찌 우리 중생들이 관찰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이 단지 "월식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세상에 나타나는 법이라면, 이 명제는 사실상 동어반복이 되어버려 입증이고 논박이고 불가능한 것이 된다.

반면, 그런 면에서 "초치면 풍나온다"라는 명제는 그 깜찍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입증 가능성"을 띤 버젓한 과학적 명제의 틀을 갖추고 있다할 것이다. 그 인과귀속의 성격이 상식에 부합하고 않고는 과학성과 아무 상관이 없고, 경험적으로 입증 논박이 가능한가 아닌가가 관건이 된다. 오히려 그를 통해 상식을 비판하고 파괴하는 것이 과학의 임무가 아니던가.

음모 이론의 문제: 입증도 논박도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음모이론으로 공격당해온 주장들이 어째서 비과학적인 것인지를 따져볼 수가 있다. 그 대부분은 그 명제를 경험적으로 입증도 논박도 할 수가 없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음모"라지 않는가. 모두 다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열려져 있다면 이미 "음모"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 "음모를 꾸민자들"의 존재

도 의도도 경험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식이다. 그래서 모든 음모이론의 줄거리에는 항상 그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음모"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리메이슨"이나 "유태인" 같은 집단들은 아예 정의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같은 범인들로서는 아예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위 "외계인 음모 이론"도 마찬가지여서, 그 외계인의 존재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음모가 모름지기 한창인 모양이다. "돌부리에 채어도 미제국주의의 음모"라는 농담도 마찬가지. 미 CIA는 항상 모든 음모를 은폐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할 뿐 오늘도 도처에서 반미주의자들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입증이고 논박이고 그 내부 집단의 사정을 잘 아는 자신들이 던져주는 설명을 믿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음모이론의 해악성이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냉철히 이성적 경험적으로 따져볼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사람들 마음 속 깊숙히 자리잡은 공포와 증오에 기생하여 자칫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어거지에 불과한 것이다. 즉 음모이론의 문제는 그들이 "음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명제의 기본적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합리적 생산적 토론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미신이라는 데에 있다.

현대 사회과학 안의 "음모이론"

재미있는 점은, 이 "경험적 논박가능성"이라는 과학적 명제의 기본 요건은 존경받는 현대 사회 과학자들에게서도 무시되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은 "근면한 민족성"에 있다는, 국내 한국 경제론의 최고 대가라는 이의 주장을 생각해보라. "근면한 민족성"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측정하여 비교할 방법은 개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는 그냥 통념에 기댄 "의견(doxa)"에 불과하다.

상식처럼 유포된, "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경제 발전을 통해 중산층과 시민 사회의 성장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비슷하다. 도대체 그 중산층이라는 것은 몇 몇 사회학자들의 "중민이론"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경험적 실체가 있으며,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실천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저런 민주화의 계기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인가? 이러한 경험적 근거들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채 만약 이런 명제들이 사용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들이다.

나아가 어떤 경제학자들은 음모이론과 판박이인 진짜 음모이론을 마구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 경제의 자체적 작동은 항상 완벽한 일반 균형을 일관되게 지향하는 법이란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무지하고 탐욕스런 노동 조합 및 이런저런 이익 집단들 그리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줏대없고 근시안적인 정치가들이 계속 그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가장 유명한 버젼은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집산주의자들의 음모(collectivist's conspiracy)"라는 주장이다. 그 이후 이 주장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시장 개혁"이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를 변호하는 보신술로 지겹게 변주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 명제로 제출이 되려면 먼저 그들은 그 "이상적 일반 균형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라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적으로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일반 균형"이라는 것도 "철학자의 돌"처럼 학자들의 책에나 나오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며, 거기에 근거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음모"에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은 저질의 음모이론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람들이 얌전히만 따라주면 철학자의 돌이 나타나서 현실 경제를 이끌어주련만, 그들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오늘도 철학자의 돌은 요원할 뿐이다". 이런 것을 과학적 명제라고 내미는 것인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음모를 이야기해보자

앞으로 보게 될 닛잔/비클러의 이론은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자본 분파 즉 "지배적 자본(dominant capital)"의 축적 행태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 방식은 기존의 주류 사회과학과는 크게 다르며, 그야말로 "음모"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화끈한 고급정보같은 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곧 실망할 것이다. 평범한 사회과학자인 이들이 손에 넣어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만인에게 개방된 역사적 통계적 자료이며, 또 이들의 이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년에 백악관과 JP모오건이 더욱 유착할 것이다"는 식의 엽기성 예언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자본 축척 패턴의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론에 동의하건 않건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점은 이 이론이 분명히 "경험적으로 논박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는 "과학적" 명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이론이 "음모"에 대한 이야기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분명코 구체적인 특정 인간 집단들일진대, 언제부터인가 현대 사회과학은 몇 가지 범주의 사회적 행위자들 – 계층, 성, 지역, 인종, 민족 등 – 만을 설정하고 그 각각의 행동을 깔끔하게 이론화하여 그러한 교과서적 법칙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된 몇 종류 행위자들 이외의 집단의 의도와 행동을 강조하게 되면 대번에 "음모이론"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만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맹점이 생겨나게 된다. 사회 변동과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 즉 "지배 계급"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는 것이다.

한번 묻자. 쌍동이 빌딩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또 조만간 어디어디에서 벌어질 사태들 또 크게 오르락내리락할 석유 가격과 그 여파가 그렇게 해서 설명될 사태인가? 오히려 부시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또 전쟁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본 분파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자본의 축적에 따라 모든 정치 사회적 역동이 크게 좌우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 "지배적 자본"의 행태를 연구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각종 수요 공급 곡선과 생산 함수의 분석, 국가 관계의 게임 이론적 분석에 집착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또 뚫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오히려 현대 사회과학에 오염되지 않은 18세기의 아담 스미스는 자본가 계층을 설명하는 데에 "음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업종의 자본가들은 잘 만나서 놀고 즐기지도 않지만, 일단 만나서 대화가 벌어졌다하면 반드시 공공에 대한 음모와 가격 인상 책략으로 귀결되는 법이다"(A. Smith, Wealth of Naitons, (New York: Modern Library, 128p.))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서는 카이제르 소제라는 신비의 인물이 나온다. 국제 범죄계의 지존으로 여겨지는 그이지만 전혀 꼬리가 잡히지 않아 꼭 봉래산 신선마냥 실재 인물인지 조차 의심되는 존재이다. 그에게 놀아나는 범죄자들 또 그를 잡아보려는 경찰의 숨바꼭질이 숨차게 벌어진 뒤, 경찰은 카이제르 소제가 실재 인물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다음의 진리를 뼈아프게 배운다. "최대의 음모는 카이제르 소제가 가공 인물이라는 소문이다".

"음모이론"은 이성적 상황 판단의 적이다. 하지만 현실의 "음모"에 대한 과학적 연구마저 무작정 "음모이론"으로 몰아부치는 태도야말로 또 하나의 "음모이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의식적으로건 아니건 그 "음모"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말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필자 홍기빈은 현재 캐나다 요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소장학자로, 외국에 체류중이면서도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통찰력 있는 글을 여러 온/오프라인 매체에 보내며 많은 반향을 얻고 있다. 프레시안 연재글의 제목 '현미경과 망원경'은 정치와 경제, 국제와 국내의 이분법을 넘나드는 글을 쓰고자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책세상)와 논문「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19세기 금본위제를 중심으로」등이 있으며 역서로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外>(책세상) <자본론을 넘어서>(백의)가 있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 이전기사 다음기사 ▶ 전체리스트 필자의 다른기사 편집자에 의견보내기

☞ '이라크전쟁'에 관한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회원 토론달기 회원 토론보기(0) 비회원 토론달기 비회원 토론보기(0)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4> II. 보데의 법칙? ① 미국 군수 자본

2003-04-11 오후 1:58:23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I. 보데의 법칙? : 무기-석유 연합의 "차등적" 이윤율과 중동의 분쟁

① 미국 군수 자본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이유가 미국 군수 자본과 석유 자본의 이익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다. 이라크 전에서 나오는 "장물"을 둘러싸고 딕 체니 부통령 이하 워싱턴 인맥에 줄을 댄 이런저런 군수 석유 자본들의 활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군수 – 석유 자본 동맹이라는 용어 자체는 비판적 지식인들과 언론에 숱하게 회자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지와 어떤 작동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체계적 논의는 많이 만나지 못한 듯 하다. 많은 주류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아예 "음모 이론"과 하나로 보아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다루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닛잔/비클러 이론은 이를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여 형성된 "무기 달러 – 석유 달러 동맹(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으로 이름붙여 그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어, 중동 지방의 석유의 정치경제학과 군사 갈등의 정치경제학을 이 집단의 행태와 연결지어 설명하려 시도한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 연구의 결론은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부분의 기사는 다시 세 개의 글로 나누어 진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군수 자본 핵심(arma-core)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글에서는 석유 자본 핵심(petro-core)을 살펴본다. 세 번째에서는 70년대 이래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갈등과 석유 가격의 역사적 추세를 이 무기-석유 동맹의 자본 축적 패턴과 연결시켜 살펴본다.

1. 자본주의와 군비 지출

오귀스뜨 꽁뜨(August Comte)는 전쟁의 원인이 자원의 희소성에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역사가 산업 사회의 풍요로 진보하면서 차츰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생각은 스펜서같은 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굳이 소로킨(Sorokin)의 호전성 지수(bellicosity index)를 살펴보지 않아도, 20세기의 역사가 그러한 예측과는 정반대로 각종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음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그래서 이미 20세기 초부터 레닌이나 부하린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을 필두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발전이 오히려 전쟁과 군비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자본주의 경제 구조 전체 –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거시 경제' 차원 - 의 논리에서 군비 지출을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홉슨이나 로자 룩셈부르크 등은 자본주의 구조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과소 소비 및 과잉 축적의 결과로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나오게 된다 논리를 편 바 있었으며, 이는 멀게는 60년대 미국의 신좌파에게 큰 영향을 끼친 바란과 스위지의 "독점 자본" 이론으로 이어진다.

기술 혁신과 대기업 조직에 기반한 독점 자본 단계에 들어선 자본주의에서는 마르크스가 예언한 것과 같은 이윤율의 저하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잉여'의 계속적 증가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점 자본주의는 그 남아도는 경제적 잉여를 배출할 곳이 필요해지게 되므로, 베블렌도 예언한 바 있는 "제도 차원의 낭비"의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된다. 광고, 공공 사업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약점이 있다. 첫째 엄밀히 말해서 순수한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기 일쑤이며, 둘째 그 규모에 있어서 불충분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주 이상적인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군비 지출"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지출 규모도 천문학적 숫자이거니와 이 무기의 소비란 그야말로 "파괴" 행위이니 아무런 경제적 잉여도 생산되지 않는 순수한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이들의 주장이 앙상한 이론적 추리라기보다 미국 외교의 역사와50년대 이래 꾸준히 계속된 엄청

난 규모의 미국 정부 군사 지출이라는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산물임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 경제학자 쯔르 시게또(都留重人)도 이미 1956년 "자본주의는 변했는가(Has Capitalism Changed?)"라는 논문에서 미국 경제의 저축을 연구하여, 미국 경제가 계속 현재의 성장율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GDP의 10%에 해당하는 군사 지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그러한 GDP 성장과 10% 군비 지출의 추세가 10년간 계속 될 경우엔 군사 지출의 절대적 크기 자체가 "평화 상황에서서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크기에 도달할 것이라는 실로 의미심장한 암시도 던지고 있다. 과연, 10년후인 1966년의 미국은 여전히 GDP의 9% 정도의 군비 지출을 하는 한편 베트남 전쟁에 깊숙히 빨려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1966년에 발표된 바란과 스위지의 이론이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서 군비 지출과 전쟁을 설명하는 논리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첫째, 현실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군비 지출이 1968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되었고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위 데땅뜨 국면이 도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론적인 면에 있다. 이렇게 문제를 구조의 논리로 환원하게 되면 "자본주의는 항상 호전적이고 사악한 추세를 갖는다"는 포괄적 결론 –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망한다"는 묵시록적 교훈 - 이외에 현실의 구체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어 망하게 되어 있다"는 1920년 이전의 레닌식 주장의 폐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았다. 또 항상 전쟁과 군비 지출로만 치닫는 것도 아니다. 평화의 국면도 도래하며 또 급박스런 위기 국면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항상 "총 자본"의 구조적 논리로만 상황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틀로 인해 그렇게 다양한 현실의 설명에 무력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한계의 인식과 맞물리면서, 1970년대 초부터는 "추상적인 자본주의 체제 발전의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핵심적 군수 자본 집단의 존재와 그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에 촛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선구적인 연구로는 역시 칼레츠키(Michal Kalecki)를 꼽아야 할 것이다. 이미 40년대부터 거대 독점 자본이 경제 및 사회를 재구조화해버리는 과정에 착목했던 그는 60년대에 쓰여진 일련의 논문에서 미국 내의 구체적인 자본 분파 집단의 존재와 갈등을 확인한다. 주로 미국 동부 해안에 자리잡은 오래된 민간 산업 자본에 대하여 군수 산업과 연결된 자본 집단이 서부 해안 지방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전 등을 거치면서 서부의 군수 자본이 우월한 집단이 되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자본 집단 내부의 재분배가 벌어지게 될 것이며, 또 이 분파가 미국 지배 계급에 합류하게 되면서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외교 정책을 밀어부치는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과연 이러한 칼레츠키의 예측은 이후에 실현되었는가? 더 많은 이윤 몫을 가져가는 군수 자본이라는 집단은 정말로 그 정체가 뚜렷하게 형성되었는가?

2. 군수 자본 핵심 기업들과 그 **'**차등적**'** 이윤의 동향

이 "군수 자본 핵심(arma-core)"의 존재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닛잔/비클러는 미 국방성이 매년 발표하는 "일차 계약 액수에 따른 100대 군수 조달 기업(100 Companies Receiving the Largest Dollar Volume of Prime Contract Awards)" 을 살펴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핵심 기업들을 걸러낸다. 첫째, 군수 산업에 특화된 기업이라해도 크기가 작은 것들은 배제한다(Teledyne, E-System 등이 그래서 배제된다). 둘째, 큰 기업이라해도 총 매출에서 군수 관련의 매출의 비중이 적은 기업들도 배제한다(AT&T, IBM, Exxon, Ford 등이 그래서 배제된다). 그 결과 닛잔/비클러는 Boeing, General Dynamics, General Electric, Grumman, Honeywell, Litton Industries, Lockheed, McDonnell Douglas, Martin Marietta, Northrop, Raytheon, Rockwell International, Texas Instrument, Textron, United Technologies, Westinghouse의 16개 기업을 얻어, 이들을 잠정적으로 군수 자본 핵심 기업으로 상정한다. 물론 이 선정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자의성을 가질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이 16개 기업이 66년에서 91년 사이에 따낸 국방성 일차 계약이 평균 36%에 이른다는 점을 볼 때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16개의 기업들이 과연 칼레츠키가 60년대에 예언했던 대로 미국 경제의 전체 자본가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점점 더 많은 이윤 몫을 챙겨가는 우월한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형성되어 왔는가? 이를 실제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미국 전체 자본가'라는 것을 좀 더 주의깊게 정의해야 한다. 이 16개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해왔는가를 비교할 적절한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법인 전체가 아니라 '대기업 집단(big economy)'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닛잔/비클러는 <포춘(Fortune)> 선정 미국 500대 기업으로 잡고 있다.

그리하여 1966년에서 1991년의 기간 동안 이 16개 군수 자본 핵심 기업의 순 이윤과 포춘 500 대 기업의 순이윤을 비교해 보니 흥미로운 결론이 나온다. 베트남 전이 절정에 달하던 1967년에도 16개 기업의 순이윤이 전체 포춘 500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몫은 5% 남짓에 불과했었는데, 이 수치가 이후 계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 마침내 1990년이 되면 10%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를 양쪽 집단의 개별 기업당 평균 순이윤으로 비교하면 더욱 극적인 결과가 나온다. 1967년 '전형적인' 군수 자본 핵심 기업의 순이윤은 '전형

적인' 포춘 500대 기업에 비해 1.7배 정도의 크기였으나 이 또한 1990년에 이르면 3.13배를 넘게 된다.

넛잔/비클러는 이에 근거하여, 칼레츠키의 예측이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한다. 70년대 특히 80년대에도 "군사 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에 입각하여 꾸준히 지속되어 온 미국 정부의 군비 지출이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차등적인' 이윤을 챙겨가는 군수 자본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3. 무기 수출의 필연성

무기 산업에 따르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수요의 불안정성이다. 사람은 하루 몇 끼니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식품 산업의 수요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그런데 무기의 '소비'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식사처럼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쟁이 닥쳤을 때 무기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이면 되지 않을까? '죽창'이나 '몽둥이' 따위의 무기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근대 이후 무기가 기계화되어버리고 또 끝없는 연구 개발이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어버린 이상, 평화시에 수요가 없다고해서 그렇게 무기 생산 라인을 간단히 폐쇄해버리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다. "버터의 생산이냐 총의 생산이냐"하는 선택은 사무엘슨 경제원론에 나오듯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 무기 산업의 딜레마가 있다. 수요가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시장 확장의 예측'에 근간한 사업이 되기 힘들다. 그렇다고 생산을 폐쇄해버리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무기 수출의 활성화가 그 한 해결책일 것임이 명확하다. 1913년 독일의 무기 회사 크루프(Krupp)의 부패 시비가 있었을 때, 제국 의회에 나온 전쟁상 헤링겐(Josias von Heeringen)은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한다. 유사시에 필요한 무기 생산 능력을 유지하려면 평화시에는 무기 회사들이 수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철저한 장사꾼이 되도록 두어야 하며, 이들에게 공무원같은 청렴 윤리를 강요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그리하여 크루프, 노벨, 카네기, 듀퐁 등의 무기 회사들은 그 당시 모두 거의 규제받지 않는 '자유 기업'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차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은 이 무기 회사들을 국제 분쟁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여 국제적인 무기 수출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조류가 계속 강화되어 2차 대전에 즈음해서 특히 미국에서는 무기 거래는 국가의 외교 정책의 일부로서 통합되기에 이른다. 무기 회사들은 자율성을 잃었지만 그래도 2차 대전 이후 5~60년대의 미국의 냉전 전략 하에서 아시와와 유럽 각지로의 미국의 무기 이전 – 이는 사적 거래가 아니라 정부 간 거래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 이 활발히 이루어졌었기에 그 팽창하는 미국 군사 예산의 수주를 주 원천으로 하여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저 유명한 "군산 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가 등장하여 미국 국가를 지배할 위험을 경고할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60년대가 끝날 무렵이 되면, 베트남전이 미궁에 빠지며 국내의 군사 예산이 삭감되면서 다시 무기 회사들이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깊어지기 시작한다. 세계 대전 이전의 '사적 무기 거래'의 시대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80년대 말까지 그 수출량이 87년 달러 가치로 9십억달러에서 1백5십억달러 사이를 오르내리는 정도가 된다. 혹자는 이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크기에 비해 작다는 이유로 군수 산업에서 무기 수출의 중요성을 무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 축적의 핵심은 매출이 아니라 이윤임을 기억하라. 브로즈카와 올슨(Brozska and Ohlson)에 의하면 무기 수출의 이윤 마진은 보통 국내 거래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63년에서 89년의 기간 동안 무기 수출의 이윤은 전체 이윤의 평균 22.7%라는 무시못할 비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닛잔/비클러는 강조한다.

4. 외교 정책의 변화**?**

여기에서 칼레츠키의 예측의 두 번째 측면 즉 새로 형성된 이 군수 자본 핵심이 외교 정책에 끼치는 영향의 문제가 나타난다. 아이젠하워가 경고한 군산 복합체라는 개념도 분명히 국가 정책이 이들에게 장악되어 갈 위험을 뜻하는 것이긴 했지만 이는 주로 정부의 군사 예산 책정과 분배 문제에 집중되었었다. 그런데 70년대에 접어들어 형성되기 시작하는 이 군수 자본 핵심은 외교 정책으로 그 영향력 행사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동해나갈만한 동기가 뚜렷하다.

이들의 영업은 이미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고, 그나마 삭감을 겪은 미국의 군사 예산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고로 무기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해외의 수요자'는 그냥 생기는가? 그냥 앉아서 어디에 전쟁과 갈등아 생겨라 하고 기다릴 것인가? 한국이나 일본같은 나라들은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을 국가의 임무로 삼고 있으며, 아예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무기도 꺼림칙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수출 상품'으로 본다면, 국가의 외교 정책이 그 수출 판로를 창출하는 데에 일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그렇게 무기 수출이 진흥되면 미국의 군사 기술이나 능력도 유지 및 월등히 신장되게 마련이니 그야말로 외교 정책의 핵심인 '국익과 안보'에도 부합하지 않는가?

물론 이러한 추론은 그야말로 짐작과 개연성에 불과한 것들이므로 이런 정도를 근거로 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이 군수 자본에 휘둘리고 있다"고 한다면 음모 이론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 함축된 메시지가 얼마나 섬뜩한 것인가. 말이 좋아 '무기 수출의 판로 개척'이지 이는 쉽게 말해서 지구 도처에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짓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인류 역사에 자유를 실현할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의 담지자 미국의 외교 정책을 사람들의 목숨을 팔아 배를 채우는 흡혈귀의 책략이라고 근거도 없이 몰아부치다니. CIA 누군가의 총탄에 맞아 죽어도 싼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만약 그 70년대가 시작되면서 정말 미국이 관여하면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며 그를 통해서 무기 수출도 활발해지게 된 곳이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무기 수출의 규모도 그냥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발적이었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된다. 그러한 지역은 최소한 무기를 '폭발적으로' 수입할만한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세계 어딘가에서 제 아무리 피가 튀는 화끈한 분쟁이 벌어져도 그들이 맨날 무기 외상이나 달라고 빌어대는 '거렁뱅이'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의 의혹을 입증할만한 지역의 조건은 첫째, 미국이 개입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폭발적인 무기 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그렇게 할 만한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꼭 맞추는 지역이 있다. 바로 68년 73년에 벌어진 아랍-이스라엘 전쟁과 함께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버린 중동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더 살피면 진실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아랍 국가들이 무기 살 돈을 조달하는 데에 관련된 또 하나의 국제 자본 분파 즉 석유 자본 핵심(petro-core)이다. 다음 편에서 곧 만나자.

추기

이 연재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죠나단 닛잔(Jonathan Nitzan) 교수와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의 연구 성과로 돌려야 한다. 필자는 단지 그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본문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은 모두 그 두 사람의 성과물이다. 물론 소개하는 과정에서의 실수와 착오는 모두 필자의 몫이다. 그들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아카이브에서 원문으로 구해볼 수 있다.

http://www.bnarchives.net

특히 이번 부분과 관련된 본문으로는

"Bringing capital accumulation back in: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military contractors, oil companies and Middle East 'energy conflicts'"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3), 1995

Ch. 5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2002)

필자 소개

필자 홍기빈은 현재 캐나다 요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소장학자로, 외국에 체류중이면서도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통찰력 있는 글을 여러 온/오프라인 매체에 보내며 많은 반향을 얻고 있다. 프레시안 연재글의 제목 '현미경과 망원경'은 정치와 경제, 국제와 국내의 이분법을 넘나드는 글을 쓰고자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책세상)와 논문 「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19세기 금본위제를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역서로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外>(책세상) <자본론을 넘어서>(백의), <지구적 축적과 변형의 이론>(근간, 삼인출판사)가 있다.

관련 링크 (http://www.bnarchives.net)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 이전기사 다음기사 ▶ 전체리스트 필자의 다른기사 편집자에 의견보내기

☞ '이라크전쟁'에 관한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5> II. 보데의 법칙? ② 세계 석유 자본

2003-05-02 오전 10:09:38

II. 보데의 법칙**?** : 무기-석유 연합의 **"**차등적**"** 이윤율과 중동의 분쟁

② 세계 석유 자본

세계 석유 자본의 핵심 기업들을 집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계 석유 시장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저 유명한 "칠공주(The Seven Sisters)"의 이름으로 불려온 초국적 기업 일곱 개가 좌지우지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일곱개의 기업은, 미국의 Chevron(원래 Socal 즉 Standard Oil of California), Gulf(1985년 Chevron으로 병합), Texaco(2001년 Chevron으로 병합), Exxon(원래 Standard Oil of New Jersey), Mobil(1998년 Exxon으로 병합), 영국의 British Petroleum(원래 Anglo-Iranian, 1998년 이후 BP Amoco), 영국-네덜란드의 Royal Dutch-Shell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Chevron, Exxon, BP Amoco, Royal Dutch Shell 의 네 개로 줄어들었다.

1. 간추린 석유 산업의 역사

1)"칠공주"의 전성시대

산업 혁명 초기의 동력은 물론 석탄이었으나, 19세기 후반 내연 기관이 발명되고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석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유럽 각국에서는 정유, 운반, 판매 등 석유 관련 산업을 수직적으로 통합시키는 독점 자본이 출현하게 된다. 이미 레닌의 1917년 저서 <제국주의론>서도 잠깐 언급되고 있듯이, 이 주요한 일곱 개의 기업들은 자국 내의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초국적적인 카르텔을 조직하여 산유 지역인 중동, 남미, 인도네시아의 유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장악하려들게 된다.

마침내 1928년 경에 이르면 가장 힘이 큰 Exxon, BP, Royal Dutch-Shell의 지도하에 이 "칠공주"들이 전세계 지도를 땅따먹기 하듯 줄을 죽죽 그어 각각의 구역으로 나누어 갖는 동시에 가장 풍부한 매장량을 가진 중동 지방에 대해서 공동 행동의 보조를 취하기 위해 똘똘 뭉친다.

석유 산업은 흔히 "상류(upstream)"와 "하류(downstream)"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어질 때가 많다. 즉 석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지층 깊이 묻힌 해저 생물의 진액이 흘러흘러 산업 문명의 기어와 바퀴 하나하나에 흠뻑 적셔지는 과정으로 비유한다면, 탐사와 채굴의 과정은 "상류"일 것이며 운반, 정유, 판매의 과정은 "하류"일 것이다. 이제 유전이 매장된 지역의 국가들은 어처구니 없이 불리한 조건 – 정해진 양의 로열티만 지급받음 – 을 감수하면서 이들 대기업들이 자국 영토 내의 석유를 파가는 것을 허락할 수 밖에 없었다. 유전 외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들 국가 입장에서 보면 "하류"로 가는 물길을 장악해버린 이 칠공주들에게 외면 당할 경우 대안이 없기 때문이며, 또 새로운 유전의 탐사라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명시적 협정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멋진 콤비를 이룬 이 "칠공주"들은 암묵적인 교감을 통해서도 다른 기업들의 진출을 막으면서 수지맞는 과점 가격으로 세계 유가를 유지시키는 데에 성공하여 확실한 과점 체제를 형성한다. 이들의 전성시대는 전후에도 계속된다. 1950년대 들어 세계 경제 부흥이 본격화되면서 석유 수요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게 되면서, 전전의 세계 최고 석유 수출국이었던 미국 마저 수입국으로 변한다. 그 와중에서도 이들 칠공주들은 공급량 조절과 가격 독점력을 잘 지켜냈다고 한다. 석유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대단히 낮은 상품이다. 일례로 73년에서 82년 사이 석유의 실질 가격이 23% 인상하는 와중에서도 수요의 감소는 0.7%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는 (독)과점 가격으로 높게 유지만 한다면 수요의 감소없이 고스란히 이윤의 증가로 이어지게된다.

물론 이러한 칠공주의 전성시대에 기둥이 되어준 것은 영미 제국주의의 폭력이다. 여중에는 "칠공주파"라는 일곱명의 언니들이 있어서, 면도칼을 질겅질겅 씹다가 눈 안깔고 그 앞을 지나가는 여학생이 있으면 얼

굴에 바로 뻗어 버린다는 흉흉한 소문이다. 혹시 여자라고 깔보고 이들에게 "엉기는" 남학생이 있을 경우 대장격인 "영미" 언니가 인근 OO공고의 무서운 오빠들을 불러와서 손을 봐준다고 한다. 1950년대 초 이란에 들어선 새 정권이 감히 칠공주의 유력한 일원인 영국의 Anglo-Iranian(후의 BP이다)에 도전하여 국유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바로 "영미" 언니가 움직였다. 영국 정부는 경제 제재에 이어 무력 행사를 시사하였고, 결국 "중재"에 나선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를 간단히 전복시키고 팔레비 왕정을 세워버린다(그 뒤엔 미국 쪽 회사들이 들어섰다고 한다).

2) 60년대 이후: 칠공주의 몰락?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절이 계속 가지는 않았다. 과점 체제라는 것은 본성상 상당히 불안정적이며, 특히 확고하게 제도화된 권력 구조가 없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과점은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의 장기 호황이었다는 50-6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의 석유 수요는 갈수록 늘어났기에, 상류와 하류 모두에서 이 과점 체제의 테두리를 넘어서려는 압력이 거세어졌다. 상류에서 보자면, 기존의 산유지역 뿐 아니라 알제리, 리비아, 나이제리아 등의 새로운 산유국들이 생겨나면서 독립된 기업들 – 예를 들어 리비아의 Occidental 같은 기업 – 이 유전을 손에 넣는 일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1952년 미국과 공산 국가 밖에서의 원유 생산의 90%를 차지하던 칠공주의 점유율은 1968년 경에는 75%로 감소하였다. 또 곳곳에 정유 시설이 생겨나고 유통 공급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하류에 대한 칠공주의 지배력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3년과 1972년을 놓고 비교해보면, 미국 밖의 산유지에 대한 칠공주의 몫은 64%에서 24%로 떨어졌고, 확인된 유전의 몫은 92에서 67퍼센트로, 생산은 87에서 71%로, 정유 능력의 몫은 73에서 49%로, 유조 용량의 몫은 29에서 19%로, 마케팅은 72에서 54%로 각각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점유력의 저하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석유 산업 자체에 대한 지배력 또한 상류와 하류 모두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상류를 보면, 민족주의적 엘리트들이 성장하면서 산유국 내부에 강한 저항의 기운이 형성되면서 칠공주의 권력에 도전해오기 시작하였다. 1960년 칠공주는 생산 과다로 인한 가격 인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공시 가격(posted price) 인하에 합의하게 되는데, 이 일방적인 가격 인하 조치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 시세와 달리 공시 가격은 산유국들이 칠공주 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의 계산 근거가 되는 것인 고로 산유국 정부는 일방적인 재정적 손해를 입게된 것이다.

이리하여 몇 몇 국가들이 뭉쳐 석유 생산량, 가격, 나아가 유전 소유권까지를 되찾으려는 모임을 1960년 결성하게 되니, 이것이 산유국회의(OPEC)이다. 착실히 내부 단결력과 협상력을 키워온 OPEC는 70년대 초 아랍 이스라엘 전쟁의 발발과 맞물리면서 칠공주로부터 가격, 생산량, 소유권에 걸친 권력을 빼앗아오게 된다. 즉 이제부터는 산유국들이 상류의 물꼬를 틀어쥐고 양과 가격을 결정하는 "제한된 흐름(limited flow)"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두 번에 걸친 70년대석유 위기로 나타났던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하류에 대한 칠공주의 지배력도 무너지게 된다. 석유 파동의 와중에서 곤욕을 치른 각국 정부는 유가 통제, 대체 에너지 개발, 석유 의존도 억제 등 국내의 에너지 수급 상황 전반에 대한 계획과 통제를 실시하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칠공주의 몰락"이라는 명제("demise thesis")를 입에 올리게 되었다. 칠공주의 전성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석유 문제는 OPEC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서방의 인근 국가들과의 국제 정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석유는 초국적 기업 따위가 좌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언니들 중 몇 명이 퇴학맞은 데다가 무시무시한 학생 주임이 부임하면서, 칠공주의 전설도 끝이 난 것일까?

2. 칠공주는 살아있다

어떤 사회 조직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그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그 조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가족 집단은 자식과 가축의 숫자로 그것을 평가했던 듯 싶으며, 프로 야구단은 승전 횟수일 것이며, 영토 국가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가 될 것이다. 이 때 어느 한 집단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다른 성격의 집단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임은 자명한데, 사회 과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오류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한국 고대사의 영광을 믿는 어떤 이들은 시베리아 벌판의 지도를 퍼렇게 칠해놓고서 고조선 이전의 우리 한국(桓國)의 영토였다고 말한다. 그러한 영토 개념은 조직 폭력배의 "나와바리" 나 베스트팔렌 체제의 영방 국가(territorial state)에나 의미가 있는 평가 기준이지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내건 도덕적 공동

체 배달국의 흥망을 평가할 게 아니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칠공주의 “몰락 명제”의 논거로 등장한 것들은 시장 점유율의 저하, 가격 생산량 유통 등에 대한 제도적 권력의 상실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코 기업의 흥망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자본 혹은 기업이라는 조직의 흥망을 평가하는 정당한 기준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이윤으로 평가되는 기업 실적(performance)이다. 70년대 이후 칠공주가 몰락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들의 이윤 실적이 실제로 악화되어왔는지를 보여야 한다. 다음의 표에서 분명히 보이는 바, 실제 이들 기업의 실적을 조사해보면 “몰락 명제”와 상당히 다른 아니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석유 자본 핵심(a): 차등적 이윤 지표 지표 (연간 평균, %)>

기간	1 수익률	수익률의 비율		순 이윤에서 석유 자본 핵심이 차지하는 몫(%)		
		2 석유 자본 핵심¸ ÷ 석유 40-42(b)	3 석유 자본 핵심 ÷ 포춘 500 대 기업	4 석유 자본 핵심 ÷ 석유 40-42	5 석유 자본 핵심 ÷ 포춘 502(c)	6 석유 자본 핵심 ÷ 전 미국 기업
1930-39						9.1(d)
1940-49						3.3
1950-59					18.2(e)	7.2
1960-69	11.5(f)	1.01(g)	1.00(f)	61.3(g)	17.1	8.1
1970-79	14.3	0.99	1.12	61.7	18.0	9.0
1980-89	13.1	1.08	1.03	73.2	17.8	10.5
1990-91	11.5	1.03	1.20	78.1	22.3	9.1

(a) 석유 자본 핵심은 British Petroleum, Chevron, Exxon, Mobil, Royal/Dutch Shell, and Texaco로 구성된다.
(b) 석유 40-42 란 Pforzheimer & Co. group 의 주요 비정부 석유 기업들로 40 - 42개의 전 세계 석유 기업들의 복합체를 나타내며, 총계는 전체 회사 단위로 계산되었다.
(c) "포춘 502"란 포춘 500대 기업에 British Petroleum 과 Royal/Dutch Shell 을 더한 것이다.
(d) 미국 전체의 주식회사 순이윤이 마이너스였던 1931-32 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e) 1954-59.
(f) 1966-69.
(g) 1968-69.
자료: 석유 자본 핵심의 순 이윤과 수익률은 Harvey O'Connor, World Crisis in Oi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2), 포춘 지 자료(directories)와 Standard & Poor's 의 Compustat 에서 계산하였다. 전 미국 주식회사의 순 이윤은 McGraw Hill(online)을 통한 미국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자료, 미국 상무성, Bureau of Economic Analysi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2), Table 871, p. 542 에서 취하였다. 포춘 500대 기업의 순 이윤과 자본 당 수익(return on equity)는 다양한 'The Fortune 500' 에서 취하였다. 세계 40-42 석유 대기업의 순 이윤과 자본 당 수익은 Carl H. Pforzheimer & Co, Comparative Oil Company Statements, reported in th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Annual) 에서 취하였다. Jonathan Nitzan and Shimshon Bichler,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Press, 2002) 222p. 에서 전재.

표 1은 석유 자본 핵심의 연간 순 수익률(자기 자본(equity)에 대한 순 이윤)과 순 이윤(이자와 감가상각을 제한 이윤)의 추이를 다른 벤치마크 집단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표가 명확히 보여주는 바, 어떤 벤치마크로 보더라도 석유 자본 핵심은 쇠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열에서 보이는 바로, 석유 자본 핵심의 수익률은 70년대에 오히려 신장되었으며 60년대의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2열에서 보듯, 세계 최대 40-42대 석유 기업 전체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보아도 이 석유 자본 핵심 기업들의 수익률은 크게 뒤쳐지지 않았으며 80년대 들어오면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포춘 500대 기업과 견주어 보았을 때 오히려 이들의 수익률은 70년대 이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순 이윤이 차지하는 몫의 비교이다. 전체 40-42대 석유 기업의 전체 순 이윤에서 이들 석유 자본 핵심이 차지하는 몫은 감소한 적이 없고 80년대 이후로 오히려 크게 증가해오고 있다. 5열과 6열에서는 더욱 오랜 기간의 자료를 통한 역사적 추이의 판단을 가능케 한다. 칠공주의 전성시대였던 1950년대와 비교해보아도 포춘 502 전체의 순 이윤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계속 증가해온 추세가 분명하다. 6열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분명히 입증된다. 1928년 세계 분할을 이루고 승승장구하던 석유 자본 핵심이 1930년대 미국 전체 주식회사의 순 이윤에서 차지한 비율은 9%였는데, 이는 5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마침내 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그것을 상회하는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결국, 어떤 벤치마크로 평가해본다고 해도 석유 자본 핵심은 “몰락”은 커녕 오히려 개선되어왔으며,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강화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의 시장 점유도 감소하였고, 가격, 생산량, 소유권에 걸친 권력도 잃고 말았다. 즉 외양 상으로 보면 분명 이들은 쇠퇴일로에 들어섰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들의 자본 축적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리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런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이 OPEC의 횡포에 좌우되는 이 세계 석유 시장의 새로운

제도적 환경과 권력 구조는 애초부터 오히려 칠공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장치였던 것이 아닐까? 새로 부임한 호랑이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꽉 잡혀버린 그 칠공주파 언니들이 되레 그 김에 교내 선도부장으로 완장을 차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각종 비지니스를 더 신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② 세계 석유 자본" 절은 원고량이 많아 두차례에 걸쳐 나눠 실을 예정입니다. "3. OPEC, 석유 자본 핵심, 미국"과 "4. 미국 정부와 군수 – 석유 자본 동맹의 형성"은 다음주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필자 소개

필자 홍기빈은 현재 캐나다 요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소장학자로, 외국에 체류중이면서도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통찰력 있는 글을 여러 온/오프라인 매체에 보내며 많은 반향을 얻고 있다. 프레시안 연재글의 제목 '현미경과 망원경'은 정치와 경제, 국제와 국내의 이분법을 넘나드는 글을 쓰고자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책세상)와 논문「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19세기 금본위제를 중심으로」등이 있으며 역서로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外>(책세상) <자본론을 넘어서>(백의), <지구적 축적과 변형의 이론>(근간, 삼인출판사)가 있다.

관련 링크 (http://www.bnarchives.net)

홍기빈/국제정치경제칼럼니스트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6> II. 보데의 법칙? ② 세계 석유 자본

2003-05-09 오전 9:14:17

II. 보데의 법칙**? :** 무기-석유 연합의 **"**차등적**"** 이윤율과 중동의 분쟁

② 세계 석유 자본

3. OPEC, 석유 자본 핵심**,** 미국

(1, 2절은 <5>번 연재기사에 있습니다. 편집자주.)

여기서 잠깐 통상적 관념에 대해 재고해볼 것이 있다. 석유 자본 핵심과 이익이 상충되는 집단은 소액의 로열티에 만족치 않고 민족주의와 반 서구 정서에 기대어 호시탐탐 유전 국유화를 노리는 산유국가들이다. 70년대 이전의 안정된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서는 석유 자본 핵심이 그들을 안정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호시절이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제 3세계의 대두를 등에 업은 OPEC의 단결로 칠공주도 선진국가들도 모조리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 결국 OPEC 는 서방 헤게모니에 대한 제 3세계 저항의 거의 유일한 성공적 예이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 교과서에 보통 나오는 이야기이다. 과연 그럴까? 석유 자본 핵심의 비지니스에 진정한 방해 세력은 산유국가들인가? 필자의 견해이지만 이는 서구 학계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신화(myth)의 한 종류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 기사에서 좀 더 다루겠으나, 석유 시장의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유가 인상이야말로 이윤 확대의 최고 수단이 된다. 따라서 산유국도 석유 기업도 유가를 올리는 데에 이익을 같이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1960년대 이전에 칠공주가 과연 그렇게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시킬 능력이 있었는가이다. 미시 경제학 교과서의 상식으로 보면, 과점 기업들이 담합과 협조만 잘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높게 가격을 매길 수 있을 듯 하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기업들은 항상 주어진 제도적 권력적 맥락 속에서 움직인다는 자명한 현실을 상기해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가능했던 것이 60년대 이전의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 영미 세력 아래의 칠공주라는 국제 카르텔은 20세기에 걸쳐 영국과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적인 세력 균형 체제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석유는 산업 문명에서 너무나 핵심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의 세계적 배분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국제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영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이 칠공주가 허생이 추석날 과일 시장 독점하듯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을 허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당장 칠공주를 거느린 영미 제국주의는 석유를 독점하여 전세계를 착취하는 범죄집단으로 몰릴 것이며, "생존 공간(Lebensraum)"의 논리를 내세운 독일이나 일본은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북부의 유전 지역을 점령하려 들 수도 있다. 더우기 2차 대전 이후의 미국 패권은 냉전의 위협 속에서 전세계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 부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었다. 여기에서 칠공주가 터무니없는 유가 인상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스탠다드 오일의 라커펠러(록펠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칠공주의 기업들이 정말로 "순수한" 경제 조직으로서의 기업이었던 것도 아니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의 세계 경략에 긴밀히 연결되어 그것과 영락을 공유하는 불가분의 부분들이다. 이들의 이익을 영미 국가의 폭력이 보장해주기도 하지만, 이들도 영미의 국제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따로 놀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공주의 유가 책정이 너무 낮다는 오히려 60년대 초부터 산유국 정부 쪽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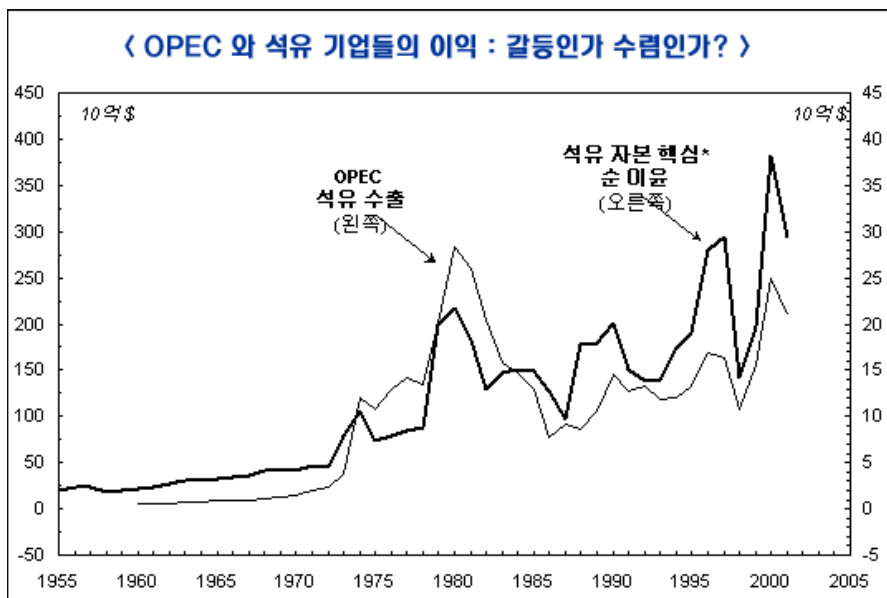
닛잔/비클러 이론이 OPEC–석유 자본 핵심–미국 정부가 동일한 이익 공동체일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1972년에서 82년 사이에 원유가격은 18배로 인상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격 인상이 과연 60년대 이전 석유 산업의 제도적 권력적 환경 – 세계 경제 부흥을 내건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유가 인상을 원하는 산유국을 무시하고 작동하는 칠공주 체제 - 에서 가능했을까? 이제 아랍-이스라엘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아랍 민족주의 세력이 대두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목표가 뚜렷한 이들 무지막지한 세력이 원래의 "평화적" 석유 체제를 막무가내로 뒤집어 엎는 상황인 것처럼 보일 때에만 그러한 유가 인상이 어쨌든 현실에서 납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렇게 보면

OPEC 라는 새로운 제도적 권력적 환경은 극적인 유가 인상에 아주 적합한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양상 칠공주가 모든 권한을 산유국에게 뺏기는 듯 보이는데도 그들의 자본 축적이 활발해지는 현상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한 권한 이양은 그 양자 모두가 원하는 가격 상승이 합리화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을 창출해내는 과정일 뿐이니까.

여기에서 산유국도 석유 자본 핵심의 계속적 활동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극적인 가격 인상을 현실화시키려면 석유 산업의 현황과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은 칠공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의 협조가 없이는 산유국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이 둘은 적극적인 공생관계에 있는 것으로 닛잔과 비클러는 보고 있다. 1969년 사우디의 석유상이었던 샤이크 야마니(Sheik Yamani)의 다음의 말도 이해가 간다. "우리는 석유 대기업들이 힘을 잃고 생산자 소비자 사이의 완충 작용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우리는 현재 체제가 가능하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전체 석유 산업의 기초를 흔들만한 이익 충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주장들은 아직 추측일 뿐이다. 만약 정말로 산유국가들과 석유 자본 핵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것이라면,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량과 석유 자본 핵심의 이윤 추이는 반비례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방금 우리가 본 추측이 옳아서 산유국들과 석유 자본 핵심이 이익 공동체라고 한다면, 석유 수출량의 증감과 석유 기업들의 이윤 추이는 정비례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닛잔과 비클러는 다음의 그림을 제시한다.

[그림 1] * British Petroleum (1998년 이후 BP-Amoco), Chevron (2000년 까지) , Exxon (1999년 이후 ExxonMobil), Mobil (1998년 까지), Royal/Dutch Shell, Texaco (2000년 까지). 해당 년도의 합병으로 기업 관계의 변동이 있었음.Jonathan Nitzan and Shimshon Bicher,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2002) 227p.에서 전재

[그림 1]에서 보여진 두 계열의 증감 추이는 놀랄 만큼 긴밀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산유국들의 비지니스와 석유 자본 핵심의 비지니스는 운명 공동체에 가깝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닛잔과 비클러는 여기에 간단한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단순 OLS) 본다. 그 결과 수출액이 1달러 오르 내릴때마다 석유 자본 핵심의 이윤은 6.7센트 씩 함께 오르내리는 관계를 도출한다. 쉽게 말하자면, 석유 자본 핵심 기업들의 이윤은 최소한 그 3분의 2가 산유국들의 수출액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된다.

칠공주는 살아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OPEC라는 새로운 환경은 바로 이들의 이익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는 체제인 듯 하다. 그 속에서 OPEC 와 석유 자본 핵심은 이익을 함께하는 집단인 것도 분명해 보인다.

4. 미국 정부와 군수–석유 자본 동맹의 형성

미국 정부가 이러한 OPEC 체제로의 전환과 석유 위기를 조장했다는 의혹은 이미 1973년 7월 7일자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 "가짜 석유 위기(The Phony Oil Crisis)"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일본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내 석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석유 위기를 조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의혹 즉 미국이 일본과 유럽의 경제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 새로운 OPEC–석유 자본 핵심 체제를 용인했다는 주장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오델(P. Odell) 같은 이는 이를 일본과 유럽의 성장을 잠식하고 미국의 중동 패권과 석유 기업들의 이윤을 올리는 미국–OPEC–석유 자본 핵심의 "비신성 동맹(unholy alliance)"이라고 불렀다.

미국 내에는 이러한 중동 산유국들이 수입을 올리는 것을 크게 반기는 여러 집단들이 있음이 분명하다. 산유국들의 횡포로 유가가 오른다. 여기에서 석유 자본은 이윤을 올린다.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금고에 갑자기 넘쳐나게 된 달러(보통 석유 달러(petrodollar)라고 부른다)를 어떻게 관리할 지 모르다가, 주로 미국에 자리 잡은 각종 금융 기관에 예치한다. 그러면 이 미국 은행들은 이를 통해 여타 지역의 금융 기관보다 훨씬 더 큰 우위를 갖게 된다(물론 이들이 그 돈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던 것 만은 아니다. 이들이 그 돈을 대부했던 제 3 세계 국가들이 파산하면서 80년대의 외채 위기로 이어졌다.). 또 큰돈을 만지게 된 이들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잇권은 벡텔(Bechtel)같은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 회사에 떨어지게 된다.

한편, 이스라엘의 도전을 구실 삼아 이 산유국의 지배 계급은 상당한 양의 돈을 무기 구입에 쓰게 된다. 저번 기사에서 보았듯, 미국의 군수 자본 핵심은 이러한 지역을 목마르게 찾고 있던 지경이었다. 이렇게 석유 달러로 사간 무기로 중동에서는 또 다시 더 큰 규모의 총질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중동의 위기를 구실로 하여 또 다시 산유국들의 횡포가 벌어지고 석유값은 또 다시 불안정해지고 인상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

즉, OPEC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석유 자본 핵심, 무기 자본 핵심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건설업, 금융업, 대체 에너지 산업(아이러니컬하지만 석유값이 오를 때마다 함께 주가가 뛰는 것도 이들이다) 등등의 집단이 중동에서의 군사 분쟁과 그를 통한 유가 인상에 대해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70년대 이후로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무기 달러-석유 달러 동맹(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닛잔/비클러 이론의 관점이다.

그럴듯한 추리이다. 또 산유국들과 석유 자본 핵심이 유가의 등락을 놓고 이익을 같이 하는 것도 그렇다 하자. 하지만 그러한 유가의 등락이 또 다른 한 축인 무기 자본의 이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여전히 추측 이상이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그러한 동맹이 실제로 있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추측이 아닐까? 게다가 그 함축하는 바가 얼마나 섬뜩한 것인가. 미국의 외교 정책이 결국 석유값을 올리고 무기를 더 많이 팔고 각종 공사 수주를 더 많이 따내기 위한 자들에 의해 좌우되어 중동의 무고한 인명을 계속 희생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황을 가져오는 원흉이라는 주장이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CIA의 총탄에 응징당해도 싸다 할 것이다.

동맹의 두 축 양쪽의 결합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중동에서의 군사 분쟁과 석유 자본 핵심의 차등적 이윤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말 그 두 가지 사이에는 닛잔/비클러 이론의 가정을 정당화할만한 긴밀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다음 기사에서 보도록 하자.

필자 소개

필자 홍기빈은 현재 캐나다 요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소장학자로, 외국에 체류중이면서도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통찰력 있는 글을 여러 온/오프라인 매체에 보내며 많은 반향을 얻고 있다. 프레시안 연재글의 제목 '현미경과 망원경'은 정치와 경제, 국제와 국내의 이분법을 넘나드는 글을 쓰고자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책세상)와 논문「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19세기 금본위제를 중심으로」등이 있으며 역서로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外>(책세상) <자본론을 넘어서>(백의), <지구적 축적과 변형의 이론>(근간, 삼인출판사)가 있다.

관련 링크 (http://www.bnarchives.net)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 이전기사 다음기사 ▶ 전체리스트 필자의 다른기사 편집자에 의견보내기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7> II. 보데의 법칙? ③

2003-05-20 오전 9:50:46

II. 보데의 법칙**?** **:**무기**-**석유 연합의 **"**차등적**"** 이윤율과 중동의 분쟁

③ 중동에서의 군수자본과 석유자본의 이익

지난 몇 회에 걸쳐 우리는 닛잔/비클러 이론을 통하여 미국의 군수자본 핵심과 석유자본 핵심이 각각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또 그들이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같은 이익을 공유하여 동맹을 결성할 개연성을 살펴보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무기 수출을 원하는 미국의 군수 자본과 유가 인상을 통한 이윤 확대를 원하는 석유 자본, 그리고 중동 특수를 얻고자 하는 엔지니어링 건설회사, 오일 달러를 유치하는 미국의 금융 기관 등이 유착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강한 영향을 행사한다.
2.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3. 유가가 인상되고, OPEC 국가들의 수입과 석유 자본 핵심의 이윤이 모두 늘어난다.
4. OPEC 국가들은 늘어난 수입을 다시 미국의 금융 기관에 예치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미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대자본에 발주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국의 무기를 구입한다.
5. 구입된 무기로 갈등의 규모가 확대된다 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그러면 이제 변죽은 그만 울리고 이러한 가설의 '개연성'이 어느 만큼의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볼 때가 되었다. 그 인과관계의 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 갈등의 고조가 실제로 석유 자본과 산유국의 이윤과 수입을 확대하는가. 둘째, 그 반대 방향으로, 산유국의 수입이 늘어나면 실제로 미국의 무기 수출이 늘어나는가.

1. 지역 갈등 → 석유 산업

1) 원유 가격과 '불안' 지수

먼저 흔히 발견되는 오해 하나는 원유 가격이 '희소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석유는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니만큼 귀금속이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희소성의 논리로 가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적 근거가 희박하다. 물론 석유의 매장량은 유한하지만, 그 현실적인 '희소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확인된 매장량'을 '현재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다. 즉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현재 수준의 석유 생산이 계속될 경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다. 만약 세계 석유 생산량에 비해 새로운 유전이 활발히 탐사 확인된다면 이 지표는 올라가게 마련이다. 즉, '희소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반세기 동안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 그 지표는 '30년' 정도였으나 1990년대 초가 되면 '40년'으로 올라가게 된다. 만약 석유의 '희소성'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 기간 동안 석유 가격은 크게 떨어졌어야 했지만, 실제로 벌어진 것은 그 정반대의 사태인 것이다.

원유 가격의 결정이 보통의 경제학 상식과 어긋나는 점이 또 하나 있다. 보통의 상품들은 수요가 과다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며 공급이 과다할 경우 하락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70년대 이래의 석유 가격의 등락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즉 운동해왔던 것이다. 닛잔/비클러 이론은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과다 수요'와 '과다 공급'을 측정할 대리 지표(proxy)로 원유의 재고량의 변동 즉 연간 소비와 연간 생산의 차이의 변동을 살펴본다. 그 결과는 아주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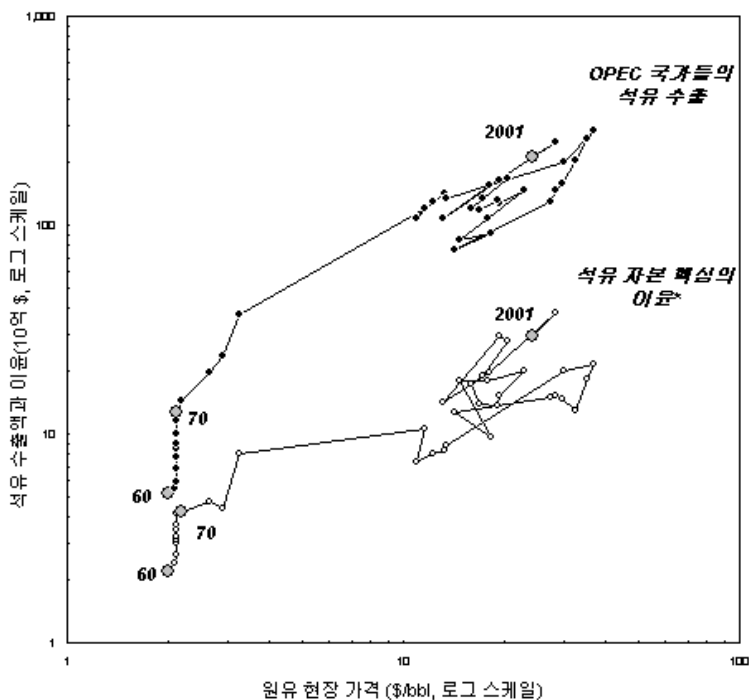
1970년까지는 원유의 경우도 재고량이 증가(즉 과다 공급의 발생)하면 그 가격이 보통 상품이나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1970년 이후 즉 OPEC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는 그 반대가 되어, 재고량의 증감과 원유 가격의 등락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원유는 잘 팔리지도 않아 창고에 계속 쌓이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또 원유가 잘 팔려서 재고가 줄어드

는 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석유는 너무나 핵심적인 자원이라서 수요자들은 현재 시장에서 석유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다. 73년의 석유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중동 지역에 무슨 일인가가 터져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여 혹시라도 생산 중지 혹은 출항 금지(embargo) 등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악몽에 파블로프의 개처럼 길들여진 상태이다. 중동이 조금만 심상치 않다 싶으면 미래의 안정적 석유 확보를 위하여 금새 더 큰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생기게 된다. 산유국이나 석유 기업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고 이 과점체들 사이의 소위 “가격 합의(price consensus)”가 순식간에 더 높은 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석유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는 현재가 아닌 미래 상황에 대한 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수급량과 거의 무관하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닛잔/비클러는, 70년대 이후 현재의 OPEC 석유 레짐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공급 불안 요인이 원유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는 70년대 이후의 수 차에 걸친 중동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유가 인상이 벌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반박하기 힘든 사실이라 볼 수 있다.

2) 원유 가격 등귀의 결과

그림 1.
'자유로운 흐름'에서 '제한된 흐름'으로: 석유 가격, 수출, 이윤

* 석유 자본 핵심은 British Petroleum (1998 이후 BP-Amoco), Chevron (2001 이후 ChevronTexaco), Exxon (1998 이후 ExxonMobil), Mobil (1998년 Exxon과 합병), Royal-Dutch/Shell and Texaco (2001년 Chevron과 합병).
출처: IMF through WEFA-DRI;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Fort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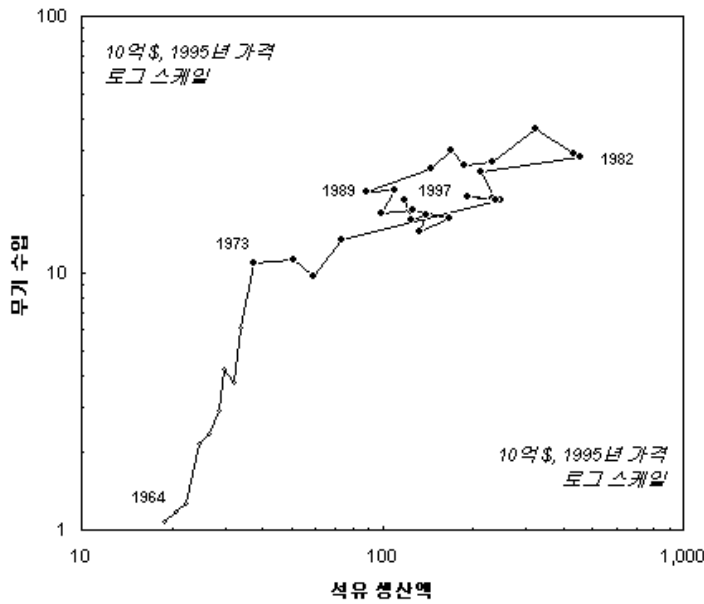
[그림 1]은 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석유 레짐이 “자유로운 흐름(free flow)”에서 “제한된 흐름(limited flow)”으로 극적인 변화를 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70년대 이전까지 원유 가격은 조금씩 하락했지만(그림은 'spot price'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서 멈춰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인한 수요의 확대에 힘입어 산유국 원유 수출량은 계속 증가하였고 석유 자본 핵심의 이윤도 계속 늘었다. 그러다가 70년대가 지나게 되면 석유 자본 핵심의 이윤이 증대되는 주요 메카니즘은 원유 가격 인상으로 변한다. 또 앞에서 말한 “불안” 요인 때문에, 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산유국 수출량은 증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그림에서의 원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되는 계기는 예외없이 중동 지역의 군사 분쟁이었음을 상기해보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지극히 낮은 석유 산업의 특성상 산유국과 석유 기업의 이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가격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지역에서의 갈등이 원유 가격을 매개로 하여 산유국의 석유 판매 수입과 석유 기업의 이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원유 수출 증대 → 무기 수입

이번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의 연관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를 알아볼 차례이다. 즉, 정말로 OPEC 국가

들의 석유 수출로 인한 소득 증대가 생기면 더 많은 무기의 구입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2.
중동 지역의 석유 판매 소득과 무기 수입

주의: 석유 생산액은 총 산출량과 원유의 세계 양도 가격(spot price)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양쪽 수치 모두 미국의 잠재적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출처: British Petroleum (Annual). U.S.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Agency (Annual). U.S. Department of Commerce through WEFA-DRI.

이 그림은 해당 년도의 무기 수입액과 그 3년전의 석유 판매 수입의 관계가 어떠한 추이를 갖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무기 거래는 보통 계약에서 현물 인도가 벌어질 때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 이 그림의 무기 수입액은 현물 인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석유 판매액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그림에서도 70년대를 전후한 OPEC 석유 레짐으로의 구조적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간단한 회귀 분석을 해보면, 73년 이전에는 석유 판매 수입이 1% 증가할 때마다 무기 수입이 3.3%씩 증가했음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반응도가 0.4%로 떨어지게 된다. 73년 이전에는 석유 판매 수입의 액수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무기 구입에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73년 이후에는 절대적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그래프의 양축이 로가리듬 스케일로 그려져 있음을 주의하라), 그 중 국내의 각종 건설 공사라든가 또 외국 금융 기관에의 자금 유치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급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실로 인상적인 것은, 이 석유 판매 수입의 증감과 무기 수입액의 증감의 관계가 거의 선형(linear)에 가까운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이다. 실로 73년 이후로는, 어느 한 쪽의 수치만 알아도 다른 쪽의 수치를 대충 계산할 수 있을 지경이다! (다시 한번, 로가리듬 스케일로 그려졌음을 상기하자.) 이는 무기 산업의 실정을 생각해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닛잔/비클러의 지적이다.

무기의 거래에는 수많은 외적 환경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 몇 개만 언급해보아도, 냉전 당시였으니 미 소 양대국의 지역 정책과 허가, 국내 무기 산업의 발전, 지역 분쟁의 고조,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관한 한, 무기 수입액은 석유 판매 수입과 거의 선형의 비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니, 오히려 그렇게 수많은 '외적' 요인들이 거꾸로 이러한 군수 자본의 이익의 결과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양 방향으로의 연관관계를 밝혀놓아도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과연 그 집단들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구나'하는 연관 관계 이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인 것이다. 연관관계는 분명코 '인과관계'와는 다르다. 이 지역의 군사 분쟁이 늘고 원유가격이 오르면 미국 군수 자본 석유 자본이 이익을 본다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과, 그 지역의 군사 분쟁은 그 군수 – 석유 자본 동맹이 좌우하는 이 지역의 미국 외교 정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코 다른 느낌이니까. 그런데 필자는 앞 장에서 분명히 'CIA의 총탄' 운운 하면서 대담하게도 후자의 가능성을 암시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것을 증명하려면, 인과관계의 방향이 군수 – 석유 자본의 행위에서 중동 분쟁의 발생으로 향하도록 한 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닛잔/비클러도 바로 이러한 방향의 실증 조사를 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실로 괄목하지 않을 수 없는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하자.

추기

이 연재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죠나단 닛잔(Jonathan Nitzan) 교수와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의 연구 성과로 돌려야 한다. 필자는 단지 그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본문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은 모두 그 두 사람의 성과물이다. 물론 소개하는 과정에서의 실수와 착오는 모두 필자의 몫이다. 그들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아카이브에서 원문으로 구해볼 수 있다.

http://www.bnarchives.net

참고할만한 닛잔, 비클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ringing capital accumulation back in: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military contractors, oil companies and Middle East 'energy conflict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3), 1995.

Ch. 5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2002)

관련 링크 (http://www.bnarchives.net)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8> II. 보데의 법칙? ④

2003-05-28 오전 8:48:29

II. 보데의 법칙? : 무기-석유 연합의 "차등적" 이윤율과 중동의 분쟁

④ 분쟁 발생의 '보데의 법칙'

베트남 전쟁을 야기시킨 소위 '통킹만 사건'은 사건 당시에 이미 북베트남의 도발이 아닌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으나, 실제 그것이 밝혀진 것은 수십년 후 정부 문서의 보안이 해제된 후에나 가능했다고 한다. 군수 – 석유 자본 동맹과 중동의 분쟁 사이에 인과 관계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이는 통킹만 사건 정도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숨어있는 종류의 일일 것이다. 따라서 증빙없는 '음모 이론'을 넘어 이를 '논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닛잔/비클러는 기업 행동의 자본 축적이라는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 그 두 가지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추론을 행하는데, 이는 곧 보겠지만 실로 천문학의 보데의 법칙에 맞먹는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다.

1. 보데의 법칙

1772년 베를린 천문대의 천문학자 보데(J.E.Bode)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과 태양의 거리에 일정한 수적 규칙성이 존재함을 발표하였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1(1천문단위=1 AU)로 잡았을 때, 수성에서 토성에 이르는 행성들의 거리 d는 $d=0.4+(0.3\times2^n)$ 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행성인 수성에는 n에 -∞, 금성에는 n에 0, 지구에는 n에 1을 집어넣고...하면 다음과 같은 수열을 얻는데, 이를 각 행성의 태양으로부터의 실제 거리와 비교하기 바란다.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	목성	토성	?
수열	0.4	0.7	1	1.6	2.8	5.2	10	19.6
실제거리(AU)	0.39	0.72	1	1.52	2.65	5.2	9.57	19.28

위의 등식으로 도출된 수열과 각 행성의 실제 거리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것이 그 발표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놀랄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781년 천문학자 허셜은 이 보데의 법칙에 근거하여 태양으로부터 19.6의 거리에 또 하나의 행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하에 열심히 그 근처를 뒤진 결과, 아니나다를까 바로 그 근방에서 천왕성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빈틈도 천문학자들이 그냥 두었을리 없다. 그 근처에서도 또 아니나다를까 1801년 피아찌가 가장 큰 소행성인 세레스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화성 사이에 흩어져있는 무수한 소행성들이 옛날에는 그 자리에 하나의 온전한 행성으로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이 보데의 법칙을 보고 나면 "우주는 기본적인 수리적 질서로 구성되어있다"는 피타고라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피타고라스적인" 질서는 그야말로 저 천상의 물리적 세계에나 발견되는 것이지, 이 인간 중생들과 사바 세계를 다루는 사회 과학에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온갖 수식과 측량 기법으로 날을 지새우는 근대 경제학도 또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총동원하는 현대 주식시장 분석 기법도 보데의 법칙은 커녕 형편없이 빗나가기 일쑤이다. 주가 동향 패턴의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이들이 운영하던 펀드가 처절하게 파산하던 일이 기억에 새롭다.

그런데 닛잔/비클러 이론은 석유 자본의 이윤율 추이와 중동에서의 군사 분쟁 발 생 사이에 이 보데의 법칙에 버금가는 규칙성을 찾아내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기에 도저히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관계의 규명에 접근했을까? 이들의 가설과 그 전제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2. 군수-석유 자본 연합과 '차등화 축적'

1) 전제 1: 중동 분쟁의 발발은 주로 석유 자본 쪽의 이윤율 동향이 결정한다

앞 장에서 본 갈등 발생 – 유가 인상 – 산유국과 석유 자본 이익 증대 – 산유국 무기 수입 증가 – 갈등 발생이라는 악순환(이익 당자자들에게는 호순환)의 고리가 군수-석유 자본 연합에 의해 정말로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이려면, 그 각각의 분쟁이 발생하는 특수한 시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어째서 지난 기간 발생한 각각의 분쟁들이 '하필이면 그 때 터졌는가'에 대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군수-석유 자본 입장에서 보면 아예 중동 지역이 항시적인 전쟁 상태에 휘말려 위의 악(호)순환의 고리가 일상적인 상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이 지역에서의 분쟁을 만들어 낼 결정적 영향력을 쥐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일상적 전쟁 상태'가 벌어지는 쪽이 더 설득력을 높일 것이다.

그런데 70년대 이래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악(호)순환의 고리가 나선형으로 계속 팽창해올 정도의 항시적 전쟁 상태에까지 시달린 것도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위태로운 평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순식간에 분쟁이 확산되는 간헐적인 패턴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군수-석유 자본이 그렇게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어째서 그러한 평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도록 '허락'하는 것일까. 또 그러다가 갑자기 '분쟁'이 터져나오는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여기서 닛잔/비클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착목한다. 계속 무기를 수출해야 할 군수 자본 입장에서는 그러한 항시적 전쟁 상태를 선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석유 자본 입장에서는 그다지 간단하지가 않다. 첫째, 석유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가 만성적으로 계속될 경우 세계 곳곳에서 대체 에너지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고, 또 '하류(downstream)'에서 이 산업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둘째, 이 70년대 이후의 OPEC 석유 레짐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대부분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산유국들과 군수-석유 자본 연합이라는 몇몇 과점체들의 합의와 공동 이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제도적으로 대단히 취약하다. 만약 중동의 분쟁과 갈등이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되면 – 클라우제비쯔가 말하는 전쟁 상태에서의 '폭력의 가속도(escalation)'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 그러한 전체 석유 레짐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결국 군수 자본 쪽과는 달리 이 석유 자본 핵심 쪽에서 보면, 갈등과 분쟁으로 석유 가격이 가끔 뛰어주어야 하지만 파괴적으로 치닫는 항시적 전쟁 상태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너무 뜨거우면 밥이 타고 너무 미지근하면 죽이 된다(not too hot, not too cold)'는 원칙으로 이 지역의 갈등 정도를 조정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서 닛잔/비클러는 이 석유 자본 핵심 쪽의 동향과 의사가 이 지역의 갈등이 터지는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가정을 제시한다. 즉 항상 갈등 분쟁에 이익을 갖는 군수 자본 쪽에 이들 석유 자본 쪽이 호응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군수-석유 자본 연합이 움직이게 되고 중동 사태가 터지게 된다는 가정이다.

그렇다면 석유 자본 핵심 기업들이 그러한 갈등 발생을 원하게 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 기업들의 이윤 확대를 통한 자본 축적의 논리일 것이다. 이제 닛잔/비클러의 두 번째 전제가 나올 차례이다.

2) 전제 2 : 기업의 행동 원리는 '차등화 축적'이다

현대 기업의 행동은 어떤 원리에 의해 좌우되는가. 1백년이 넘도록 미시경제학 교과서는 '이윤 극대화'라는 답을 주고 있다. 즉 기업들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수요곡선과의 만남에서 가격을 결정"함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의 이윤을 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이 이론이 "가을날 동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35원 27전의 한계 비용과 36원 11전의 한계 수입"같은 계산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이윤을 얻는 그런 기업은 현실에 없다는 비판이 이미 1930년대 부터 나온 바 있다. 게다가 이론적 허구에 불과한 완전 경쟁 시장이나 단일 독점이 아닌, 현실 세계에 더 보편적인 '과점 상황'에서는 제약 조건마저 사라져 이론적으로조차 그 '극대 이윤'을 계산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기업 행동을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목표 수익률(target rate of return)"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현실 세계의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먼저 '목표 수익률(target rate of return)'을 설정해놓고 시장 현황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한뒤 거기에 맞춰 단가를 설정하는 "원가 산정 가격 설정(mark-up pricing)"이 훨씬 더 보편적인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문제가 남는다. 그 기업들의 '목표 수익률'을 결정하는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닛잔과 비클러는 여기에 "차등화 축적 이론(theory of differential accumulation)"을 대답으로 제시한다. 스미스, 리카도 이래 신고전파와 마르크스 경제학에 공유되고 있는 "평균 이윤율"의 신화에서 벗어난다면, 크고 작은 자본 사이에는 뚜렷한 위계가 있으며, 그 각각의 층위에서 규범적(normal)이라고 생각되는 수익률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며 책정하는 목표 수익률과 옆집 아

저씨가 비디오가게를 열면서 책정하는 목표 수익률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학급에서 15등 주변을 맴도는 학생은 전교 1, 2등하는 아이들에게 경쟁의식 느끼지 않는다. 좀 닿기 힘든 하늘 같은 존재이니, 괜히 그런 아이들과 같이 도시락 먹어보고 참고서 따라 구입해봐야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대신 학급 10등권 진입을 목표로 애쓰고 있는 자기 주변의 아이들과의 경쟁에 더 신경을 쏟는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쉬는 시간마다 은근히 다가와서 "너 몇 개 틀렸냐"고 물어보는 대상은 1, 2등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 야코만 죽는다 – 그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며, 거기에서 자신이 한 두개 더 맞고 틀렸음을 확인하고 홀로 돌아서서 울고 웃는다.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은 이 위계에서 스스로가 경쟁 상대로 삼는 기업군을 설정하고, 그 기업군 전체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삼아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벤치마크로 삼는 집단의 '평균을 능가(beating the average)'하여 자신을 그 집단에서 '차등화' 시키는 것이 실제 기업들의 행동 원칙이 된다는 것이다.

닛잔/비클러는 이 '차등화 축적 이론'이 특히 커다란 독점력을 행사하는 대자본들 즉 '지배적 자본(dominant capital)'의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앞장에서 군수 자본 핵심이나 석유 자본 핵심의 성장을 포춘 (Fortune)지가 선정하는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과 견주어 설명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즉, 이러한 '지배적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벤치마크로 설정할만한 대상인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항상 능가하는 것이 축적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이다.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도 이 벤치마크의 방법을 쓰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번 중간고사 영어 시험이 끔찍하게 어려워, 평소에 100점 맞던 전교 1등 아이조차 3개나 틀렸으며 자신의 실적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아이는 각 반을 돌면서 평소 그래도 자신에게 도전해 오던 7반 반장 3반 반장 등에게 슬쩍 물어보아 이들이 5개 7개 씩 틀렸음을 확인한 뒤에야 안심한다. 한마디로 1개 학급을 초월하는 '초국적' 벤치마크를 나름대로 쓰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경험이 전무한 필자로서는 다 들은 이야기지만.

이 '차등화 축적 이론'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귀결은, 지배적 자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익률 자체보다, 이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과의 상대적 비교라는 것이다. 즉 경제가 불황이 된다든가 하여 수익률 자체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포춘 500대 기업의 수익률이 더 큰 속도로 떨어질 경우엔 성공적인 '차등화 축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수익률 자체는 올라갈지라도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차등화 축적'에 실패하고 있는 셈이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비상 수단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수능 시험도 모의고사도 그 난이도는 항상 들쭉날쭉하니까 성적의 숫자 자체로 크게 울고 웃지 않는다. 항상 "내가 저 녀석들 보다는 그래도 한 수 위다"고 만만히 여겼던 집단의 성적과 맞먹거나 오히려 쳐지게 되었을 때, 그때가 눈에 쌍심지 빨간 불이 켜지는 순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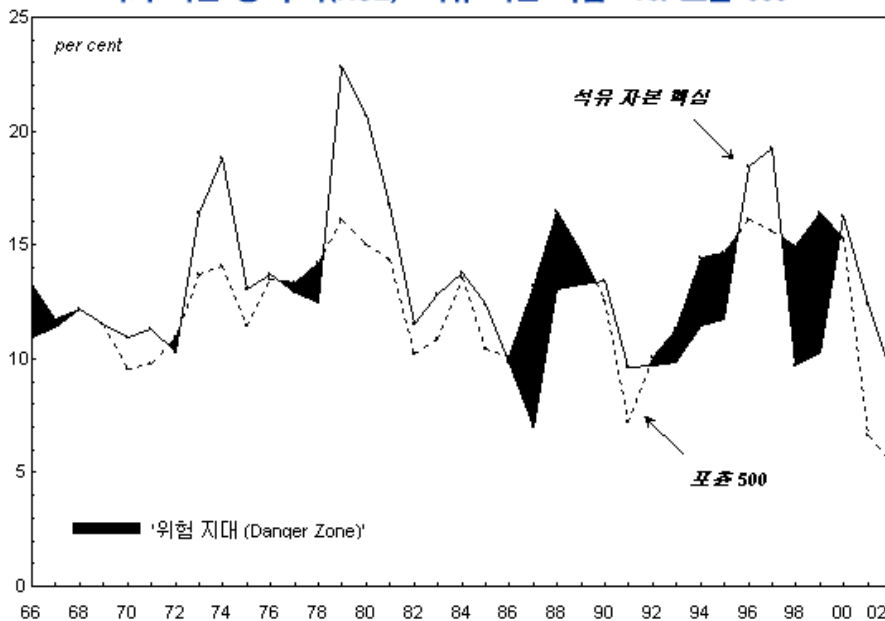
(물론 닛잔/비클러의 차등화 축적 이론은 지금 이렇게 간단히 설명한 것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닛잔과 비클러, 홍기빈 역, [자본 축적과 지구 정치 경제의 변형(가제)](삼인 출판사, 근간)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중동 분쟁의 발생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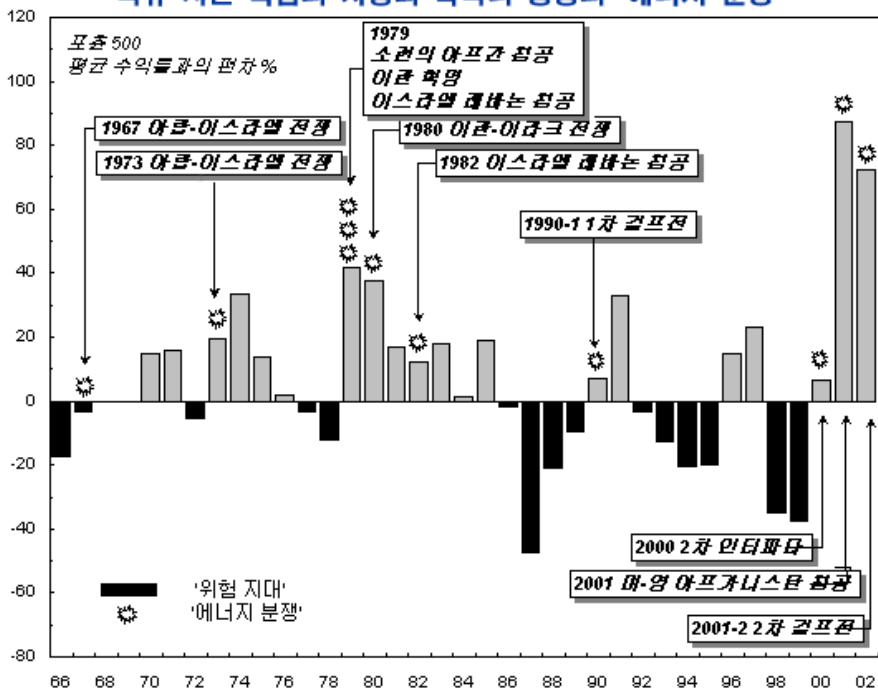
이제 위의 두 가지 전제를 종합하여 실증적 연구로 검증할 가설을 구성해본다.

"석유 자본의 '차등화 축적'이 위기에 처할 때 즉 포춘 500 대 기업의 평균적 수익률보다 뒤떨어지는 시점에는 반드시 중동 지역에 군사 분쟁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먼저 포춘 500대 기업과 석유 자본 핵심의 수익률(return on equity) 비교를 보도록 하자.

[그림1]

* 석유 자본 핵심은 British Petroleum (1998 이후 BP-Amoco), Chevron (2001 이후 ChevronTexaco), Exxon (1998 이후 ExxonMobil), Mobil (1998년 Exxon과 합병), Royal-Dutch/Shell and Texaco (2001년 Chevron과 합병).
주의: 1992–93의 포츈 500 자료는 SFAS 106 special charge가 들어있지 않다.
출처: Fortune; Standard & Poor's Compustat.

실선으로 그려진 석유 자본 핵심의 수익률이 점선으로 그려진 포춘 500 평균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곧 석유 자본 핵심의 차등화 축적이 위기에 처하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인지라, '위험 지대'로 까맣게 칠해져 있다. 닛잔/비클러의 가설이 옳다면, 이 '위험 지대'의 끝 부분 쯤에는 반드시 무언가 군사 분쟁이 중동에 터져야 할 것이다. 드디어 그 점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

[그림2]

* 석유 자본 핵심은 British Petroleum (1998 이후 BP-Amoco), Chevron (2001 이후 ChevronTexaco), Exxon (1998 이후 ExxonMobil), Mobil 1998 년 Exxon과 합병), Royal-Dutch/Shell and Texaco (2001년 Chevron과 합병).
주의: 1992–93의 Fortune 500 자료에는 SFAS 106 special charge가 들어있지 않다.
출처: *Fortune;* Standard & Poor's Compustat.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 그림에서는 비교가 쉽도록 '위험 지대'가 가로축 아래로 뻗은 까만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 시간적으로나 정도에 있어서나 중요하지 않은 96년의 예외를 제외하면, 석유 자본 핵심의 차등화 축적이 '위험 지대'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중동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들의 수익률은 그 즉시 높은 차이로 포춘 500의 수익률을 따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 그래프의 규칙성에 대해 괄목할만한 점이 또 하나 있다. 이는 그냥 단순한 수익률의 증감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석유 자본 핵심이 수익률 떨어지니 무언가 일을 벌인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의 단순한 수익률은 갈등 발생 시점과 별 관련이 없다. 67년과 90년의 갈등은 이들의 이윤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 벌어졌고, 이들의 이윤률이 떨어졌던 직후인 69-70년, 76년, 88년에는 아무런 분쟁도 벌어지지 않았다. 맨눈으로 직접 관찰되지 않는 포춘 500대 기업과의 '차등적' 수익률이 떨어질 때에만 갈등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실로 보데의 법칙에 필적하는 규칙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도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수학이나 통계학에 능하신 분들은 한 번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저 11개의 사건을 그래프위에 무작위로 배치하였을 때 바로 저렇게 '위험 지대'의 끝 무렵에만 모여설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즉 저 그래프가 아무런 내적 규칙성도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진한 '오비이락'에 불과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4. '위험 지대' 그래프의 음미: 한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온 어느 유학생이 처음으로 이 닛잔/비클러의 연구에 접한 것은 1999년이었다. 그는 이 그래프를 보고 난 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또 거꾸로 솟는 피를 가누지 못하고 한참 씩씩 거리다가 심장에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급하게 된 그 유학생은 객지의 비명횡사라는 불효를 면하고자, "너무 그럴듯해서 믿을 수 없다. 현대 세계 경제가 무슨 칼부림 투전판도 아니고. 그냥 우연이거나 닛잔/비클러라는 통계 기술자들의 현란한 눈속임일 것이다"고 마음을 달래어 겨우 냉정을 되찾았었다. 과연 그랬다. 그가 읽은 닛잔/비클러의 95년 논문에 실린 이 '위험 지대' 그래프는 92년까지의 상황만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석유 자본 핵심의 차등적 수익률이 91년 이래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음에도, 냉전 이후 지구화의 평화를 누리던 90년대 내내 이렇다 할 중동의 분쟁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99년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그 유학생은 "그것 봐. 이거 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사후적으로 그럴 듯하게 꾸며 맞춘 이야기야. 당장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되잖아"라고 생각하며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보데의 법칙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천왕성, 소행성이 그 법칙이 예언한 위치에서 그대로 발견이 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고, 심장마비의 위협도 다시 떠오른다. 조나단 닛잔 교수는 99년 당시 위와 같은 그 한국 유학생의 항변에 대해 몇 가지 사실만을 지적할 뿐 별로 강한 주장은 않았으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무언가 터질 때가 임박했다는 점, 또 석유 자본 핵심의 차등화 축적 위기가 10년씩 계속되도록 탈냉전 세계가 구조적 변화를 겪은 이상 그 당면한 군사 분쟁과 그로 인한 석유 자본의 차등화 축적도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규모가 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실린 [그림 2] 는 최근 까지의 추이를 업데이트하여 사흘전 조나단 닛잔 교수가 그 유학생에게 보내준 그래프이다. 2000년 이후를 보면, 정말로 "천왕성과 소행성이 예언한 자리에 그대로 있다". 나아가 닛잔 교수가 암시한 대로, 이 기간에 벌어진 갈등의 성격과 규모는 그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 지역 세력들간의 군사 분쟁 수준이었던 그 이전에 비해 9.11 이후 현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직접 뛰어들어 "민주주의 도미노"운운하며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려들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나게 되는 석유 자본 핵심 차등화 축적의 폭에 또한 주목하라. 70년대 두 차례의 큰 석유 위기 때의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고 있다. 이들의 수익률은 최근 2년간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거의 2배 가깝게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망갈 구멍을 잃어 버린 불행한 그 유학생은 다시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전 처럼 무작정 씩씩거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 2002년 후반 이후 군수-석유 자본과 긴밀히 결합된 백악관의 보수강경파들이 한반도에 대한 긴장 고조를 시작하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아직도 위정자 이하 많은 이들이 "절대적 한미 공조만이 북한의 전쟁 책동을 막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활로"임을 의심치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연히 심장 움켜쥐고 씩씩거리는 대신, 한국에 좀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토론이 벌어지도록 부족한 능력이나마 털어놓아 이 '위험지대' 그래프와 같은 실상을 좀 더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필자도 잘되기를 빈다.

5. 초국적인 '지배적 자본'을 정면으로 직시하자

그렇다면 정말 그 소름끼치는 가능성, "미국의 군수-석유 자본 연합이 70년대 이래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중동의 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는 실로 원단 '음모이론'과 같은 이 주장이 사실이란 말인가? 필자도 모른다. 필자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바는, '석유 자본 핵심의 수익률이 포춘 500 평균에 떨어질 때마다 거의 항상 무언가 터진다'는 이 '위험 지대'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fact)이다. 이 사실에 어떤 인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물론 임의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다. 누가 아는가? 석유 자본 핵심의 차등화 축적이 저조하게 되면 태양의 흑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중동 사람들의 심리에 작용하여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차등화 축적이 저조하면 여자들의 치마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사

회적으로 더욱 억압된 리비도가 전쟁으로 분출한다…등등등.

하지만 옥캄의 면도날(Okham's razor)의 지혜에 근거해보자. "불필요한 존재를 설정하여 설명하지 마라" 혹은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 진리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 태양의 흑점이나 치마 길이 또 그 밖의 어떤 것을 굳이 상정할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 닛잔/비클러가 제시하는 가설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현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정확한 예측까지 이루고 있다. 이것을 믿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러한 의혹을 깨끗이 정정당당하게 해소하는 길이 없을까? 있다. 필자는 현대 기업들 특히 아주 규모가 큰 초국적 기업들은 그 장부와 의사 결정 과정 전체를 민주주의적 감시 아래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블렌의 표현대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의 버릇" 하나는 기업은 순수히 경제적 조직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정치가들과 로비나 스캔달 등으로 엮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지난번 엔론 사태 때에 엔론이라는 기업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이윤을 늘려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굵직한 정치적 사회적 책략을 부려왔는지가 드러난 바 있다. 몇 달전 이라크 전쟁이 터지기 전 기자회견 장에서 캐나다 국방성 장관이 "이 이라크 전쟁은 석유 기업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자 기자회견장에 있던 전원이 폭소를 터뜨리던 장면이 기억에 새롭다.

현대의 초국적 대자본들은 이미 함께 빵을 벌어 들이는 집단이라는 의미의 회사(company)가 아니다. 큰 규모의 사회 변동을 수반하는 대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의미의 '한건 조직(enterprise: 이는 어원상 undertaker의 뜻이다)'이며, 주식회사라는 것은 옛날 동인도 회사에서 볼 수 있듯 그러한 한건 조직에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초국적 대자본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생명 공학, 미사일 방위 체제, 위성 방송 등등 뭔가 '한 건' 하겠다는 큰 프로젝트를 들고 나올 때 마다 무수히 많은 이들의 자유, 행복, 안전이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통제할 유일한 고삐인 법적 규제라는 틀은 극히 기본적인 것 밖에는 요구할 수가 없으며, 초일류 법률 회사등으로 무장한 대자본에게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기 일쑤인데다가, 그나마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아예 철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보면 국가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거대 조직들에 민주주의의 기본인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원칙이 거의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은 '산업 기밀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뭉개어지고, 지금도 초국적 대자본의 사업계획에 어떤 것이 오가고 있는지, 또 어떤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크레믈린으로 남아 있다.

정말로 알고 싶고 알아야 하겠다. 초국적 무기 회사들의 장부와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무기 거래는 공명정대하고 어쩔 수 없는 각국의 정당한 '안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번 이라크 전쟁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정에 석유 대자본은 정말 순진무구하게 평화를 비는 마음만으로 집에서 테레비만 보고 있었는지. 이러한 감시 작업을 수행할 만한 국제 기구나 NGO같은 것들이 있어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다.

하지만, 이런 꿈이 실현되지 않고 여전히 세계 자본주의의 대자본들의 전략과 행동이 오리무중으로 가리워져있는 형편이라면, 우리도 막연한 '선의'를 믿으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가능한 지식과 정보와 논리를 동원하여 이 '지배적 자본'에 해당하는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의 지구정치경제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앞길을 주체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닛잔/비클러의 '위험지대' 그래프는 그러한 민중들의 노력에 있어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기

이 연재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죠나단 닛잔(Jonathan Nitzan) 교수와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의 연구 성과로 돌려야 한다. 필자는 단지 그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본문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은 모두 그 두 사람의 성과물이다. 물론 소개하는 과정에서의 실수와 착오는 모두 필자의 몫이다. 그들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아카이브에서 원문으로 구해볼 수 있다.

http://www.bnarchives.net

참고할만한 닛잔, 비클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ringing capital accumulation back in: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military contractors, oil companies and Middle East 'energy conflict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3), 1995.

Ch. 5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2002)

관련 링크 (http://www.bnarchives.net)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9> III. 어제의 세계: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①

2003-06-16 오후 5:41:15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II. 어제의 세계: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① 준비 운동1: 왜 "지구 정치 경제"인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학교에서 또 공식적인 매체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투명하고 평화적인 것일까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혹자는 중동의 에너지 위기와 군사 분쟁은 그 엄청난 숫자의 달러와 인명에도 불구하고 "일개"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화"를 근거로 하여 지구 정치 경제 전체의 성격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시야를 좀 더 큰 차원으로 돌려 그 지구 정치 경제의 "구조" 자체에 대해 이야기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이 3부에서는 지난 20년간 지구 위의 정치 경제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왔던 "지구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 첫 순서로 이번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우리의 인습적 사고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국내/국제, 정치/경제의 이분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구 정치 경제"라는 대안적인 사고틀을 살펴본다. 다음에는 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특이성을 음미하기 위한 준비로, 19세기 이래의 세계 경제의 역사를 그 "지구 정치 경제"의 틀로 간단하게 재구성해본다. 딱딱하고 지루하더라도 이번 한번만 꾹 참아 주시기를.

1. 두 개의 이분법: 정치와 경제의 분리, 국내와 국제의 분리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미국의 군수 – 석유 자본 동맹은 미국 국내의 정치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정치와 경제의 구별에 전혀 구애됨 없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universal) 조자룡 헌창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대학에서 가르쳐지는 사회 과학의 상식과 통념에 익숙해있는 식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닛잔/비클러의 인도를 따라 살펴보았던 이야기는 당혹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 분명히, 아직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공식적"인 사회 과학의 편제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정치학은 다시 각국의 국내 정치를 다루는 "비교 정치학"과 그 나라들의 외교 관계를 다루는 "국제 관계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경제학도 거시 경제학에서 연구되는 "국민 경제"의 연구와 그 국민 경제들 간의 거래로 구성되는 "국제 경제"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학과 조차 무역학과로 독립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데 과연 이 국내/국제, 정치/경제를 분리시키는 두 개의 이분법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연적인 진리일까? 서양 사회 사상사를 살펴보면 자연적인 진리이기는커녕 멀어봐야 200년 전인 19세기 초에야 비로소 생겨난 사고 방식이며, 그것이 정치학 국제 관계론 경제학 사회학식으로 칼같이 나누어진 학제의 제도로 굳어진 것은 불과 50년 남짓한 2차 대전 이후의 미국 대학이었음을 알게 된다. 18세기의 사회이론가들인 루소, 칸트의 저작에서는 당시 유럽 각국의 국내 정치 구조와 국제 체제의 성격을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학도 그 원래 이름이었던 '정치 경제학(political economy)'이 암시하듯이, 18세기까지만해도 오로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행위의 하나로서 사고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산업 혁명의 여파로 유럽 사회 사상사에는 큰 변동이 생겨나게 된다. 산업화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말미암은 그 당시의 급격한 사회 변동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실로 심대한 도전을 던지게 되었다. 기존에 사회에 대한 논의를 끌어 안던 신학, 윤리학, 기껏해야 정치학 법학 등의 당위적 수준에서의 틀로는 상황을 뚫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였다. 그 대안적인 접근으로 드디어 사회학을 필두로 하여 '과학'으로서의 '사회 과학'이 태어나게 된다. 프랑스의 오귀스뜨 꽁뜨(Auguste Comte) 이래 시작된 사회학의 모토는, 인간 세상을 '사회'를 하나의 독자적 작동 메카니즘을 갖는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 과학'은 그 기원부터 주어진 사회를 하나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정치와 경제가 각각 독자의 메카니즘을 갖는 분리된 영역이라는 사고 방식도 19세기 초의 데이비드 리카

도 토마스 맬서스 이전으로 거슬러 가기 힘들고, 무리를 한대봐야 18세기 중반 프랑스의 중농주의자(Physiocrats) 정도에 소급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당대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사고 방식을 대단히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도 물론이다. 산업화란 대규모 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 가장 기본적인 투입 요소인 사람, 자연, 화폐마저 상품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었다. 즉,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표현대로 '자기 조정 시장(self-regulating market)으로 전 경제를 조직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시장은 '독자적' 메카니즘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었고, 리카도 이후의 경제학은 온통 그 '독자적' 법칙의 발견을 목표로 발전해왔다고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현대 사회 과학의 또 평범한 식자들의 통념적 사고방식이 생겨난다. 즉, 인간 세계는 먼저 독자적인 작동 메카니즘이 내장된 독자적 단위인 '국가 사회'로 구성된다. 물론 그 사회들은 서로 관계를 맺지만 이는 당구공의 충돌과 같이 어디까지나 그 자신들의 메카니즘에 '외적인' 것뿐이다. 또한, 그 사회 내부도 각각의 기능에 따라 정치, 경제 등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그 하나하나의 영역은 또다시 독자적인 작동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란 권력을 목표로 하여 인간들이 빚어내는 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되며, '경제'란 부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되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합리성과 행동 원칙이 작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세계는 국내/국제, 정치/경제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미국 사회학의 거장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이론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 과학에 끼친 파슨스의 영향은 그의 저작과 이론을 통해서만 행사된 것이 아니었다. 2차 대전 후 벌어진 냉전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자신의 패권 하에 소위 '자유 진영'을 설계할 구체적 정책과 기술을 제공할 조직적인 연구의 제도와 방법론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비판적 지식인의 온상이 되어 반체제적 비판 이론을 쏟아내던 대학의 사회 과학 학과들을 그러한 '사회 공학'의 기술을 연구하는 틀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작업의 한 가운데에 서있던 인물이 바로 파슨스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의 그러한 사회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 비교 정치학, 국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등으로 갈라진 학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유럽의 대학에는 아직도 그러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2차 대전 이전의 학제의 전통이 남아있으나, 미국 대학의 압도적인 세계적 지배력에 밀려 점차 동화되어 온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의 지적 식민지에 가까운 우리 나라의 상황은 더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현실 세계로**:** 구조 변형과 자본 축적

이러한 이분법은 분명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인간 세상을 깔끔하게 정리된 네 가지 종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데에 큰 위력이 있다. 엉킬대로 엉킨 실타래를 꼭 다 풀어내야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아무데나 필요한 길이만큼 잡아당겨 가위로 뚝 잘라내어도 예쁜 자수를 짓는 데에는 손색이 없다. 마찬가지다. 그 네 가지 영역 모두에 정통하고 나아가 그 연관 관계까지 이론화하여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엉킨 실타래를 모두 푸는 것 이상으로 피곤한 일이다. 그냥 불량식품 '뽑기' 찍어내듯이 현실에다 그 국내, 국제, 정치, 경제라는 네 가지 영역의 틀을 찍어서 걸려드는 소재들만 가지고도 각각의 틀 안에서 깔끔하게 앞뒤 맞는 설명은 얼마든지 짜낼 수 있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19세기 이래 정치학 경제학 등등의 이론적 발전이라는 것도 그렇게 그 '하나의 틀'만 가지고도 훌륭하게 완결적인 설명을 지어내는 매뉴얼을 발전시켜 온 것에 다름 아니다. 되레 공연히 실타래를 풀어본답시고 그 틀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현실을 헤매다가 그런 '깔끔한' 설명에 실패하는 날엔 같은 학계의 동료들 스승들에게서 썰렁한 반응을 얻기 십상이다. 뭐 진리와 인류를 위해 희생당할 일 있는가. 괜히 잘못 덤벼들다간 칼 마르크스마냥 인생 파탄나고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그냥 조용히 교수 자리 얻고 승진하고 학계의 존경을 얻으며 늙어가는데에 뭐하러 그런 거추장스런 "소잡는 칼"을 쓰겠는가. 그래서 세계의 대학에서는 그 "닭잡는 칼"로 조각한 "깔끔한" 설명이 오늘도 소복소복 쌓여만 간다.

그러한 분리가 꼭 현실을 왜곡하라는 법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들 전부가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고민하는 큰 질문들은 모조리 그 틀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것뿐이다. 사회의 문제들은 대부분 그 실타래의 "꼬여있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네 가지 영역에서 "자신들의 연구 영역이 아니다"라고 서로 미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논문들은 상아탑의 무궁한 발전과 교수 자격 취득자를 양산하는 것 이외에 그렇게 꼬여있는 문제들로 고민하는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

인간 세계의 실타래가 왜 꼬이게 되는가 생각해보자. 인간 세상의 현실이 구성되는 데에는 오늘도 자연과 다른 인간과 교호하며 '삶'을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행동과 관계 즉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생산'이 그 '씨줄'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씨줄'을 차지하여 뜻대로 조종하고 재구성하려드는 인간 집단이 또한 존재하는 바, 그들의 그러한 행동 즉 '지배'가 '날줄'이 되어 또한 사회를 구성한다.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는 그 씨줄과 날줄이 칭칭 엮이고 꼬이고 때로 풀리고 하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배 집단들이 스스로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벌이는 그 모든 행위, 또 거기에 양떼처럼 이리저리 몰리면서도 고단한 하루를 이어가려고 힘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 씨줄 날줄의 파노라마야말로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네 가지 영역 중 어디에서 다루게 되는가?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지배 집단'의 주업인 권력 확장은 결코 그 네 가지 영역 어디에 제한되어 계획되지도 실행되지도 않는 것이다. '신의 계획에 지옥 연옥 천상의 구별이 없'듯이, 이들의 계획과 전략에도 그 네 가지 영역은 구별되지 않는다.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의 예만 들어보자.

1) 구조 변형(structural transformation)

강대국등의 강력한 지배 집단들의 활동 덕분에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사태 하나는 세계 체제의 구조 변형이다. 이렇게 기존의 세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순간에 국내/국제 또 정치/경제라는 구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됐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야말로 지구적 규모에서의 구조 변형을 겪고 있는 혼란의 시기라고 수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에 겪었던 공산권의 몰락과 아시아 금융 위기라는 두 가지 사례만 생각해보자. 이 두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실로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충격과 영향을 던졌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왜 벌어졌는가? 누가 일으킨 것인가?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어떠한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네 가지 영역 하나에 머무는 '전문가'들에게서 지금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이상의 속시원한 총체적 대답이 나온 적이 있던가?

오늘도 세계는 어디론가 어지러운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알려주는 이는 적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불안하다.

2) 자본 축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 축적은 절대로 몇 몇 개인의 '경제적' 행위 차원으로 머물지 않는다. 첫째, 권력의 축적이라는 것은 역사 이래 지배 집단의 주요 사업이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은 그 권력의 축적이 거의 항상 자본의 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는 전체 경제 공동체의 작동이 자본 투자의 정도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겨놓은 체제이다. 그리고 그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본 축적'의 전망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결정된다. 셋째, 자본 축적은 '국경을 모른다'. 즉 국내/국제라는 틀은 자본 축적에 이용 가치가 있는 제도적 틀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두는 틀은 되지 못한다. 즉,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본 축적이라는 현상은 현실 세계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적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화"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곳곳의 빈곤, 재난, 전쟁과 내란의 소식을 듣는다. 다른 한 편 눈이 빙빙돌아 메스꺼울 정도의 숫자로 부가 축적되고 있는 소식을 또한 듣고 있다. 이렇게 미증유의 규모로 벌어지는 자본 축적과 그에 수반된 사회 변동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응시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토록 중심적 현실인 이 "지구화" 시대의 자본 축적은 그 네 가지 중 어느 영역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인가?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만큼 이 네 가지의 구별이 터무니 없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워싱턴, 평양, 여의도, 동교동이 복잡하게 얽여드는 대북 송금 특별 검사 수사는 국내적 사안인가 국제적 사안인가? "순수한" 경제 논리를 대변하는 셈인 무디스나 IMF의 발언에 따라 당장 청와대의 대북 대미 정책이 흔들려버리는 우리 나라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3. "지구 정치 경제**"**를 향하여

이러한 학제 구분의 모순은 미국 학계에서도 자각되어, 1970년대 이후 국제 정치학의 일 분과로서 "국제 정치 경제(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라는 학제가 탄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그 두 가지 이분법을 넘어섰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첫째, 정치와 경제의 연구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의 독립을 전제한 상태에서 단지 "시장"의 운동과 "국가"의 행동을 "연결짓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 "국제"라는 말이 암시하듯 아직도 국내 국제를 분리하여 후자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비판적인 일군의 연구자들은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지구" 정치 경제(global political economy)라는 접근법을 제안하여 그 두 가지 이분법을 좀 더 근본적으로 극복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그 네 가지 영역을 근본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그 네 영역을 연결해주는 현실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의 중심에 놓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든 예로 말하자면 그 실타래의 엉킨 부분 즉, 지배와 생산이 벌어지고 있는 중심으로 바로 뛰어들어 그곳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자는 제안이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학문적으로 정교하게 체계화된 방법론이 나오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현실 세계의 우리에게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얻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가 이미 본 닛잔/비클러의 이론은 그 뛰어난 모범적 작업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들이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80년대 이래 "지구화"의 이름으로 벌어진 신자유주의적 구조 변형과 인수 합병을 통한 자본 축적의 이야기를 그러면 곧 음미해 볼 것이다.

추기

이 연재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죠나단 닛잔(Jonathan Nitzan) 교수와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의 연구 성과로 돌려야 한다. 필자는 단지 그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본문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은 모두 그 두 사람의 성과물이다. 물론 소개하는 과정에서의 실수와 착오는 모두 필자의 몫이다. 그들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아카이브에서 원문으로 구해볼 수 있다.

http://www.bnarchives.net

참고할만한 닛잔, 비클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ringing capital accumulation back in: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military contractors, oil companies and Middle East 'energy conflict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3), 1995.

Ch. 5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2002)

* 필자 홍기빈씨는 정치토론 사이트 '시대소리(www.sidaesori.com)'의 고정 필진으로 활동중이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0> III. 어제의 세계①

2003-06-27 오전 11:42:47

III. 어제의 세계: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① 준비 운동 2: 30분에 읽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역사

저번 글에서 우리는 국내와 국제,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개의 이분법을 넘어서 우리의 미시적인 일상에서 구조 변형과 자본 축적 같은 거시적 현상까지를 하나의 틀에서 보는 "지구 정치 경제"라는 방법을 30분 만에 읽은 바 있다. 이번엔 좀 더 어처구니 없는 짓 즉, 19세기 이래 나타난 지구적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의 역사를 30분만에 훑어보는 일에 도전해보자.

1.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지구 정치 경제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 영국의 지도하에 전 세계는 19세기 초 이래 드디어 지구적 정치 경제 체제라는 미증유의 모험에 도전한다. 이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그 대략적인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인간 노동력과 토지 및 자연 환경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존재들은 정치적 존재 형태와 경제적 존재 형태 사이에 "인격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먼저, 경제적으로 보자면 그 모든 것들은 단순한 "상품"으로 간주되어 화폐를 통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존재로서의 이들은 일정한 국가에 귀속된 공민(citizen)이거나 그 국가의 법적 권력이 적용되는 영토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내와 국제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라는 정치적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국적이란 공민과 영토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상품"으로서의 인간과 자연 환경에 적용될 성격이 아닌 것이다. 이 "상품"들은 자유 무역이 지배하는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이렇게 정치와 경제의 확연한 구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했다. 먼저, "상품"들끼리의 수요 공급으로 스스로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장 경제에 정치 영역을 대표하는 국가 기관이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경제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한 자들이 선거에서 의회나 국가 기관을 점거하여, 노동조합의 허용이나 토지 사용 제약과 같은 각종 규제 조치를 입법하는 경우. 둘째, 국가가 자의적인 재정 팽창을 시행하여 시장 경제의 물자를 마구 징발하는 경우. 셋째, 시장 경제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게 된 화폐의 공급을 국가 기관이 마구 좌우하는 경우.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철저히 금지하는 형태의 국가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19세기 형의 국가 형태가 바로 흔히 말하는 "입헌주의 국가(constitutionalist state)"였다. 먼저 시장 경제에 대해 각종 규제 입법을 강제할 위험이 있는 노동자 농민 등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거나 크게 제한당한다. 또 그들이 국가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헌법(constitution)이 보장한 사유 재산 보호의 틀거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크게 제약 당한다. 또 군주의 임의대로 세수와 재정 규모가 결정되지 않고 의회의 동의하에 다음 해의 정부 예산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균형 재정을 지향하도록 한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세수로 최소한의 활동만을 하는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는 셈이다.

각국의 국내에 이러한 입헌주의 국가가 형성되도록 강제하는 국제 경제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제 금본위제였다. 모든 나라의 화폐는 일정량의 금과 항상 태환되도록 규정한 이 통화제도는 국제적인 통화 가치의 안정을 가져와 자유 무역을 촉진하고 인플레를 억제하는 한편, 국가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할 여지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수출을 통한 금 준비(gold reserve)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를 증발하였다가는 당장 금태환의 압력을 받을 것이다. 또 정부의 재정 팽창은 외환 가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서 또한 금태환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금본위제에 기반한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는 또한 국제적인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는데, 이를 보장할 국제 정치 체제는 바로 소위 세력 균형 체제(balance of power)로 상정되었다. 이는 사실 체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우스운 적나라한 폭력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A, B, C라는 세 개의 주권 국가가 있다고 하자. 이 세 나라 중 어느 하나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되면 나머지 두 나라는 자신들의 존재에 위

협을 느껴 스스로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저절로 동맹을 맺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각자의 주권을 지키려 애쓰는 이 주권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이합집산을 거듭함으로서 큰 전쟁이나 체제 변동이 방지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를 천재적으로 활용하여 독일의 독립을 이룬 이가 바로 비스마르크라고 한다.

네 가지 영역이 이러한 제도와 원리로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세계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2. 제국주의**,** 파시즘**,** 세계 대전

겉으로 보면 이 네 가지 영역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잘 정돈된 것 같은 이 세계는 실제로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사방에서 스멀거리고 있는 체제이기도 했다. 먼저, 이러한 식의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것은 사실상 사회라는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 구성 요소가 되는 인간과 토지 마저도 시장의 횡포에 대책없이 노출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신문에서 간혹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정리해고등을 가능케 하여 노동 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자"라는 식자들의 목소리를 접한다.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실제 인간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를 음미해보자. 정리 해고에 반대하여 지하철, 은행 기타 등등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면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 등등의 언사로 갖은 욕을 퍼붓는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정리 해고될 상황이 왔을 적에 "시장의 위대한 자기 운동을 위해 이 한몸 희생하리라"고 묵묵히 사라질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과연 그러한 주장을 하는 대학의 정치학과 경제학과 교수들은 묵묵히 사라져줄까. 혹시 머리띠라도 두르고서 "고용안정 보장하라"고 농성을 벌이지 않을까.

인간에게 있어 직장과 수입이란 노동 시장 수요 공급 곡선의 데이타이기 이전에 그의 "삶"이요 "존재" 자체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19세기 자유주의적 경제라는 것은 그러한 측면이 완전히 무시되고 철저히 시장의 운동에 그 모든 것들이 종속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시장이라고 용가리 통뼈인가. 그것도 결국 인간들이 만든 제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니 위기에 몰린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수법을 동원하여 시장의 횡포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든다. 이때 그들이 주로 애용하는 수법은, 결국은 국가 기구를 통한 경제에의 개입일 수 밖에 없다. 이리하여 입헌주의 국가라는 원칙은 19세기 말이 되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금본위제라는 압박이 뚜렷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국가 기구와 활동의 팽창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금본위제를 지키면서 그러한 사회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수탈을 지향하는 제국주의적인 경쟁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세력 균형 체제는 이미 유럽 대륙 내부에서의 국가들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민지 분할 재분할의 규모로 발전하게 된다. 이리하여 세력 균형 체제는 위협받고 세계 대전의 위협이 자라나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의 요소를 생각해보자. 인간과 토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존재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된다는 말은 사실 새로운 사회적 권력이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폐야말로 이제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동원할 수 있는 궁극적 권력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즉 일정량의 화폐라는 것은 그것이 동원할 수 있는 만큼의 사회적 관계를 그대로 대표하는(represent), 그야말로 사회 그 자체이다. 이리하여 엄청난 양의 화폐를 축적하는 자본가들 특히 금융 자본가들이 이제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의 소유자로서 대두되게 된다. 시장의 횡포에 이리저리 시달리는 대중들은 이 금융 자본가들에 대한 증오를 키우게 된다.

즉 이 깔끔해보이는 국내 국제 정치 경제의 분리에 근간한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실상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권력의 분배와 재분배를 가져오는 체제였음이 20세기 초가 되었을 때에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였다. 이러한 권력의 분배와 재분배 과정에서 또 그에 맞서는 저항의 과정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지구 정치 경제는 제국주의, 사회주의 혁명, 파시즘 발호, 세계 대전이라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대변형(great transformation)"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 전후의 지구 정치 경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19세기식의 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체제와는 이제 완전히 그 가능성이 소진된 것으로 보였다. 세계 곳곳에 사회주의와 민족 해방 사회 혁명의 물결이 뒤덮고 이었고 그렇지 않은 곳 – 이를테면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 에서도 금본위제에 기반한 세계적 자유 무역은 낡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이러한 냉전 상황에서 "자유 진영"을 재건할 임무를 떠맡은 미국은 그러한 실정에 맞추어서 개방된 자유주의적 지구 정치 경제 질서를 최대한 일구어 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결코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공산화되지 않은 세계의 전 지역을 국내 국제 또 정치 경제 가릴 것 없이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그야말로 "지구적 차원의 변형(global transformation)"이었다.

먼저 "자유 진영"의 각국의 국내 경제는 더 이상 고전적인 자유 방임 시장 경제가 아닌, 노사정 합의에 기반한 국가 계획과 포드주의적 대량 생산에 근거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권고 되었다. 이에 따라

통화체제도 금본위제가 아닌 각국 중앙 은행의 재량에 따르는 관리 통화체제로 바뀌었고, 케인즈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의 경제 개입이 정당화되었다. 국가의 성격도 대폭 변화한다. 선거권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노동 계급 정당이 자본 계급과 함께 참여하는 조합주의적 국가가 나타나서, 다방면에서의 사회 복지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정치 및 경제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 경제 체제의 재편에도 착수해야 했다. 전후 자유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인 GATT는 사실상 세계 시장의 횡포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농업이나 개발 도상국의 유치 산업 등에 대한 보호 관세를 허락하는 각종의 장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특히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는 각국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 정치 경제 체제가 변형되는 데에 필수적인 "통화 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얼핏 보면 달러를 금의 가치에 고정한 후 각국의 통화를 다시 달러에 고정시킨 고정 환율제이므로 19세기 식의 금본위제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제도의 핵심은 첫째 IMF나 세계 은행 등을 통해 단기적 및 구조적인 국제 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달러를 대부하여 금본위제 식의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겪지 않는 것이었고 둘째 각국의 금융 재정 정책의 재량을 위협할만한 국제적인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세기 유럽 국가 간에 남아 있었던 세력 균형 체제는 양차 대전과 식민지의 해방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그 대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는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등장하게 된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신생 국가들 모두가 '주권 국가'로 인정을 받아 각종 국제 기구와 회의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대접받게 된다. 즉, 압도적인 권력의 우위를 점한 미국은 냉전이라는 현실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주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최대한 자유주의 질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전후 지구 정치 경제 질서를 짜나갔던 셈이다.

4.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

이렇게 나름대로의 "수정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다시 깔끔하게 국내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구획되었던 시대는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의 소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는, 그 네 가지 영역의 관계가 다시 근본적으로 재구조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각국의 국내 경제는 국가의 각종 개입에서 풀려나와 "지구화"라는 이름 아래에 세계 시장으로 더욱 강력하게 통합되는, 어찌보면 19세기의 세계 경제를 모델로 삼는 듯한 방향으로 바꾸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대처와 레이건의 보수주의적 정책을 효시로 하여 이러한 방향으로의 "자유화"를 선도한 영국과 미국 세력은 이후 80년대 외채 위기의 덫에 걸린 제 3세계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몰락 후의 동유럽 지역에 똑같은 형태의 국내 경제 개조를 강제하여왔다.

경제가 이렇게 '탈정치화' 됨에 따라 국가의 성격도 다시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국가와 비슷한 방향으로 바뀌도록 압력을 받는다. 즉 사회 민주주의, 케인즈적 재정 금융 정책, 조합주의 등의 경향은 모두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웬만한 경제 영역은 다 "사유화"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이 풍미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19세기 입헌주의 국가처럼 다시 경제 주권이 무력화하게 되면서 소위 "주권 국가의 종말"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게 된다.

국제 경제의 룰은 이러한 변화를 강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미 70년대 초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난 후 폭발적으로 팽창한 국제적인 자본 이동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개조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게 되었고, IMF와 세계 은행은 엉뚱하게도 외채 위기 국가에 파견되어 국제 금융 자본의 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집달리(執達吏)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노동, 자본, 자연 환경 모든 것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WTO를 필두로 한 각종 국제 기구가 생겨나왔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80년대 이후의 국제 정치에서 나타난 미국 권력의 비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레이건 시대 한편으로는 외채 위기와 군사적 개입을 무기로 하여 제 3세계 지역 전반에 걸친 미국의 지배력이 강화된 것은 물론, 일본의 자본 투자를 흡수하여 군비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임으로서 소련과의 소위 '제 2 냉전(The Second Cold War)'를 시작하여 마침내 붕괴시키는 것에 성공하고 말았다. 그 이후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도록 우리가 목도해왔던 것은 미국이라는 일개 국가가 이제 거의 '제국(empire)'이 되도록 힘을 늘려온 상황이다.

5. 자본의 축적과 지구 정치 경제의 변형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네 가지 영역에서의 틀과 제도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덩어리이어서 서로 떼어낼 경우 그 하나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 정치 경제의 구조가 이렇게 몇 번의 굵직한 변형을 겪게되는 메카니즘은 무엇일까?

질문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사회 과학 이론보다는 역사 철학적인 관점이 그 답을 메우게 되기 쉽다. 자유주의적인 역사 철학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시장과 자유주의 정치 질서가 모든 무지와 방해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실현되어가는, 프란시스 푸꾸야마(Francis Fukuyama) 식으로 "역사의 종말"을 향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본의 증식이 진행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소멸해가는 역사의 섭리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천학비재의 필자는 그러한 거시적 담론들을 비판하고 해체할 능력도 없지만, 욕구도 별로 느끼지를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초월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그야말로 신의 섭리(Providence)쯤 되는 차원을 알아보아야 나의 생활에도 또 내 이웃들의 생활에도 별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를 얻을 것 같지가 않아서이다. 그렇다면 말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구조화의 과정을 주도하고 또 거기에 가장 큰 이해를 갖는다고 보이는 "구체적인" 인간 집단들의 행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일이 아닐까? 이 엄청난 규모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또 엄청난 규모의 권력의 재분배와 자본의 축적이 벌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냥 추상적인 "총자본"이라는 개념말고 그 구체적인 "지배적 자본" 집단의 행태에 대해 연구해보고, 거기에서 이 지구적 정치 경제의 구조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닛잔/비클러의 관점이기도 하다. 다음 회부터는 그러면 그 집단의 구체적인 행동 원칙과 그로 인해 90년대의 지구 정치 경제에 벌어진 주요 경향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보도록 하자.

추기

이 연재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 교수와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의 연구 성과로 돌려야 한다. 필자는 단지 그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본문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은 모두 그 두 사람의 성과물이다. 물론 소개하는 과정에서의 실수와 착오는 모두 필자의 몫이다. 그들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아카이브에서 원문으로 구해볼 수 있다.

http://www.bnarchives.net

참고할만한 닛잔, 비클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ringing capital accumulation back in: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military contractors, oil companies and Middle East 'energy conflict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3), 1995.

Ch. 5 "The 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2002)

* 필자 홍기빈씨는 정치토론 사이트 '시대소리(www.sidaesori.com)'의 고정 필진으로 활동중이다.

관련 링크 (http://www.bnarchives.net)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1> III. 어제의 세계②

2003-07-29 오후 6:07:24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II. 어제의 세계: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② 차등화 축적: 넓이 지향과 깊이 지향

닛잔/비클러 이론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자본축적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접근 즉 "차등화 축적 이론(theory of differential accumu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1. 권력으로서의 자본: 왜 "자본 축적"이 중요한가

독자들 가운데 "어째서 우리가 굳이 자본축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자본축적의 문제를 처음으로 사회과학의 핵심 질문으로 등장시킨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은 보통 착취, 사회 정의, 노자간의 모순 등등의 단어들과 연상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분히 가치평가적이고 이념적인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논의의 촛점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지구정치경제의 구조 변화의 메카니즘"이라는, 다분히 "가치중립적"인 객관적 이론을 다루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어째서 19세기의 유산인 "계급투쟁"의 망령을 또 끌고 나오자는 것인가.

이 문제의 답은, 자본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권력이 존재하는 가장 지배적인 "형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의 축적이란 곧 사회적 권력이 축적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지구 정치 경제의 재구조화라는 것이 무슨 신의 섭리나 생산력 발전 같은 초월적인(transcendental)인 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권력의 축적을 노리는 다양한 구체적 인간 집단들의 치고박고에 따라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양한 인간 집단들 특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지배 계급"의 행동을 읽어내는 것에 필요한 지표는 바로 이 자본 축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는 목적이건, 미국의 세계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목적이건 상관 없다. 지구 정치 경제 변화의 역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적 권력인 "자본"이 축적되는 양상을 연구해야만 한다는 말이 된다.

"도대체 자본이 뭐길래? 어떻게 '자본이 바로 권력이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불만이 당연히 터져 나올 것이다. 바로 그렇다. 그래서 어느 캐나다 유학생은 그 자본이라는 말의 정의를 사회 과학 전체에서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려다가 귀한 시간 1, 2년을 날려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사람마다 그 자본이라는 말을 쓰는 뜻이 모두 다르며, 정의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에서 자본은 그저 노동력과 기술 이외의 모든 생산 요소 K 를 뜻한다. 그런데 막상 그 K의 개념을 정립한 클라크(J.B.Clark)의 책에서 자본의 정의를 찾아 보면 "자본은 하나의 추상이다. 알고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모두 추상인 것이 아닌가"라는 아리송한 말만 나온다. 결국 60년대에 저 유명한 캠브리지 논쟁에서 폴 사뮤엘슨 스스로가 "자본 K란 하나의 우화(fable)에 불과한" 허깨비임을 인정하고 만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의 "자본"이란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 전체"라는 다분히 사회학적 개념으로도 나왔다가, 또 어떨 때에는 "죽은 노동 시간의 집적"이라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그 "노동 시간"이라는 것도 "물리적 노동 시간"이기도 하고 "추상 노동 시간"이기도 하다는데, 그 측량법을 정확히 제시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사회학이나 정치학으로 가게 되면 실로 눈이 팽팽 돌 정도로 다양한 뜻으로 쓰이면서도 누구도 정의하지 않는다. 부르디외(Bourdieu)같은 사람의 "문화 자본" "정치 자본"같은 말에 이르면 실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사태를 일찌기 예견한 경제학자 슘페터는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다. "자본이란 원래 그저 장부상의 회계 항목으로 남겨 두었어야 하는 물건인데, 굳이 그걸 사회과학적으로 정의한다고 달려들었다가 이런 황당한 사태가 나오고 말았다". 그렇다. 이 "자본"이란 말이 그런 형이상학적인 사회과학 이론을 제쳐놓고서 실로 엄청난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대기업들의 장부에서이다. 오늘날 지구 사회의 작동을 맡은 가장 중요한 조직은 대기업들이며, 그 대기업들의 장부에 나오는 "자본"이라는 항목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모든 결정이 튀어나오는 원천이던 "성궤가 있는 장막"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본이란 무엇인가"라는 모든 복잡한 논의는 지루한 사회과학자들의 논쟁에 맡겨두고 우리는 그저 그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즉 자본 축적이란 현실에서 "기업 조직이 스스로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자본 축적 연구의 구체적 방향은 기업의 축적 전략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는 것이 좀 더 영양가 있는 일이리라. 이것이 닛잔/비클러 이론이 노리는 바이다.

2. 차등화 축적

그런 현실적인 의미에서라면, 축적은 "기업의 자산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대로, 그 크기의 증가를 "달성 가능한 극대치"로 이루려는 것이 기업의 행동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 명쾌하다.

그런데 그 "달성 가능한 극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전혀 단순하지도 명쾌하지도 않다. 미시 경제학 교과서가 주는 답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할 때에 생겨나는 이윤이 그 "달성 가능한 극대 이윤"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이미 1930년대부터 알려진 바, 그런 식으로 "한계 비용 38원 11전과 한계 수입 35원 71전"을 비교하여 가격과 생산량을 먼저 정하는 기업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다.

대신, 현실에 존재하는 기업의 행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기업들은 자신들 기업의 명예나 위신에 맞는 "목표 수익률(target rate of return)"부터 정한다. 현대나 삼성 쯤 되어서 문방구 가게 주인 아저씨들의 수익률 정도를 노리고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생산량은 현실에 있는 시장의 크기 즉 베블렌의 표현을 빌면 "거래량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what traffics can bear)" 에서 결정된다. 즉, 기업은 가격과 생산량에서 "극대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목표 이윤율을 먼저 정해놓으며 생산량은 현실적 시장의 크기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거꾸로 가격은, 그러한 생산량에서 그러한 목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원가 가산 방식의 가격 설정(markup pricing)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질문이 주어진다. 자본 축적의 속도는 그렇다면 주류 경제학이 가르치는대로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압력"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그 목표 수익률의 설정과 실현에 의해 결정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상당히 자의적일 수도 있는 이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설정될까. 물론 "극대"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느 정도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서 "달성 가능한 극대치"일까.

여기에 답을 주려는 시도가 바로 닛잔/비클러의 차등화 축적 이론이다. 즉, 각 기업들 스스로가 경쟁 상대 혹은 벤치마크로 설정해놓은 기업 집단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균 수익률을 능가(beating the average)"한다는 원칙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들었던 학교 성적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본다.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도 이 벤치마크의 방법을 쓰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번 중간고사 영어 시험이 끔찍하게 어려워, 평소에 1개 이상 안틀리던 전교 1등 아이조차 3개나 틀렸으며 자신의 실적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아이는 각 반을 돌면서 평소 그래도 자신에게 도전해 오던 7반 반장 3반 반장 등에게 슬쩍 물어보아 이들이 5개 7개 씩 틀렸음을 확인한 뒤에야 안심한다. 성적이라는 경쟁의 장에서 달성 가능한 극대치는 물론 "만점"이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달성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적을 평가하게 될까. 이러한 "벤치마크로 잡은 집단의 평균을 자신이 어느 만큼 능가하는가"로 밖에 평가할 길이 없는 것이다.

3. 차등화 축적의 여러 요소들

그렇다면 이 차등화 축적을 이루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먼저 축적이란 "자산 증식"이라는 정의에서 시작해보자. 자산을 A, 이윤을 Π, 이자율을 r 로 한다면

$$A = \Pi / r$$

로 쓸 수 있다. 즉 장래에 기대되는 이윤의 흐름 Π 를 이자율 r로 나누어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산의 증가율 A'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 = \Pi' - r'$$

차등적 축적이란 다른 기업 Ap의 자산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니, 그 차등적 축적률 A' – Ap'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A' - Ap' = \Pi' - \Pi p'$$

결국 시장 이자율이라는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니, 다른 기업들보다 이윤의 증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분석해보자. 그 기업의 총 매출액을 V, 생산량을 Q, 총 노동자 수를 L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윤의 구성을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식의 여러 분모와 분자들을 상쇄시키면 첫번째 식을 간단히 전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Pi = \Pi$$

$$\Pi = \Pi/V * V/Q * Q/L * L$$

이 두 번째 식에 등장하는 네 가지 요소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L은 글자 그대로 총 고용자 수이다. Q/L은 총 생산량을 노동자 숫자로 나눈 것이니 곧 노동 생산성을 의미한다. V/Q는 총 매출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니 생산물의 단위 가격을 뜻한다. Π/V는 이윤과 매출의 비율이니 전체 매출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 즉 마크업(markup)을 뜻한다. 즉, 이윤은 마크업, 가격, 노동 생산성, 노동자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차등적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곧 이 네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을 다른 기업보다 빨리 증가 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4. 차등화 축적의 주된 양식들**:** 넓이 지향과 깊이 지향

닛잔/비클러는 이 중 L을 더 빨리 키우는 방법 즉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넓이 지향(breadth), 나머지 세 요소 즉 마크업, 가격, 노동 생산성의 더 빠른 증가를 꾀하는 방법을 깊이 지향(depth)이라고 분류한다. 그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넓이 지향: 신규 설비 투자와 인수 합병

노동자 숫자로 평가되는 기업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인수 합병과 신규 설비 투자(green-field investment)이다. 물론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아주 덩치가 큰 세계적 규모의 자본 즉 닛잔/비클러가 "지배적 자본(dominant capital)"이라고 부르는 기업의 행동이나 아예 전체 경제의 축적 양식(accumulation regime)의 차원에서 보자면 신규 설비 투자라는 방식의 축적은 금방 한계를 드러낸다.

만약 전체 경제 차원에서 이 신규 설비 투자를 주된 축적 양식으로 삼는다면, 이는 그렇게 싼값으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의 계속적인 유입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농촌 인구의 분해를 통한 이 "산업 예비군"의 조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일단 그 흐름이 고갈되고 나면 임금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깊이 지향의 요소인 마크업에 영향을 주어 금새 이윤도 하향 압박을 받게 된다. 또 노동 생산성이 일정할 때 총 산출의 절대적 양도 늘게 되는데, 그 상품을 다 흡수할 시장을 조달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

이에 비하여 인수합병은 그러한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력을 흡수하여 크기를 키우는 것이므로 그러한 산업 예비군 조달의 압박도 받지 않는다. 또 기존에 판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시장 판로의 개척이라는 문제도 피해 갈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합병 후 과감한 다운사이징을 통해 노동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독점력을 이용한 가격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깊이 지향에서의 요소들마저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국적적인 "지배적 자본" 또 전체 경제의 축적 레짐 차원에서 보자면 신규 설비 투자보다는 이 인수합병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한 축적 방식이 된다는 것이 닛잔/비클러의 분석이다.

2) 깊이 지향

이 깊이 지향의 세 가지 요소들 각각은 넓이 지향의 요소에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더 많은 장애를 갖고 있다. 첫째로 노동 생산성은 기술적 혁신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술적 혁신을 잠시동안 특정 기업이 독점하여 우위를 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금새 경쟁 기업들로 확산되게 마련이므로 주된 차등화 축적의 방법으로 쓰이는 데에 무리가 있다. 게다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 연구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과가 불확실한 기술 혁신 연구에 계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기술 혁신은 기업들에게 있어 그저 뒤처지지 않게 따라잡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이 마크업이란 전체 매출에서 자본가가 이윤으로 취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것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곧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소득의 감소와 부의 불평등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정치 사회적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이는 "사회의 계급 투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자본가들의 임의대로 되기 힘들다. 전체 경제의 축적 양식 차원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강철 군화(Iron Heel)"같은 파시즘이 등장하여 노동 운동 전체를 탄압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셋째, 가격의 상승이다. 이는 그 기업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독점적 가격 결정력(monopoly pricing-power)을 십분 활용하여 제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몇 몇 대기업이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된다. 먼저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곧 사회 전반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게 마련이다. 물론 지배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독점력을 갖고 있는 한 더 높은 가격 상승률을 유지하면 계속적인 차등적 축적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은 곧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주된 축적 양식으로 쓰게 될 경우 곧 전반적인 사회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5. 인수 합병과 재구조화

기술 혁신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깊이 지향 축적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회적 권력 관계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크업의 신장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역관계의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가격 상승은 가격 결정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의 모든 경제 주체들 사이에 엄청난 부와 권력의 재분배를 가져옴으로서 차등화 축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넓이 지향 축적이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고도 성장과 붐을 수반하는 평화적인 것에 비해 깊이 지향 축적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차등화 축적 양식으로 이 인수 합병이 좀 더 주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넓이 지향 축적 방식에 일정한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며, 깊이 지향 축적 방식에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태일같은 청년들이 몸을 불살라야 했을만큼 노동 탄압이 심했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사업가들에게 그야말로 얼마나 "땅짚고 헤엄치기"같은 환상적 사업 조건이었는지는 그 폭발적 경제 성장률이 말해주고 있다. 또 20년대 독일에서 최근의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이르도록, 이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와 속도로 가격이 뛰게 된다. 그 과정에서 독점력이 큰 기업들은 보통때는 언감생심 꿈조차 꿀 수 없는 고율의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인수합병이라는 넓이 지향 축적 방식이 상당한 시간 계속 되다가 일정한 한계에 부닥치면, 기존의 사회적 권력 구조가 급속히 재구조화되면서 노동 탄압이나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통한 깊이 지향 축적 방식이 짧은 기간 나타난다고. 하지만 깊이 지향 축적 방식이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수반하므로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넓이 지향 축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즉 20세기 전체의 지구적 축적의 역사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긴 인수 합병과 넓이 지향의 기간 사이에 간헐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깊이 지향 축적 방식의 기간이 끼어든다고 말이다.

지금은 가버린 듯한 "어제의 세계" 80년대와 90년대의 "지구적 인수 합병"의 기간을 닛잔/비클러는 전형적인 그 넓이 지향 축적 방식이 이루어졌던 때로 보고 있다. 또 그 기간에 나타난 지구 정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도 그러한 축적 방식에 수반된 구조 변화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제부터 살펴보자.

* 이 부분에 대한 닛잔/비클러의 좀 더 심화된 이론은 홍기빈 역, 조나단 닛잔과 심숀 비클러, <자본 축적과 변형의 지구 정치 경제학(가제)>(삼인, 근간) 를 참조할 수 있다.

* 필자 홍기빈씨는 정치토론 사이트 '시대소리(www.sidaesori.com)'의 고정 필진으로 활동중이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2> III. 어제의 세계 ③

2003-08-20 오후 3:59:56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II. 어제의 세계: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③ 인수합병은 왜 벌어지는가

현대 문명과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크기"에 지독한 집착을 보인다. 크기의 측량이 가능한 사물이나 대상이 있으면 그 질을 항상 크기로 측량하는 것이다. 큰게 좋은가 작은 게 좋은가?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 반대다. 집은 클 수록 좋고 전자 계산기와 노트북 컴퓨터는 작을 수록 좋다.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 남녀 신체의 경우 특정 부위는 클 수록 좋고 또 다른 부위는 작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각종 확대와 축소의 비기가 등장한다. 대대익선이냐 소소익선이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기에 대한 집착은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어떤가? 클수록 좋은가 작을 수록 좋은가? 최소한 20세기 중반까지는 아예 대기업 숭배에 가까울 정도의 대자본(big business)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는 그 "크기의 신화"가 무너지고 기업들은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체격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기술 정보 산업의 발생으로 작은 기술 연구 벤처 기업들이 새시대의 주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크기에 관한 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은 아직 이르다. 비록 2000년을 기점으로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80~90년대는 동시에 전세계적인 규모에서의 기업 인수 합병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시스코(Cisco) 같은 기업에서 잘 드러나듯, 그 작은 규모의 기술 벤처들도 그 인수 합병의 물결에서 벗어나 있기는 커녕 오히려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왜 합병을 하는 것인가? 이 단순해보이는 질문에 대한 주류 이론의 답은 의외로 허술하다. 닛잔/비클러는 소유권의 이동을 통한 차등화 축적의 관점에 서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기업 합병과 거래 비용 – "신제도주의 이론"

주류 경제 이론의 부동의 전제 하나는 "자본주의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생산성의 담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축적, 기업 성장, 생산성 향상, 사회 전체의 풍요는 모조리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로 인하여, 기업과 자본가는 항상 생산성과 효율성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존재로 그려지게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현상은 바로 그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행위자들의 생산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기업 합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이론은 1937년 코스(R. Coase)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윌리엄슨(O. Williamson)등의 소위 "신제도주의" – 베블렌 류의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 로 이어졌다. 그 요점을 간략하게 말하면, 기업간의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s)"을 최소로 하여 생산성 효율성을 끌어 올리려는 동기가 인수 합병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완전한 자연 원자재에서 최종 생산물까지 혼자 모두 생산해내는 기업 조직은 극히 드물다. 시장 경제란 사실상 그렇게 자재를 조달하고 또 완제품을 판매하면서 촘촘히 이어지는 수많은 기업들간의 거래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 시장에서의 수요자 공급자로 연결된다. 나는 내 기업과 관련된 원자재 시장으로 나간다. 이론상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있으니, 나는 그 중 가장 좋은 가격과 품질을 내놓는 기업과 단순한 시장 거래를 맞으면 된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헤어지는 "갑과 을"의 시장 계약 관계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이합집산 덕분에 시장 경제가 최고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은 근대 경제학의 주장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항상 쓰는 자재 또 항상 나오는 완제품을 매번 그렇게

시장 계약으로 사고 판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그때 그때마다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또 그 기업들과의 관계가 시장 계약 관계이므로 "현금 박치기"를 기본으로 아니할 수가 없다. 즉, 이러한 "거래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거의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계약 관계를 맺어온 기업들이 이렇게 독립된 기업간의 시장 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일 수가 있다. 차라리 두 기업이 하나로 뭉쳐 복합 기업을 만들어내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인수 합병을 "결혼"과 비유하는 것은 비지니스 매체에서 흔히 있는 관행이니, 다음의 예를 들어도 필자를 천박하다고 나무라지 말기를. 시장 경제처럼, 완전한 자유 연애야말로 현대 개개인들의 연애 생활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체제일지도 모른다. 모든 개인들은 각자의 주거와 생활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선에서 자유롭고 만나고 찢어진다. 그런데 혹시 거의 매일 매시간 붙어다니는 커플이 발생한다면, 그들이 이런 연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여간 비용 – 커피값, …기타 등등의 값 – 이 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생활을 합치기로 한다. 동거 혹은 결혼이 이루어진다.

즉, 기업들은 특정 분야의 유통을 시장에 맡겨두는 경우와 기업 조직 안으로 "내부화"시키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한계 내부 거래 비용과 한계 시장 거래 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기업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깔끔한 설명이며, 논박이 불가능한 설명이다. 그런데 닛잔/비클러는 이 논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이론의 치명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왜냐면 "입증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을 입증하거나 논박하려면 그 한계 거래 비용을 먼저 계산해 놓고 기업이 과연 그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달리 행동하는가를 관측해야만 논박이든 입증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계 효용이나 한계 비용과 같은 다른 신고전파 경제학의 개념들처럼, 이 "한계 거래 비용"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이론은 거꾸로 현존하는 기업들의 크기는 그러한 계산 결과 나온 것일 테니 모두 "최고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정당화의 논리로 귀결되고 만다. 실제 1980년 인수 합병이 경제 각 부문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을 적에 윌리암슨 같은 이의 논리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기업 크기들을 정당화하는 데에 혁혁한 공헌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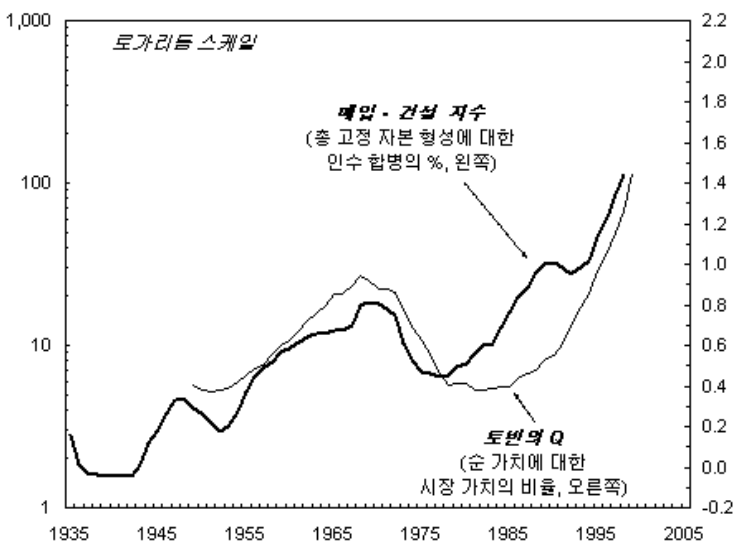
이렇게 입증도 논박도 불가능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경향으로 짚어보면 모순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시장의 기업의 숫자가 무수히 많다면 정말로 그 시장 거래 비용이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과점화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기업의 숫자도 대폭 줄어들었다. 또 90년대의 소위 "기술 정보 혁명"의 요는 바로 그 거래 비용의 삭감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20세기 중반까지 출현했던 기왕의 대기업들이 오히려 여러 개의 작은 기업들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 그 기간 나타났던 것은 전대미문의 규모로 벌어진 인수 합병이다. 이는 어떻게 된 일인가?

게다가 그 논리에 입각한다면, 파시즘 경제나 사회주의 아래에서의 집산화된 경제의 크기도 "최적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반박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경우는 탐욕스럽고 무지몽매한 정치가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어거지로 합병시킨 것이며, "극대 이윤"을 고려하는 자본가들의 "합리적" 선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아주 재미있는 점이다. 과연 자본가들이 인수합병을 할 적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이 "비용의 삭감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일까? 혹시 그들이 인수합병으로 크기를 불리려는 이유도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권력"을 확장하려는 것은 아닐까?

2."토빈의 Q"- 이론과 실상

위와 같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기업의 인수 합병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노벨상에 빛나는 유명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과 동료 브레이냐드(William Brainard)가 제안한 "토빈의 Q"(Tobin's Q) 이론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생산을 확장하려할 적에 선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맨땅에 새로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며 둘째는 기존의 설비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그 두 가지 비용의 비율 즉 기존의 기업의 시장 가치와 설비의 보전 비용(replacement cost)의 비율을 일컫는 것이 그 "Q"이다. 이 Q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수 합병의 비용보다 새로 짓는 쪽이 훨씬 더 싸진다는 말이니, 기업들은 주로 신규 설비 쪽으로 돈을 쓸 것이다. 이 또한 "비용 절감의 효율성" 논리에 근거한 깔끔한 설명 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그 "한계 거래 비용"과 달리 이 Q는 분명히 현실에서 측정도 가능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입증 혹은 논박이 가능하다.

이에 닛잔/비클러는 그 문제의 Q 와 실제의 인수 합병의 경우를 조사하여 비교해보았다. 그것이 다음의 그림에 나타나 있다.

[그림] 토빈의 Q?

주의: 계열들은 5년 이동 평균으로 완만하게 다듬어졌다.
출처: 토빈의 Q는 농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주식회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DRI (Flow of Funds codes: 시장 가치는 BS103164003L, 보전 비용으로 본 순 가치는 BL102090005L) 에 나와 있는 Federal Reserve Board 데이터로 계산하였다.

토빈이라는 경제학자의 노벨상의 명성이 무색해지고 말아 필자도 민망하다. 이 그림에 나타난 토빈의 Q는 어처구니가 없을만큼 현실과 반대임을 가리키고 있다. 굵은 선으로 나타낸 것이 실제의 시설 투자에 대한 인수 합병 금액의 비율인데, 가는 선으로 나타난 토빈의 Q 와 마땅히 반대로 움직여야 할 이 계열이 거의 정확하게 함께 등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토빈을 탓할 일이 아니다. 분명히 미국의 기업가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생산 설비 건설 비용은 내려가고 인수 합병은 어려워지는 판에 어째서 이들은 비용 절감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돈을 물쓰듯 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주류 이론에서의 기업가들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최상의 원칙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닌가?

3. 자본주의와 효율성 **-** "깽판놓기"와 소유권

이러한 수수께께를 푸는 데에 적절한 해답은 쏘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자본 이론에 있다고 닛잔 비클러는 주장한다. 그 주장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베블렌은 자본주의 경제를 "영리 활동(business)"과 "산업(industry)"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순수하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모토로 하여 실제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후자라고 한다면, 전자는 그러한 산업을 지배함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역이다. 즉 영리 활동의 모토는 "금전 이익의 극대화"이지 "생산과 효율의 극대화"는 아닌 것이다. 베블렌은 (신)고전파 경제학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 모두가 "자본주의의 비밀은 생산성 향상이다"라는 신화에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란 바로 "영리 활동"의 영역이 "산업"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때 영리 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금전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만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윤과 축적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산성"이 아니라 "산업"에 투여되는 각종 생산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다. 그 소유권이란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생산 설비를 사회가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일정한 소득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윤의 원천이다. 즉, 사회적 생산에 "깽판을 놓아(sabotage)" 사회로부터 일정한 몸값을 뜯어낼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며, 그로 인한 소득이 바로 이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베블렌은 19세기 후반에 들어 공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 잠재적 생산 능력이 현실의 시장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단계로 갔다는 것을 주목한다. 이 상황에서 만약 18세기 소공업자들마냥 "최대한의 생산"이라는 원칙으로 산업이 굴러가도록 내버려 둘 경우 시장에는 물건이 넘치고 이윤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자본가들이 소유권을 발동하여 생산을 일정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영리 활동"의 논리가 된다. 이렇게 "거래량이 담을 수 있는 것만을 생산(charge what traffics can bear)"하도록 "효율성을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것(conscientious withdrawal of efficiency)"가 바로 자본주의의 축적 논리가 된다.

20세기의 자본주의적 축적이 생산성에 기반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렇게 생산성을 "깽판 놓는" 경향을 가진다면, 축적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베블렌은 여기에서 그 "소유권"이라는 사회적 권력의 확대와 강화가 바로 자본의 축적이라고 보고 있다. 즉, 사회 전체에 걸쳐 다른 경쟁 기업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산

업"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 즉 "차등화 축적(differential accumulation)"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닛잔/비클러의 해석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생산성 효율성을 올리는 것은 핵심이 아니며,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소유권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차지하는 것이 곧 축적의 핵심이라는 말이 된다.

이러한 베블렌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인수합병의 의미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게 된다. 인수 합병은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 아닌, "소유권 확장을 통한 권력 축적"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토빈의 Q 이론과 완전한 모순을 보이는 위 그림의 현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설비 투자의 비용이 낮아진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인수 합병 대신 시설 투자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개별 기업으로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 기업들이 그렇게 하여 생산성이 극도로 올라간다면 위의 베블렌의 주장처럼 "아예 이윤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나오기 때문이며, 큰 덩치를 가진 오늘날의 "지배적 자본"들은 이 사실을 뚜렷이 의식하고 행동한다는 게 닛잔/비클러의 진단이다.

기업들은 설비 투자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소유권 확장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수 합병의 추이는 그 토빈의 Q 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오히려 인과관계가 거꾸로일 수도 있다고 닛잔/비클러는 암시한 바 있다. 위 그림의 두 계열을 보면 실제의 인수 합병 증감을 나타내는 굵은 선이 인수 합병의 비용을 표현하는 가는 선의 토빈의 Q 를 시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본가들이 "비용 효율성"이라는 토빈의 Q 를 먼저 고려하여 인수 합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기업들은 인수 합병 그 자체를 목적으로 먼저 추구하며 기업의 시장 가치가 그 결과로 영향받아 토빈의 Q 가 아래 위로 증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의 크기에 관한 한, 아무래도 "대대익선"을 향한 경향이 더 우세한 듯 하다. 만약 자본주의 기업이 정말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industry)"의 조직이라면 그 최적의 크기는 생산의 성격에 따라 큰 쪽도 작은 쪽도 될 수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이 사회적 생산 전반에 대한 지배 권력을 늘리기 위해 경쟁자들보다 소유권을 끊임없이 늘려야 하는 "영리 활동(business)"의 조직이라면 항상 "큰 것"을 향한 끝없는 팽창욕이 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개별 기업의 크기가 파시즘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 이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동기와 목적도 똑같은 "권력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수합병에 의한 소유권 팽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본 축적에는 사회적 한계가 없는가? 어째서 인수합병은 계속적인 경향이 아니라 몇 십년 주기를 둔 하나의 물결(wave)처럼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것인가? 이에 대해 다음 편에서 살펴보자.

* 이 부분에 대한 닛잔/비클러의 좀 더 심화된 이론은 홍기빈 역, 조나단 닛잔과 심숀 비클러, <자본 축적과 변형의 지구 정치 경제학(가제)>(삼인, 근간) 를 참조할 수 있다.

* 필자 홍기빈씨는 정치토론 사이트 '시대소리(www.sidaesori.com)'의 고정 필진으로 활동중이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세계적 자본축적과 지구정치경제의 향방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3> III. 어제의 세계 ④

2003-09-05 오전 9:14:13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II. 어제의 세계: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④ 지구화와 인수 합병

앞 절에서 본 바, 기업 융합(corporate amalgamation)은 기업의 차등화 축적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방법이 될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기업의 이윤은 주류 경제학 이론이 주장하듯이 "생산성의 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블렌이 주장하듯이 "생산성을 제약"하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인 "소유권"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기업 행동의 주요한 목적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사회 내에서 그러한 권력의 크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기업 융합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권력을 가져옴으로서 여타 기업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또 한층 높아진 시장 지배 권력을 이용하여 더 큰 이윤을 얻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추론이 맞다면, 이 기업 융합의 경향이야말로 19세기 이래 지구적 자본주의의 가장 주요하고 일관된 현상으로 관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비록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표출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이 "집적과 집중"을 향하여 나아가는 끝없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금융 자본론]의 저자 힐퍼딩(Rudolf Hilferding)은 은행 등의 금융적 수단을 매개로 하여 아예 전 사회의 생산 자체가 소수 독점 자본의 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정권을 획득한 무산계급 정당이 이 "한줌도 안되는 인간들"의 독점 자본을 국유화함으로서 사회주의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물적 기초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최근에 마이클 레보윗쯔(Michael Lebowitz) 같은 이도 이론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러한 독점으로의 경향이, "최후의 일자(the One)"만 남을 때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세계의 역사에서 기업 융합의 경향은 일관되게 진행된 장기적 추세의 형태가 아니라 고조와 퇴조를 반복하는 물결의 형태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조되는 기업 융합의 경향에 제동을 가하여 이렇게 물결의 모습을 낳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1. "울타리" – 기업 융합의 사회적 한계

그렇게 기업 융합의 진전을 일정하게 가두는 제약 요소 – 이를 닛잔/비클러는 "울타리"(envelope)라고 부른다 –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혹은 자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기업 융합이 진행되다보면 조만간에아주 큰 놈 하나 혹은 두 셋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융합되게 마련이다. 즉, 기업 융합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풀이 고갈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 하려면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기업 융합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매력있는 신규 사업체들이 계속 버섯처럼 솟아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팽창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의 지리적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 제약당하는 것들이라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여러가지 기술적 제약의 문제도 있다. 지리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 융합하여 단일한 지휘 체계에 넣기 위해서는 경영과 조직의 기법에 있어서도 큰 혁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가 충분히 받쳐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원활하고 신속한 기업 융합을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권이 거래되는 제반의 제도적 장치들 – 금융 시장, 주식회사 제도, 은행 등의 금융 기관, 법적 장치 등등 – 도 튼튼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제도적 혁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업 융합의 경향도 일정한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의 요소 즉 사회적인 제약 요소라고 할 만한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업과 자본을 오로지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자 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에게는 기업 융합이 "순수 경제적 현상"으로만 보일 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규모 기업 융합은 전반적인 사회적 권력 구조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사회적 권력을 재분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기도

Best 클릭 기사

1. '극우 준동 역풍'에 한나라 지지율...
2. "지금 데모할 국민이 1천만, 맞아...
3. 정형근 '원희룡 맹성토', "술먹고...
4. 동아일보, 자사에 불리한 '여론조사...
5. "美, 유사시 북한에 핵 30개 투...
6. 박근혜-황장엽-조갑제, 한 자리서 ...
7. 일본영화의 한국 2차상륙 시작되다

오늘의 기획 · 연재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산불

hari-hara의 '생물학 카페' <28> 산불 이야기

산불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일단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끝은 파멸...

- 김태규 명리학 <170>
- 오즈의 마법사와 미국 대선
- 한국의 아르헨 차관설과 중국의 언...

프레시안 **PLUS**

더불어숲학교
[제 18강] 김봉렬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건축과 교수)의 <한국 건축의 자연관>
내 영혼의 자유로...
오카리나학교
유승엽 선생님과 함께 만들고 배우고 감상하고...
한국문학예술학교
새 예술, 새 교육으로 가는 길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이우학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더불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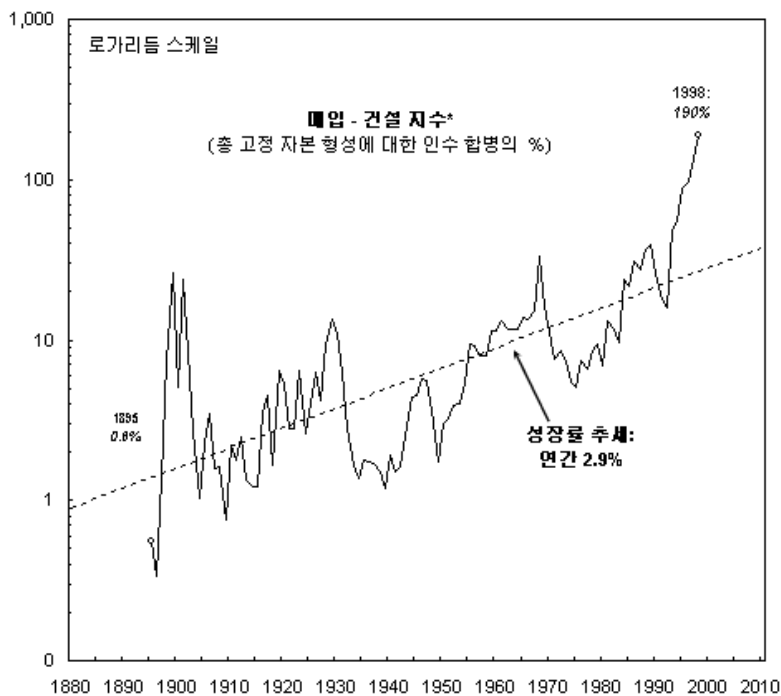
하다. 기업이 이윤을 얻어내는 능력이란 “생산성”이 아닌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소유권이란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과 시장에 대해 어느만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사회적 권력”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베블렌의 혜안을 상기하라. 그렇다면 기업 융합의 과정이란 곧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공룡 기업이 시장을 둘러싼 이런 저런 사회적 권력을 자기들 수중에 집중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권력을 빼앗기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며, 또 기존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자라나는 도전자들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것인가.

역사상 최초로 기업 융합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었던 1890년대의 미국 사회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카네기, 라커펠러, 모오건 등등이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던 그 시절 사회 정치적으로 어떠한 분노와 파란이 일어났었는지는 매튜 조셉슨(Matthew Josephson)의 명저 [날강도 귀족들(Robber Barons)]에서 잘 그려지고 있다. 이제 미국 사회가 그들 소수 몇 몇이 군림하는 거대한 대제국으로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또 그들의 반대자들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1890년대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선진 제국의 기업 융합의 물결은 수많은 중소 자본가들의 파산을 낳았고, 이렇게 몰락의 지경에 처하게 된 쁘띠 부르주아들은 “금융 독점 자본”에 대한 강력한 불만 세력으로 자라나게 되어 30년대 이후 파시즘 등의 사회 혼란의 주역으로 등장한다. 80년대 이후 기업의 인수 합병에 어김없이 수반되는 것은 “리스트럭처링 – 다운사이징”이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고용 불안, 임금 감소, 노동 강도 강화 등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노동 조합이나 노동 계급 정당은 이에 무제한의 인수 합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렇게 사회 환경이 적대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기업 융합의 전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적 제도의 발전에 일정한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1890년에 셔어먼의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 비록 허술하기 짝이없어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 출현하면서 기업 융합에 대한 각종 규제가 생겨난다. 또 상업 은행의 기업 투자를 금지하면서 금융 규제의 원형이 된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도 결국 모오건(J.P. Morgan)의 산업-금융 제국 팽창에 제동을 걸고 산업과 금융에 국가 지배가 들어서게 될 여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2. “울타리”를 넘어서

닛잔/비클러는 매입 – 건설의 비율을 지표로 하여 지난 1세기 동안 미국 경제에서의 기업 융합의 성쇠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피고 있다. [그림 1]은 그것을 보여준다.

[그림 1] 미국 경제에서의 축적: 내부적 vs. 외부적 넓이 지향

*Nitzan and Bichler,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2002) 54p.

여기에서 우리는 19세기 말엽 이후로 인수 합병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다가 수그러드는 주기적 순환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물결이 나타났던 시기는 1890년대와 1900년대에 한번, 1920년대에 한 번, 1950-60년대에 한번, 80-90년대에 한번 모두 4번이 있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닛잔/비클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기업 융합의 물결이 그 각각의 시기에 있었던 사회적 장벽의 “울타리”에 부딪혀서 수그러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울타리”를 부수고 점점 더 넓은 사회적 공간적 지평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장기적 추세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타난 첫 번째의 물결은 소위 "독점"의 시대로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대규모 주식회사(corporation)가 맹위를 떨치면서 각 산업(industry) 차원에서 독점을 확립해가는 시기이다. 이 개별 산업에서의 독점체는 빠른 시간 안에 출현할 수 있었지만 일단 해당 산업에서의 독점을 확립하게 되면 기업 융합의 물결은 다시 잦아들게 된다.

1920년대의 물결에서는 그러한 개별 산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부문(sector) 차원으로 기업 융합의 지평이 확장된, 소위 "과점"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때이다. 특히 석유나 기계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듯이, 기업 융합이 몇 개의 인접 산업에 걸쳐서 벌어진 결과 기업 연합체(combines)등의 조직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50-60년대의 물결에서는 다시 한번 그 부문이라는 "울타리"가 깨어지고 전 미국 경제라는 전국적(national) 차원으로 지평이 확장된다. 즉 미국의 전체 기업 세계가 기업 융합의 장으로 개방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그 원래의 전문 직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원자재에서 제조업을 거쳐 금융과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대규모 복합 기업(conglomerates)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닛잔/비클러는 80년대 90년대에 나타났던 4번째의 기업 융합의 물결을 "지구적(global)"인 것이라고 성격을 부여한다. 70년대에 이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몇 개의 복합 기업들이 주요한 산업 부문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바 일개 국민 경제라는 것은 이미 울타리"가 되어 버렸으며, 지구적 차원에서의 기업 융합에 필요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아직 불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특히 90년대의 소위 지구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이르면서 그러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드디어 지구적 지평에서의 기업 융합의 물결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 유엔 자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보게 되면, 전 세계 해외 총투자의 75%가 기업 인수 합병에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이 지구화 파동의 특징은 탈(脫) 복합 기업의 경향이라고, 즉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핵심 업종에 다시 초점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왔다. 지구화 덕분에 동종 산업 내부에서의 추가적인 팽창이 국경을 넘어서서 가능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팽창에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해도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이라는 미명으로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다시 복합 기업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 "지구적"기업 융합의 주요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닛잔/비클러는 전망한다. 전산, 통신, 교통, 연예 등과 같이 기술 발전이 급격하면서 또 표준적인 산업 분류의 경계선이 애매하게 되어가고 있는 업종에서는 이미 이러한 지구적 복합 기업의 출현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씨스코(Cisco), 루썬트(Lucent),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에이오엘 타임 워너(AOL-Time Warner), 뉴스콥(NewsCorp), 허치슨(Hutchison), 비방디(Vivendi) 등과 같은 정보, 장거리통신, 연예 산업 기업들은 점차 전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컨설팅), 기간 시설(케이블과 위성), 콘텐츠(텔레비전, 영화, 음악, 출판), 통신(인터넷과 전화)등을 통합시키고 있으며, 한편 카니발 크루즈(Carnival Cruise)와 같은 레저 기업은 해운, 관광 호텔, 항공, 스포츠 경기 팀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이나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같은 기업들은 애초부터 복합 기업 형태를 포기한 적이 없고 항상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이다.

3. 지구적 소유 구조 **–** 축적 체제가 출현하는 것인가

여기에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지금까지 주류 사회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지구화란 "세계 시장 경제 출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섭리이며, 그 원동력은 기술 혁신과 생산력 발전이라는 역사적 추세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지구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익과는 무관한 "중립적"현상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되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닛잔/비클러의 주장대로, 지구화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한 동력은 소유권이라는 사회적 권력을 지구적 규모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지배적 자본의 차등화 축적 전략과 긴밀히 결합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지구화란 전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건이기는 커녕 그 지배적 자본의 세계적 축적 및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게 된다. 또 지구화라는 이 변화의 물결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기술 발전도 효율성 제고도 지구적 후생과 복지의 증진도 아닌, "지배적 자본의 소유권 확장"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식 경제학 경영학 교과서를 많이 읽은 이들은, 소유권과 그 매매의 원칙이 마치 만유인력이나 대기압 마냥 지구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작동되는 일종의 자연법칙이라고 종종 착각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소유권이 지구적 규모에서 행사되고 자유롭게 거래되는 일도 좀 때늦기는 했지만 당연한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누누히 이야기 했듯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아픈 온갖 종류의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재분배를 일으키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일이 그렇게 간단하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각국에 등장하기 시작한 다양한 형태의 소유 구조 – 금융 체제는 사실상 이 대기업의 소유권을 몇 몇 자본가 개인들이 아니라 국가, 중앙 은행, 노동 조합, 소비자 등등의 이익 관련자들(stakeholder)이 맺고 있는 정치 사회적 구조의 일부로서 묻어버리려는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일본, 독일, 미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그 어느 나라도 이 소유 구조, 금융 체제, 기업 지배 구조가 동일하게 생긴 나라는 없다. 그 결과 어떤 기업의 소유권은 그 기업이 자리잡은 나라의 구체적 법적 사회적 제도에 따라 그 구체적 성격과 의미가 규정되며, 그러한 특이성은 각국의 "경제적 주권"의 이름 아래에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70년대 초 까지 세계 경제에서의 일반적 규범(norm)이었다. 이러한 전후 국제 정치 질서가 기업 융합의 물결이 "일국적 차원"에 갇히도록 만든 울타리로 작용했음도 물론이다.

그런데 지구적 차원에서 기업 융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그러한 각국 특유의 소유 구조 – 금융 체제가 무너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획일적인 소유권의 룰과 규범이 전 지구적으로 강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 3세계 국가들은 80년대의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90년대의 시장 전환을 겪으면서 그러한 지구화의 강제적 재편성을 겪은 바 있으며, 끈질기게 버티던 아시아의 국가들은 97년의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같은 과정을 지나고 있다.

즉, 기업 융합의 "울타리"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는 일은, 그것을 추구하는 세력과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 사이에 근본적인 권력의 재분배가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세계 자본주의 곳곳에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90년대에 지구적인 기업 융합의 물결과 그 제도적 장치가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을 추동하는 것에 이익을 같이하는 "초국적 자본 계급"이 등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

* 이 부분에 대한 닛잔/비클러의 좀 더 심화된 이론은 홍기빈 역, 조나단 닛잔과 심숀 비클러, <자본 축적과 변형의 지구 정치 경제학(가제)>(삼인, 근간) 를 참조할 수 있다.

* 필자 홍기빈씨는 정치토론 사이트 '시대소리(www.sidaesori.com)'의 고정 필진으로 활동중이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쿼 바디스(Quo Vadis),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8> '지구 정치경제의 향방' 연재를 속개하며

2004-07-15 오전 9:05:28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작년에 연재하다가 중단된 "세계적 자본 축적과 지구 정치 경제의 향방"을 계속 연재하기로 한다.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그 당시 막 시작되고 있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있었다. 이 전쟁이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세계 초강대국의 일방적 폭력이었음은 지금은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고 이미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들이 지적했던 바이다.

하지만 이 연재를 시작했던 것은 그렇게 거의 과잉으로 차고 넘치던 도덕적 비판에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전쟁은 약간 멀리 떨어져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좀더 긴 시간 지평에 놓고 볼 필요가 또한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논의가 이라크 전쟁의 도덕성 문제에만 집중되다보니 그러한 역사적 의의가 수이 간과되고 있다는 경계심이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지구 정치-경제의 변형

1990년대의 세계는 정말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처럼 '역사의 종말'에 가까웠던 듯한 세계였다. 20세기 후반기의 지구를 찢어놓았던 냉전도 끝난 이상, 이제 인간 세계에는 큰 갈등의 동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낙관론이 팽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론은 곧 냉전의 승리자인 자유주의적 정치 및 경제 체제에 대한 신격화로 이어졌고, 이제 세계 역사에 마지막 남은 일거리는 그러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이상을 전 지구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믿어졌다.

여기에 덧붙여 소위 기술 정보 혁명이라는 하이테크붐이 나타나면서 국제 금융의 흐름은 그 혜택으로 바이트와 비트에 실려 전 세계를 휘어감는 지구적 금융 시장을 형성하였다. 여행업(tourism business)과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도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던" 크레믈린의 북극곰도 사라진 이상 인류의 공적(公敵)이란 기껏해야 반인권적 반평화적 분란을 일으키는 지역의 불한당들 정도였고, 또 그러한 불한당들이 도를 넘어 준동할 때면 미국을 맹주로 한 유럽과 일본 각국의 공조 체제가 가동되어 '정의의 불벼락'을 안겨주곤 했었다. 아시아, 남아메리카, 동유럽의 신흥 경제(emerging market)가 성장 엔진이 되어 세계 경제도 주식 시장도 활황을 이루었고, 중상류층들은 뮤추얼 펀드에, 세계적 대기업들은 엄청난 규모의 인수 합병에 몰두하게 되었다.

대략 이러한 모습이 90년대의 지구화 시대의 풍경이었다. '쥬라기 공원'과 같은 모습이다. 내리쬐는 햇볕과 푹푹찌는 더위 덕분에 사방에서 시퍼런 양치 식물들이 마구 자라난다. 그러면 다이노사우루스처럼 엄청난 크기로 살이 찐 대기업들은 그것을 뜯어먹으며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더욱 덩치를 키운다. 게으른 하품이 절로 나오는 중생대의 어느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의 주가 폭락은 빙하기로 접어드는 불길한 조짐이었다. '닷컴 붐'과 '신경제(New Economy)'라는 시대의 총아는 상당한 과대포장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또 이제 더 이상 합병할만한 기업의 풀도 소진되어 간다. 그리고 1990년대의 신흥 경제 특히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나타나게 된 '과잉 생산'으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세계로 번져간다. 2001년 9월11일의 참극이 터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그날 오전 뉴욕의 국제 무역 센터 빌딩이 무너지는 뉴스 화면을 보고 어떤 이들이 직감적으로 '이제 어제의 세계는 영영 끝이 났구나'라고 느꼈던 것도 그래서 무리가 아니다. 덩치 큰 초식 공룡들이 평온하게 양치 식물을 뜯던 '쥬라기 공원'은 이제 곧 입에 피칠갑을 하고 다른 짐승들의 내장을 파헤치는 티라노 사우루스들에게 점령될 것이다.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이라는 지구화(globalization)의 이데올로기 대신 혼란과 갈등, 전쟁, 암살, 군비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 실업과 인플레, 보호 무역 등등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구화도 신자유주의적 상품화도 더 이상 히쭉 웃는 호색한 클린턴의 얼굴을 내세운 90년대의 이미지와 방식은 아닐 것이다.

Best 클릭 기사

1. '극우 준동 역풍'에 한나라 지지율…
2. "지금 데모할 국민이 1천만, 맞아…
3. 정형근 '원희룡 맹성토', "술먹고…
4. 동아일보, 자사에 불리한 '여론조사…
5. "美, 유사시 북한에 핵 30개 투…
6. 박근혜-황장엽-조갑제, 한 자리서 …
7. 일본영화의 한국 2차상륙 시작되다

오늘의 기획 · 연재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산불

hari-hara의 '생물학 카페' <28> 산불 이야기

산불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일단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끝은 파멸...

- 김태규 명리학 <170>
- 오즈의 마법사와 미국 대선
- 한국의 아르헨 차관설과 중국의 언...

하지만 이런 종류의 예감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장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못된다. '말이 씨가 될' 위험도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에서의 세계사적인 전환이라는 주제는 사실 역사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신의 옷자락'이나 비슷한 영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 철학에다가 슈펭글러 류의 문명비평 등 오만가지 차원의 담론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올 크고 막연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2003년의 이라크 침략이라는 사건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또 도전적인 것이었다. 먼저 그 불길한 예감이 더 이상 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소위 '알 카에다'와의 관련을 내세운 아프가니스탄 침략까지는 그 9.11이라는 '우발적'인 - 최소한 공식적 담론은 그렇게 주장한다 - 사건의 귀결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누구의 눈에도 터무니없는 이라크 전쟁으로 상황이 이어지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째서 아시아의 냉전 구조와 한반도 분단 체제는 해체되기는커녕, 미사일 방어 체제(Missile Defense System)나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서 보듯 미증유의 긴장으로 치달아간단 말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원유가는 드디어 배럴 당 4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정부 관료들이 '현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몇 개 기업들은 이라크 전을 계기로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따내고 있다. 90년대 말 세계 총 생산의 10%를 넘던 여행업종은 심각한 타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갈등은 한없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한-미-일 군사력은 지금 체계적인 재조직화를 겪고 있다. 부시의 경쟁자로 나온 존 케리 후보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발전용 핵물질도 국제적으로 통제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수백 기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조롱하며 모든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나타나는 메카니즘은 무슨 '세계사를 인도하는 불가해한 신의 섭리(mysterious Providence)' 따위와 같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 이 북새통에서 뚜렷한 이익과 권력을 축적해가는 아주 구체적인 인간 집단들이 아주 구체적인 책략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빤히 보이는' 정치적 역동일 뿐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지구화의 방식도 또 자본 축적의 양식도 모두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지구 정치경제학'을 찾아서

'지구화'가 새로운 역사적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전 인류의 삶과 안녕의 조건이 오늘날처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된 시절은 없었다는 점이다. IMF 당시 직업과 가정을 잃어야 했던 이들을 생각해보라. 이제 각 개개인의 인생과 운명에 있어서 그러한 지구화된 삶의 조건이 규정하고 들어오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불안한 눈으로 보는 이들의 숫자는 점점 불어나고 있으며, 한 때 소수의 학자 및 전문가들의 관심사에 불과했던 세계 정치나 정치경제 같은 사안들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이라크 침략' 사건의 중장기적 의의 또한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적어도 '공식적 담론'에서는 그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공식적 담론'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바는 우리 생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음미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믿어야 할 바'를 안내해주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에서 발표되는 담론을 뜻한다. 오늘날 그 '공식적 담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서방의 정부 및 준정부 조직의 담화, 둘째 미디어의 보도와 사설, 셋째 대학과 학계의 주류적 해석 등이다. 2001년의 9.11 사태 이후 2003년 이라크 침략 당시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이러한 지구촌의 현 상황의 의의를 밝혀주기는커녕, 그러한 혼란을 만드는 정치적 책략의 한 도구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익히 본 바 있다.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서방 국가들이나 그 영향 하의 국제 기구의 담화들은 '지구화의 불만'이나 '경제적 공포'에 가득찬 사람들의 근본적인 불신과 도전에 직면한 바 있다. 미국의 대학들이 주도하는 주류 사회과학계의 담론은 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정당화 이후 21세기의 변모된 상황에 대해 침묵 혹은 기성 권력에 대한 정당화로 일관하고 있다. 몇 개의 서방 매체가 장악해버린 오늘날의 세계 미디어 업계에 고전적인 '독립적 언론의 사명' 따위를 기대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가 되고 말았다. 비록 인터넷이나 반지구화 운동의 힘을 빌어 나타난 여러 가지 대안 매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정보와 역량의 미비로 아직 즉자적인 도덕적 비판과 폭로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눈앞에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포착하면서도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론적 분석을 가하여 풍부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구 정치경제학'은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변해가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 공부도 고민도 부족한 필자의 역량으로 크게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했던 죠나단 닛잔(Jonathan Nitzan)과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의 정치 경제학 연구는 그러한 필요를 크

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연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의 이론과 현실 분석을 가급적이면 풍부하고 쉽게 소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음모 이론'의 전성 시대

그래서 이 연재를 처음 시작하던 2003년 당시 주력했던 바는, 특히 90년대에 더욱 굳어지게 된 일종의 통념, 즉 "지구 정치경제의 변동은 기술 진보, 경제 발전, 자유의 진보 등과 같은 거시적 메카니즘으로 설명된다"는 사고 방식에 일단 도전하는 것이었다. 또 당시의 이라크 침략이라는 사태는 오히려 지구 정치경제란 구체적인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권력과 이익의 관점에서 움직이고 뒤집히는 것이라는 사고 방식이 훨씬 설득력있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과 시각을 '음모이론'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주류 사회과학과 공식적 담론이라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필요했었다. 그것이 이 연재를 "음모이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짧은 에세이로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그런데 이러한 필자의 걱정은 기우(杞憂)가 되었고, 오히려 그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은 반대의 편향을 걱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하다. 역사의 전환기에서 항상 현실의 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는다. 원래 "이라크 침략은 석유와 각종 잇권을 노린 군수 석유 자본과 부시 집단의 준동일뿐이다"는 담론은 아직도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저항 담론의 울타리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라크 전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적 담론'도 지구촌의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제일 먼저 감지한 것은 미디어였으며 특히 부시가 이끄는 일방적 미국주도의 세계 질서에 불만을 품은 유럽 쪽 주류 언론들이 우선 이러한 폭로와 담론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외교 정책 연구자들에게는 1970년대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어빙 크리스톨(Irving Cristol) 등의 '신보수주의자들(Neo-Conservatives)'이 이들에 의해 '네오콘'이라는 이름으로 재발견되어 질타를 받기 시작하였고, 부시 집단 구성원들이 미국의 유태인계 인맥, 기독교 근본주의 집단, 석유 자본, 군수 자본 등등과 인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폭로가 주류 미디어와 출판계에 범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부시와 네오콘의 책략'이라는 주제는 새로울 것도 위험할 것도 없는 꼭지가 되고 말았다. 동경, 파리, 뉴욕의 서점가에는 부시 집단의 과거와 행적에 얽힌 온갖 폭로가 차고 넘치고 있으며, 칸느와 미라맥스와 미국 민주당의 존 케리 선거 운동 본부는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타리 <화씨 9.11>을 지구촌의 '올해의 영화'로 만들고 있다. 몇 번에 걸친 영국과 미국 정부의 자체 조사 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전쟁의 합리적 정당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으며, 그 와중에서 각국 정보 기관, 범죄 조직, 브로커 등등이 엮여 이루어지는, 로버트 콕스(Robert Cox)가 "지하 세계(Covert World)"라고 부른 것들이 슬쩍 모습을 비치고 있다①. 게임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 온갖 현란한 수식으로 다가오는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의 시대를 노래하던 사회과학 학계는 완전히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②.

이제 '부시와 네오콘의 책동'이라는 줄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시민의 면바지'만큼이나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한 것이 되고 말았다. 김선일씨 사건이 벌어지자 "부시 집단의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을 메우고, 일부 시민 운동가들은 "살인자는 부시 집단이다"고 외쳐댄다. 정부 여당의 중진 정치가들의 입에서도 "네오콘의 준동" 어쩌고 하는 말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으면 부시 집단의 괘씸죄에 걸려 북한 폭격과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도 이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정해진 방식으로 수식과 수치를 다루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경제학자들조차 이렇게 말한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은 백악관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장기적인 한미 동맹의 약화는 한국 신용 등급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1851년의 저 험악했던 미국 철도 채권의 북새통부터 3세기에 걸쳐서 까다롭기 그지없는 "객관적" 신용 평가 절차를 발전시켜온 무디스(Moody's) 등이 들으면 실로 분기탱천할만한 '음모 이론'이다. 점입가경으로, 이것을 청와대의 위정자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자료로서 웹 싸이트에 당당히 걸어 국민 상식을 만들고 있다③.

이러한 '음모 이론'식 사고의 범람은 한편으로는 '공식적 담론'의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가 완전히 파산하고 근본부터 도전받고 있는 현재 지구 정치 경제 체제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다 하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식적 담론'을 대체하여 포괄적 체계적인 세계상을 제시할만한 이론이 아직 나오지 못한 혼란상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 너머에 있는 무기상, 석유 자본의 정치 세력들을 주목하게 된 것은 소중한 지적 고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서두에 함께 보았던, 현재 세계가 처한 역사적 국면의 의미를 상기해보라. 과연 "악의 무리 부시 집단을 몰아내자"라는 식의 인식으로 충분한 것인가?

존 케리가 구세주**?**

마이클 무어 감독은 부시 대통령 낙선을 위해 공공연히 존 케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배우, 지식인 할 것 없이 미국 내의 최소한의 양심 세력들은 일제히 존 케리의 뒤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존 케리 당선을 통한 부시 낙선 운동"은 미국을 넘어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의 시민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을 하는 이들의 선한 동기와 진심을 모르지 않으며, 부시가 재선되는 것이 끔찍한 사태

임도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다.

2000년 이후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라크에서 또 지구 도처에서 겪고 있는 이 혼란이 과연 부시라고 하는 일개 "미치광이 집단"이 백악관을 장악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의 주인을 교체한다면 해결될 것인가?

"호전적인 공화당, 평화적인 민주당"이라는 사실 여부가 의심쩍은 신화는 상당히 유래가 깊다. 특히 1990년대의 "좋았던 옛날"에 향수를 느끼는 이들이 더욱 이러한 신화에 잘 끌리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의 미국 정부의 "일탈"은 존 케리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그 이전 90년대 클린턴 정권과의 연속선을 다시 이음에 따라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사고 방식은 대중적 담론의 '음모 이론'으로의 편향에서 생겨난 부작용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외 정책 결정 과정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며, 현재의 세계 정치 경제를 이루는 각각의 틀들 그리고 그것들이 상호 연결되는 방식은 더욱 더 복잡하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메카니즘과 구조에 대한 고려와 통찰이 없이 그저 하나의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고 방식이 나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라고 보인다. "자연에는 비약이 없다"는 것이 자연 과학의 모토라면,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 사회 과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이 나오게 된 인과 관계를 총체적인 사회적 관계 전체의 맥락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기본적 임무이다.

애초에 부시 행정부와 같은 집단이 어떻게 해서 집권을 하게 되었고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일방적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민주당의 집권에만 그야말로 '올인'을 하는 것은 과연 안전한 처사인가. 존 케리 측의 이스라엘 중동 정책은 부시 쪽과 대동소이하지 않은가. '핵 통제'를 앞세우고 북한에 더욱 큰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부시 정권에서 기득권을 챙기던 집단들과 맞서려는 계획과 의도가 있는가.

이것이 1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세계적 자본 축적과 지구 정치경제의 향방"의 연재를 다시 속개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이다. 지난 1년간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겹게 이야기했듯이, 한반도의 삶에 있어서 미국과 지구 정치 경제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실로 절대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 지배세력의 성격과 그 작동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널리 이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할 지적 작업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지구 정치 경제가 서두에서 논한 바 있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을 겪고 있는 국면이다. 그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과 집단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전환이 벌어지고 있는 구조와 전체의 작동 논리를 살펴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닛잔과 비클러는 저널리스트도 폭로 전문가도 아닌 대학의 사회 과학자들이다. 따라서 기왕에 소개해 온 그들의 이론과 접근은 사실 어설픈 '음모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목적에 복무하도록 마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그것을 소개하는 이 연재가 지금 사뭇 다른 각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연재를 끝까지 완결하도록 결심하였다.

이러한 연재 속개의 의도에 따라, 계획했던 순서도 약간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 곧 시작될 4부에 계획했었던 '부시 집단의 성격'의 부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고 보여 크게 축소되거나 삭제될 것이다. 둘째, 대신 결론인 5부 부분에서 존 케리와 민주당 대표의 대외 정책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는 부분이 첨가될 것이다. 셋째, 서두에서 논한 현재의 역사적 국면은 "지구적 규모에서의 군사화와 상품화의 병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이 비단 태평양이나 고비 사막 너머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의 변동을 규정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 헌법 개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군사 대국화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될 것이다.

독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랜 기간 연재가 중단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재개될 연재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 세상이 처해있는 국면이 단지 몇 몇 개인이나 집단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근본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또한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연재에서 다루는 닛잔과 비클러의 연구에 대해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권력자본론: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넘어서>(조나단 닛잔・심숀 비클러, 홍기빈 옮김, 삼인 펴냄)이 출판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린다.

<주(註)>

① "Covert World" in Robert W. Cox, The Political Economy of a Plural World: Critical Reflections on Power, Morals and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2002) 118-138pp.

② 2003년 2월 말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렸던 가장 큰 국제 정치학 학회인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ISA)의 연례 학회에서 5백 개가 넘는 발표와 논문 가운데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다룬 것을 이 글에서 소개되는 넛잔과 비클러의 발표를 제외하면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이라크 침략이야말로 국제법, 국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 국제 정치학의 낯익은 각각의 연구 영역은 물론 중장기적인 세계 정치 역학의 변화 전망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주류 학계의 침묵은 사실상 경악할만한 것이다.

③ <프레시안>, 2004년 7월8일자 기사 참조.

홍기빈/국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0)

(15)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9> '상품화'에 대한 맹신과 '워싱턴 컨센서스'

2004-07-19 오전 9:49:14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II. 어제의 세계 :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⑤ 인수 합병 축적 양식의 사회적 조건과 한계

앞에서 보았듯, 세계적인 '지배적 자본'에 있어서 90년대의 주요한 자본 축적 양식은 지구적 규모에서의 대규모 인수 합병이었다는 것이 닛잔/비클러의 진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넓이 지향' 양식으로의 자본 축적이 벌어지려면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창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칼 마르크스의 통찰은 근대 경제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차대한 핵심을 찌르고 있다. '경제'란 사회적 관계와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별유천지비인간' 같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몇 몇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자본 축적에 성공했다는 것은 곧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관계의 변형과 재구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19세기 자본주의의 축적 과정에서 주로 착목했던 그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무산 계급의 창출과 기계제 공장 생산의 확장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의 지구적 규모의 인수 합병과 금융 자본 팽창을 통한 자본 축적 과정이 가져온 사회적 관계의 변형과 창출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잠깐 그래프와 숫자 등의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 현상에서 시야를 돌려 그러한 사회적 조건의 창출과 변형이 어떠한 것이었고 또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상품화'란 무엇인가

'시장화(marketization)'나 '상업화(commercialization)'와 구별되는 '상품화(commodification)'라는 말은 80년대 이후 비판적 사회과학계 등에서 주로 쓰이게 된 말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있게 규정한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라는 표현은 아마도 80년대 이후 지구적 규모에서 진행되어 온 경제적 변화의 사회적 성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상품'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대답하려고 보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냥 '시장에 쌓여 있는 물건' 즉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지 모른다. 그런데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상품이다'라는 말은 그 '상품'이라는 단어를 길게 풀어놓고 있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이런 대답을 누가 못하겠는가. 문제는 그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란 도대체 어떤 물건(물론 가시적인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아무리 관찰해보아도 – 마르크스의 유명한 표현대로 '저고리를 아무리 이리저리 헤집어 보아도' – 그 물건의 가시적 속성에서 '상품'의 성격을 찾을 수는 없다. 가격표가 붙어 개시장에 진열된 개고기 한 근이나 어제 개천가에서 동네 형들이랑 몰래 잡은 옆집 복돌이 고기나 똑같은 맛과 색깔의 개고기일 뿐이다. 결국 그 '상품'이라는 규정성은 무언가 복잡한 형이상학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상품'의 문제가 형이상학적 문제임을 최초로 간파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보다 몇 천년 전의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는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개의 전혀 무관한 '목적인(final cause)'이 같은 물건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본다. 똑같은 짚신이라도 내가 신으려고 내가 꼬은 짚신에는 "발이 편해야 맘이 편하고 일이 잘 된다"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이 녹아 들어 있다. 그런데 오늘밤 한 잔 걸쳐보려고 술값 마련을 위해 그 짚신을 아고라 길바닥에 내걸었다면, 거기에는 "술 먹을 돈을 마련하고 말리라"는 다른 목적이 덧씌우게 된다. 즉, 어떤 물건이 본래의 쓰임새와 됨됨이와 무관하게 "화폐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변형된 것이 상품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도 별로 대단할 것 없는 뻔한 말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

요한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끌어낸다. 인간 세상과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무에서 생겨난 것"이 없으며, 또 아무런 쓸모 없는 물건이 생겨나는 법도 없다. 자연도 사회도 꼭 필요한 물건만을 만들어내어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하는 "인색함(parsimonious)"을 그 본성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다른 목적이 공존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 상품이 되어 길바닥에 나와 있는 저 물건들은 원래 그 물건을 만들어낸 자연적 사회적 과정에 녹아들어 있는 본래의 쓰임새가 있으며 또 그 됨됨이(형상)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자연적 사회적 과정에 갑자기 "돈벌이"라는 엉뚱한 목적이 천둥에 개 뛰어들듯 끼겨들어 있는 것이 상품이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시장에 나 앉게 되면 조만간 그 "돈벌이"라는 목적이 그 물건의 자연적인 목적 – 신발의 경우 발과 맘을 편하게 하여 일을 돕는다 – 을 압도하여 쫓아내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발이 편하건 말건 잘 팔리면 그만"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비극은 그 상품에만 벌어지지 않는다. 그 상품을 만드는 활동이라는 것도 본래의 예술적 창의적 활동이 아닌 기계적인 "돈벌이 활동"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그 물건을 낳은 자연적 사회적 과정 전체가 변질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려가 근거없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삼풍백화점과 성수 대교를 상기하기 바란다.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구조물 본래의 목적이 어떻게 "돈벌이" 과정으로 인하여 변질되었을 때 어떤 황당한 사태가 가능한가를.

"상품"이라는 것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따져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단순해보이는 이 시장과 상품화라는 현상이 계속 확장될 경우엔 기존의 사회적 관계 전체를 변질시키고 마침내 해체시킬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의 시대의 아테네가 본래의 정치 공동체의 모습을 잃고 계속 붕괴되어 나가는 것도 이러한 시장 관계의 확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는 보았던 듯 하다①.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 방식을 발전시켜서 20세기의 세계 자본주의의 상품화 현상을 한층 더 날카롭게 분석하는 틀을 제시한다. 먼저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상품 철학의 연장선에서 상품이란 '애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짚신이나 개고기는 아예 처음부터 "내다 팔아 돈을 사리라"는 목적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존재들을 보면 그런 목적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숫제 인간이 생산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최근 경매 싸이트에서 화제가 된 "소년의 동정(童貞)"같은 것은 특이한 예로 보아 넘어가두자. 폴라니가 보기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근간이라 할 세 가지의 요소 시장, 즉 노동 시장, 토지 시장, 화폐 시장의 상품 즉 인간, 자연, 사회적 구매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판매를 위해 생산"될 수 없는 대표적인 존재들이다. 하지만 경제 원론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세 가지 상품이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매매되지 않는 한 시장 경제의 자기 조정 메카니즘은 결코 작동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마치 상품인 것처럼 가정하고 자유롭게 매매하게 하는 '상품 허구(commodity fiction)'를 법적 정치적으로 제도화할 수밖에 없다고 폴라니는 말한다②.

이러한 폴라니의 논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발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 자연, 사회적 구매력등을 골간으로 구성되는 '사회 조직' 자체를 아예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적 상품화의 본질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전력과 같은 국영 기업의 사유화나 우리 나라 은행의 외국인 소유 같은 문제를 따져보자. 두 경우의 조직 모두 그 고정 자산의 형성부터 각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모두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조직과 물고기와 물 이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한 부분들이다. 그런데 한국 전력을 사유화하여 그 소유권을 주식 시장에 '내다 판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한국 전력이나 은행 등의 조직의 안팎을 통과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흐름을 '자본화'라는 방법을 통해 '상품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상품'이 된 한국 전력의 '주주'가 된 자들이 그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를 더 많이 확장하는 것이 바로 20세기 끝 무렵 '지구화'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넓이 지향' 축적 양식의 사회적 조건이었다.

워싱턴 컨센서스

이 III 장의 첫 부분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를 맹신하였던 19세기의 고전적 시장 자본주의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거침없이 파괴하여 그 여파로 사회주의 혁명, 파시즘, 양차 대전이라는 일대 혼란을 낳고 말았다③. 따라서 브레튼 우즈 통화 체제와 GATT 를 양 축으로 하여 2차 대전 이후에 복구된 세계 경제 질서는, 그 전과 달리 각 나라의 통화 주권과 자국 산업의 보호의 여지를 넉넉히 허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다. 즉 세계적 규모에서 또 각국 내부의 차원에서 시장 경제의 작동이 다시 정치적 사회적 관계의 맥락으로 묻어들어갈(embedded)'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④.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 지구 정치 경제는 다시 '전면적 상품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첫째, 50년대와 60년대에 미증유의 장기적 경제 호황을 구가했던 미국과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70년대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이 함께 오르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된다. 이에 자본 측은 사뮤엘 헌팅튼 등의 보수 정치학자들의 "민주주의의 과잉"론과 밀튼 프리드만 등 통화주의자(Monetarists)들의 "케인즈 경제 정책의 종언"론을 앞세워 고전적 자유 방임주의로의 회귀를 요구하게 된다⑤. 노사 협조에 근

간한 전후의 수정 자본주의 형태는 노동 조합과 여타 사회 집단들이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자율적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장 경제에 지나친 간섭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나친 복지 재정 정책과 경기 부양을 위한 느슨한 통화 정책이 사회 전체의 이완과 혼란을 가져왔고, 당시의 경제 위기가 그 집약적 형태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정권을 필두로 하여 80년대 서방 국가들의 정치 경제 정책이 신 보수주의 혹은 신 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으로 대 전환을 이루게 된 계기이다.

제 3세계 나라들에도 변화의 물결이 덮치게 되었다. 1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멕시코를 필두로 엄청난 금액을 차입한 무수한 개발 도상국들이 줄줄이 외채 위기에 처하자 돈을 빌려준 서방의 은행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들은 채무의 보전과 지불 능력의 확보를 위해 IMF등을 앞세워 이 나라들의 내부 정치 경제 구조를 거칠게 바꾸어 나가는 '구조 조정'을 시작하였다. 70년대까지 제 3세계 국가들에 일반적이었던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 자본주의' 형태 체제는 첫 번째 청산 대상이었다. 먼저 외환 가지 안정과 외환 보유고 확보라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화폐적 접근(monetary approach)'을 앞세운 IMF가 들어간다. 이에 살인적인 긴축 재정과 고금리 통화 정책이 강제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 복지 지출의 감소, 대규모 국영 기업의 사유화(외국 은행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소비의 감소, 중소 기업의 파산 등의 현상이 줄을 이었다. 그 다음엔 장기적인 '구조 조정 계획(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AP)'을 앞세운 세계 은행(World Bank)이 들어가서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내다 파는' 개방 무역형 체제로 경제 구조를 바꾸어 버린다.

90년대가 되자 이 변화의 물결은 제 2세계, 즉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마저 휘감아버렸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정치가들과 학자 관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시장 지향적 개방 경제 체제가 관철되도록 적극 개입하였다. 이리하여 80년대의 지구 정치 경제는 다시 '전 지구적인 상품화'를 지향하는 19세기 형의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90년대 초가 되면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정치가, 관료, 학자, 지식인들 사이에 각국 내부 또 지구적 차원의 정치 경제 체제 전환의 방향에 대하여 일정한 공감과 합의가 도출된다. 이것이 저 유명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이다.

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용어에 대해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미국 정부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세계의 수도인 워싱턴에 중심을 둔 IMF, 세계 은행, 각종 연구소들(think tank)과 같이 정치적 안목을 갖춘 투자 은행가들, 현실 감각있는 각국 고위 재무 관료들 등 세계 여론 지도층들이 모여 시기마다 주도적인 담론을 집단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네트워크와 제도들을 총칭하는 것이다."⑥

이러한 초국적적인 "워싱턴 컨센서스"가 지향했던 지구 정치 경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선 WTO 등을 앞세워 무역의 완전 개방을 이상으로 삼는다. 시장의 합리성의 논리를 들어 국유 기업의 사유화를 지지한다. 사회 복지 지출의 삭감 등을 통한 균형 재정 그리고 엄격한 통화 정책 등을 통하여 화폐 가치의 안정에 주력하며, 많은 개발 도상국의 경우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의 가치에 자국 화폐의 가치를 아예 연동시키도록 권장한다. 탈규제의 논리를 들어 금융 시장의 분할(compartmentalization)을 무너뜨리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개방하며, 투자자와 기업 활동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바로 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표방했던 이념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냉전이 끝나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갔다"고 했던가. '이데올로기'란 단순한 의견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 인간 세상을 뜯어고쳐야만 하는 아주 정치적 물질적인 관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에서 작동했었던 이데올로기였다고 할 수도 있다. 역사상 이렇게 "전 지구"라는 규모에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어 놓고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부분까지 인류의 생활 양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이념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도 경제적 민족주의도 모두 사라진 이상 그것을 막을 힘은 아무 것도 없는 듯 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의 합병 계약 자리에서 어느 중역이 했다는 다음의 말은 그 승승장구의 '그들'의 분위기를 잘 전한다. "이제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Now, who's gonna stop us?)".

<주(註)>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졸저,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책세상, 2001) 참조.

②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칼 폴라니,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 경제인가>(홍기빈 옮김, 책세상, 2002) 참조.

③ 이러한 시장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이 야기시킨 20세기의 '대변형'이 칼 폴라니의 고전적 저작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1957)([거대한 변환](민음사, 1992))의 주요 테마이다.

④ 이 말은 칼 폴라니가 시장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경제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쓴 용어이다. 존 러기(John Ruggie)는 이 말을 빌어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시장 자본주의의 성격을 '묻어들어간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이라고 부른 바 있다. John Ruggie,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Spring, 1982.

⑤ M. Crozier, S. P. Huntington and J. Watanuki ed., The Crisis of Democra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Milton Friedman, Milton Friedman's Monetary Framework: A Debate With His Critics R. J. Gordon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⑥ Paul Krugman, "Dutch Tulips and Emerging Markets",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5. 28-9pp. 로버트 콕스와 같은 국제 정치학자도 80년대 중반에 이렇게 전 지구적 규모의 상품화를 지향하는 초국적적인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한 바 있고, 그 네트워크가 내부의 사정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뿌옇게 가려진 성운(nbuleuse)"라고 부른 바 있다. Robert Cox, Production, Power, and Social For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홍기빈/국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제휴 | 사이트맵 | 이용안내 Home Back Top

"역사가 끝나"고 "문명이 충돌"할 때 미국이 한 일은?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20> 미정부-월가-헤지펀드 네트워크의 탄생

2004-07-21 오후 6:18:04

III. 어제의 세계 :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⑤ 인수 합병 축적 양식의 사회적 조건과 한계

클린턴 시대의 달러-월 스트리트 레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렇게 코스모폴리탄적인 외양을 취한 90년대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미국이라는 일국의 국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점이다.

'공식적 담론'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모범 시민'이라면 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장 그리고 그에 따라 변해가는 지구촌의 실제 세계가 아마도 "기술 진보와 인류 이성의 발전에 따른 역사의 불가항력"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는 깨자마자 커피를 마시며 지구촌 이곳저곳의 '황소(bull)'와 '곰(bear)'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 직장의 꽃 피는 화제는 뮤추얼 펀드와 닷컴 창업 이야기이다. 집에 돌아와 읽는 교양 서적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는 끝났는가>나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따위의 교양 서적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하지만 이 어떤 것도 이러한 현상을 추동하는 구체적인 인간 집단의 노력이 없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 이 명제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필시 모종의 '신의 섭리'를 믿는 종교인이거나 '역사의 발전 법칙' 따위를 믿는 구닥다리 헤겔주의자 공산주의자밖에 없다. 헤겔의 거대한 철학 체계의 중심에서 가장 빗나간 명제를 그것도 알렉상드르 코제브(Alexandre Kojéve)가 프랑스 정권과 학계를 오가면서 그 필요에 따라 멋대로 변형해 놓은 데에다 또 다시 알란 블룸(Alan Bloom)이라는 악명 높은 보수주의자의 시각으로 굴절시킨 후, 또 다시 어거지로 굽혀진 니체의 명제랑 칵테일 해놓은 이 후쿠야마의 책을 읽고서 진지한 철학을 가진 독자라면 진저리를 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게다가 거두절미 설명도 없이 일본을 갑자기 아시아와 독자적인 '문명'이라고 우기는 무식한 주장을 오로지 하버드 교수라는 이름 자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헌팅턴의 책은 독자로 하여금 문자와 종이의 발명 자체에 대한 회의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 책들은 90년대 지구촌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러면 식민지 신문의 지식인들은 이 두 사람을 '석학(碩學)'이라는 명칭을 붙여 하늘로 떠받들기에 바쁘다. 기자들은 잘 읽지도 않고서 알쏭달쏭한 어휘로 찬사를 남발하고, 지식인 범주에 끼는 데에 혈안이 된 이들은 이 저자들의 권위에 도전할 불경한 생각 따위는 추호에도 없다.

하지만 이 두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과정에는 CIA 의 출연 기관인 랜드 회사(Rand Corporation)가 있고, 출판, 방송, 언론을 하나로 꿰어 90년대에 출현한 각종 미디어 거대 기업(conglomerate)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이 정당화시킨 90년대 미국의 세계 전략 – 워싱턴 컨센서스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군사화 – 이 있다. 아마도 이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 뉴욕 타임스, 퓰리처 상 등등의 이름이 동원되면 사대주의에 찌든 주변부의 지식계는 그대로 이 책을 성전으로 받아들이고 "멈보점보(mumbo jumbo)"를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을①.

책 두어 권이 이러하다면, 그토록 미증유의 위력을 발휘한 워싱턴 컨센서스와 지구화에 미국 정부가 손 털고 물러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쪽이 부자연스럽다. 여기에서 피터 고완(Peter Gowan) 등이 주장하듯이 이미 70년대 초부터 형성된 바 있는 미국의 '달러-월 스트리트 레짐(Dollar-Wall Street-Regime)'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②.

1971년 닉슨 대통령의 달러-금 태환 중지 선언 이후 세계 통화 체제는 현실적으로(de facto) 달러 본위제로 운영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유사 이래 통화 발행을 독점할 수 있는 권력은 그에 따른 권력(seignorage)을 쥐게 마련이다. 미국이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더 이상한 일이다. 이미 1971년 직후 시카고의 농산물 시장 등에 존재했던 선물 옵션 시장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달러와 세계 외환 선물 시장으로 변모하였다. 여기에 8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된 미국 내의 금융 탈규제는 미국이 변화된 세계 금융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제반의 조건을 성숙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터 고완은 이러한 조건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체계적으로 활용할만한 계획이 미국 국가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은 클린턴 행정부였다고 보고 있다③. 골드만 삭스 은행 출신의 루빈 재무장관을 위시하여 현재 하버드 대학 총장으로서 최근 "70년대 서울의 100만 10대 창녀 부대" 발언으로 망신을 한 바 있는 로렌스 서머스 그리고 물론 연방 준비 위원회의 앨런 그린스펀 등으로 짜여진 드림팀 내각은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결과 엄청난 규모로 불어난 국제 금융 자본의 흐름을 십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 월 스트리트 – 헤지 펀드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90년대에 몇 번이나 국제적 문제가 되었던 조지 소로스 등등의 헤지 펀드(hedge fund)의 위험성에 대한 공식적 담론의 입장은 아주 명쾌한 것이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따라 움직이는 기적적인 기구이다.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의 가격 부침은 그러한 '실물' 시장에서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할 뿐이다. 투기와 헤지 펀드의 움직임은 그러한 대세의 흐름을 조금 앞서서 표현해주는 '제비'일 뿐이지 계절 자체를 만들어내는 실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깡드쉬나 스탠리 피셔 같은 IMF 관리들의 성명이었다.

과연 그랬을까. 90년대에 전 세계를 누볐던 유명 헤지 펀드로 타이거 펀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LTCM(Long Term Credit Management fund)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이런 저런 나라의 통화 등을 건드리면서 움직일 수 있었던 돈의 규모가 과연 그런 '제비'에 불과한 소량이었을까. 이들 펀드의 자본 자체는 제한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들이 그 워싱턴과 월 스트리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국의 은행들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물론 이들 은행의 대부는 연방 준비위와 완전히 무관하게 벌어질 수 없다) 금액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IMF 자체가 이미 공식적으로 이들 헤지펀드가 자신들 자본의 20배의 액수를 은행에서 레버리지로 차입하여 움직인다고 인정한 바 있고 조지 소로스는 자신이 차입할 수 있는 은행 융자의 크기를 50배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파산해버린 LTCM의 경우 그 크기를 따져보니 250배에 달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주요 헤지 펀드의 자본금 총액은 당시 대략 3천억 달러로 잡고 이들의 레버리지 융자의 크기를 대략 100배로 잡는다면, 결국 이들이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여 움직인 돈의 크기는 30조 달러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④. 물론 이들 헤지펀드가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 크기의 자금은 결코 '제비'라고 할 수도 없음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미국 정부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포괄된 인사들도 이러한 전지구적인 상품화와 금융 자본의 축적이 아무런 사회적 충돌없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는 없다. 이미 이들은 80년대 중반 멕시코나 다른 개발도상국의 '구조 조정' 경험 속에서 어떤 사회적 반항이 조직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회적 반동을 흡수할 수 있는 각종의 전술을 백방으로 마련해두어야 했다. 이러한 전술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뒷받침하여 전 세계적 지구화가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미국 정부의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었다⑤.

<주(註)>

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달래기 위해 우르르 엎드려서 외치는 주문을 흉내내는 소리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게 유럽인들에게 그렇게 보인 것인지 실제 아프리카의 관습인지는 물론 알 수 없다. 하지만 서양과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면 별 생각 없이 우선 그 앞에 달려가 108배를 바치기 바쁜 21세기 주변부 지식인의 모습을 지칭하는 데에는 아주 요긴한 단어이다.

② Peter Gowan, Global Gamble: Washington's Faustian Bid for World Dominance, (London: Verso, 1999). 이 책은 <세계 없는 세계화>(홍수원 옮김, 시유시, 2001)로 국내에 번역됐다. 저자는 New Left Review의 편집자를 역임했다.

③ 같은 책, 39쪽.

④ 같은 책, 96~98쪽.

⑤ 이러한 지구화에의 반항에 대한 각종 대응 전술에 대해서는 John Williamson ed. The Political Economy of Policy Refor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홍기빈/국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90년대의 확실한 종언, 부시와 유럽의 결별"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21> GE-허니웰 합병의 좌절과 그 의의

2004-07-26 오전 9:45:58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II. 어제의 세계: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⑥ **90**년대의 끝 **: GE/**허니웰 합병의 좌절과 그 의의

90년대 지구화의 전제 조건과 위기

이전의 연재분에서 살펴보았지만, 닛잔/비클러는 인수 합병을 주된 방법으로 삼는 이러한 '넓이 지향' 축적 양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수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 영역 안팎의 권력의 배분이 근본적으로 바뀌며 또한 사회적 조건의 창출 또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그들은 '울타리(envelop)'라고 부른다①.

클린턴 행정부의 달러-월스트리트 레짐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앞세운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상품화'는, 축적의 주요 활동 무대를 주로 일국 내부로 규정당하고 있었던 서방 국가의 자본에게 폭발적인 '지구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기업 간의 인수 합병 활동도 그 이전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적 규모에서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미국과 유럽 국가 사이의 대규모 인수 합병은 정말로 이젠 '자본에 국경이 없다'는 말을 현실로 느끼게 하였다. 그 결과 '지구적 규모의 초국적 소유 구조와 자본가 계급'이 나타나는 가능성을 전망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90년대가 끝나가면서 이렇게 지구적인 규모에서 행해졌던 대규모 인수 합병의 붐도 그 한계 즉 새로운 '울타리'를 만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규모 인수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권력의 재분배에 대해 기존의 권력 구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제도적 장치를 바꾸어 내든가 아니면 거기에 분명한 제동을 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결코 물리학 역학과 같은 기계적 과정이 아니다. 해당 구역의 지배 세력들 사이의 타협이나 공동의 세계관 창출 등 그야말로 그람시가 '역사적 블록의 헤게모니 형성'이라고 불렀던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결코 손쉽게 혹은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능한 정치적 지도 집단이 있어서 대단히 정교한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 나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②.

90년대식 지구화의 위기는 97년과 98년에 걸친 아시아, 러시아, 남미의 금융 위기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분석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인이 90년대에 붐을 일으킨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이 과연 어느 만한 실제의 채산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채산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빠른 외형적 경제 성장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세계 금융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③. 여기에 덧붙여 90년대 자본 축적의 낙관주의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었던 기술 정보 혁명 – "나스닥", "닷컴", "신경제(New Economy)" 같은 말들로 집약된다 – 의 실제 수익성이라는 것도 점차 근본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세계 주식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던 대규모 인수 합병의 건수가 점차 고갈되기 시작하고 또 심각한 사회적 한계에 부딪히는 증후가 역력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마침내 2000년 '신경제' 시대의 총아 나스닥의 폭락으로 나타났다. 2000년 3월 10일 5,048.62이라는 최정점을 거친 이후에 시장의 낙관주의는 극에 달했으나, 이후의 사태는 이미 추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 닷컴 붐의 원동력인 창업주 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s)은 2000년 초 79건에 그 총액은 무려 106억 달러에 이르고 있었으나 2000년 한해동안 실제로 성사된 것은 20건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총액은 36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결국 시장의 침체가 단기에 그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어긋나고, 이 침체의 원인은 장기적 구조적인 것임으로 드러나면서 1년이 지난 2001년 3월의 시점에서 나스닥 지수는 최정점에서 60%나 하락해버리고 말았으며, S&P 500와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도 각각 17%, 7%씩 하락하고 말았다.

GE와 허니웰의 합병 좌절: 결혼식도 잔치도 끝이 났는가

Best 클릭 기사

1. '극우 준동 역풍'에 한나라 지지율...
2. "지금 데모할 국민이 1천만, 맞아...
3. 정형근 '원희룡 맹성토', "술먹고...
4. 동아일보, 자사에 불리한 '여론조사...
5. "美, 유사시 북한에 핵 30개 투...
6. 박근혜-황장엽-조갑제, 한 자리서 ...
7. 일본영화의 한국 2차상륙 시작되다

오늘의 기획 · 연재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산불

hari-hara의 '생물학 카페' <28> 산불 이야기

산불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일단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끝은 파멸...

- 김태규 명리학 <170>
- 오즈의 마법사와 미국 대선
- 한국의 아르헨 차관설과 중국의 언...

프레시안 PLUS

더불어숲학교
[제 18강] 김봉렬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건축과 교수)의 <한국 건축의 자연관>

내 영혼의 자유로...
오카리나학교
유승엽 선생님과 함께 만들고 배우고 감상하고...

한국문학예술학교
새 예술, 새 교육으로 가는 길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이우학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더불어숲

이러한 21세기 초의 급격한 사태 변화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한 세계 금융 시장의 사고방식(outlook)에 "인수 합병 축적 양식에 기반을 둔 어제의 세계"는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비관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제네럴 일렉트릭(GE)과 허니웰(Honeywell) 합병의 좌절이었다. 제트 엔진 시장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GE는 2000년 10월 우주 항공 산업과 자동차업의 유망한 생산업체인 허니웰과 합병 계획을 발표한다. 이 합병은 4백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서, 산업 회사의 합병으로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또 GE의 CEO 잭 웰치(Jack Welch)의 주장에 따르면, 두 회사는 거의 중복되는 생산 품목도 없으므로 이 두 회사의 결합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흠잡을 데 없는 합병"이라는 축복된 결혼이었다④.

하지만 이를 통해 GE는 그 크기를 거의 3분의 1을 늘여 기존의 위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였다. 이러한 사건 진행을 제트 엔진 업계의 그 다음 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nited Technology)와 영국의 롤스 로이스(Rolls-Royce)등이 가만히 좌시하기는 힘든 일이었으리라. 중간에 벌어진 일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 그분조차 모르실 수도 있다. 분명히 나타났던 바는, GE와 허니웰이 그 '축복된 결혼'을 매듭짓기 위해 입술을 부벼대려는 순간, 누군가 난데없이 식장에 뛰어들어 이 결혼은 무효라고 외치며 깽판을 놓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그 괴한은 다름 아닌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Competition) 마리오 몬티(Mario Monti)였다. 디트로이트 총각 GE와 뉴저지 색시 허니웰이 워싱턴의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 주례로 벌이는 이 '미국 결혼'에 어째서 이태리 엑센트 고약한 브뤼셀 공무원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게 된 것일까.

90년대 대서양을 건너는 무수한 합병 사례들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다. 미국도 EU도 자체의 시장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경제학자들이 항상 주장 하듯이 엄청난 크기의 과점 기업들이 치고 박는 경쟁 질서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한 독과점 규제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조치와 감찰이 없이는 그 '평화로운 시장'은 하루 아침에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대서양을 건너는 정도 규모의 인수 합병이 이러한 각각의 내부 구조와 법적 제도적 장치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합병은 워싱턴과 브뤼셀의 긴밀한 협조와 제도적 개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또 실제 그 협조는 상당히 성공적이기도 하였다⑤.

그 와중에서 EU는 유럽 내의 자본과 기업의 이익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만한 인수 합병 거래라면 그 거래가 지구 어디에서 누가 벌이는 거래이건 좌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미국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세계 연간 매출액 총액이 5십억 유로가 넘고 그 중 250만 유로 이상의 거래가 EU 15개국 사이에서 행해질 경우 그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EU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14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하여, GE와 허니웰의 합병은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서 독점을 초래하여 항공 산업 등등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를 낳게 될 것이라는 반대 사유를 분명히 하였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통상 대표 로버트 죌릭과 상무성 장관 도널드 에반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세 명은 입을 모아 이러한 유럽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고, 유럽인들은 이에 대해 부시 정권 출범 후의 계속된 일방주의적 행태를 들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제 싸움의 불똥은 제트 엔진 생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항공업으로까지 튀었다. 항공 산업이야말로 미국의 보잉(Boeing)과 유럽 대표 에어버스(Airbus)가 대립하는, 양 쪽 무역 경쟁의 가장 첨예한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보잉사의 부회장 해리 스톤싸이퍼가 저 부시 3인방을 거들어 유럽을 비난하면서 그 배후에는 에어버스사의 책략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르 몽드> 지와의 인터뷰에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에어버스 측에서는 자신들은 그 합병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보잉사 측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은 GE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방송 CNBC 뉴스에 나와, 이 사건이 향후 미국 유럽 관계에 큰 앙금을 남길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상 최대의 '결혼'이 파탄나면서, 창호지에 구멍 뚫을 준비를 하며 신이 나서 모여든 구경군 하객들도 된서리를 맞고 말았다. 6월14일 다우 존스 지수는 GE와 허니웰의 주가 폭락을 따라서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였고, 합병의 성사를 믿고 거래를 벌였던 선물 시장의 수많은 거래자들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⑥.

'초제국주의'의 종말?: 90년대와 '어제의 세계'

이 GE/허니웰 사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90년대 지구화와 인수 합병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누이 말했듯, 90년대의 '어제의 세계'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초국적적인 지배 계급의 긴밀한 협조와 합의를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한없이 유지하려면 정작 결혼하여 백년해로의 궁합을 다져야 할 쪽은 양국의 지배 세력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90년대의 세계를 지탱할 만한 사회적 조건들이 그 한계에 부딪혔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수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권력의 재분배는 궁극적으로 경기 참가자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경쟁을 낳게 되어 상호간의 "깽판놓기(sabotage)"를 낳고 만다. 게다가 이 항공 산업의 경우 유럽과 미국이라는 군사 권력

의 안보 이익과 첨예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 산업을 "순수히 경제적인 논리"에서 어느 한 쪽의 기업이 싹쓸이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권력의 재분배라는 것이 경제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EU와 부시 대통령, 보잉과 에어버스가 싸움에 끼어들기 시작할 무렵, 이미 쟁점은 애초의 그 알량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을 멀리 떠나, 미사일 안보 체제(Missile Defense System),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환경, 인권, 중동 질서 재편 등등의 모든 쟁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지배 계급 사이에 이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으로 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100년전 레닌과 카우츠키의 논쟁을 떠올리게 된다.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자였던 칼 카우츠키(Karl Kautsky)는 '전 세계의 자본가 계급이 하나로 뭉쳐서 평화롭게 세계를 공동 착취하는 초제국주의(Ultra-imperialismus)'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레닌의 반론의 논점은 아주 명확한 것이었다. 자본가와 지배 계급들이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독점적 권력의 달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갈등과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각자가 그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가 일치하면 그들도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협조와 화합을 일구어내기도 한다. 그것이 카우츠키가 논거로 삼은 전 세계 지배 계급의 협력의 양상이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들 지배 세력의 갈등의 계기가 전면화되게 마련이다. 즉, "경쟁과 협조는 독점 자본주의 자본가 계급 행태의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는 것이다⑦.

카우츠키의 현실 인식은 유럽 협조 체제(Concert of Europe)가 그나마 작동하고 또 각종 초국적 독점체도 만들어지면서 민족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국제 자본가 계급의 협력이 종종 나타나던 19세기 말의 세계를 모델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몇 번의 식민지 쟁탈전과 군국화를 거쳐 바야흐로 세계 대전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1914년의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카우츠키의 '어제의 세계'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이미 시대착오임이 분명한 것이었다. 카우츠키의 그 논문이 독일 사회민주당 기관지 "신시대(Neue Zeit)"에 공표된 것이 하필이면 1차 대전이 발발한 1주일 후였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격세지감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독일의 점잖은 '교양 신사'에 불과했던 카우츠키와 달리 좀 더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현실을 직면할 배짱이 있었던 '렌 강에서 온 깡패' 레닌은 그러한 세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에 이미 각국 지배 계급은 '갈등과 전쟁'을 자본 축적의 주요 계기로 삼는 쪽으로 관점을 바꾼 지 오래이고, 세상은 '임박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의 벽두에 분명해진 지구 정치 경제의 현실은,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의 풀은 말라가고, '과잉 생산'과 디플레의 위협은 번져가고, 정보 기술 혁명은 상당 부분 '허구(hype)'였음이 드러나고, 부시 정권과 유럽 지배 세력 사이에는 거의 모든 사안에 걸친 세계관과 정책의 차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슈테판 쯔바이크(Stefan Zweig)가 그의 자서전 <어제의 세계>에서 회상하는 유럽 그리고 그 한 복판에 피어난 꽃 비엔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고 열린 세계였다⑧. 하지만 그의 그러한 회상도 카우츠키의 경우처럼 노스탤지어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그 글을 쓰던 당시의 세계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틀러와 파시즘의 등장 이후 이제 유럽은 철과 바퀴가 지배하는 아비규환으로 바뀌었고, 유태인 쯔바이크는 독일을 떠나 긴 망명 끝에 결국 브라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이제 우리도 그가 겪어야 했던 것과 비슷한 일련의 역사 진행을 보게 되는 것일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90년대"는 끝났다. 금성무와 임청하도 영화 [중경삼림]에서 말한 바 있다. 사랑도 홍콩도 유통 기간이 끝나면 변하게 마련이다.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건 간에.

<주(註)>

① 조나단 닛잔, 심숀 비클러 저, 홍기빈 옮김, <권력 자본론: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넘어서>(삼인, 2004) 220쪽 이하 참조.

② 기업의 소유 구조나 금융 체제와 같은 경제 제도들의 형성과 변화는 이러한 지배 블록 내부의 헤게모니와 합의의 산물이라는 것이 '자본-통제 복합체(Capital-Control Complex)' 개념의 기본 생각이다. Gibin Hong, "The Concept of Capital-Control Complex: The Case of Japa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004(forthcoming).

③ Jonathan Nitzan, "The "Asian Miracle": How Close toMaturity?", The BCA Emerging Markets Strategist 1997, November, 5-10pp.

④ "The Anatomy of the GE-Honeywell Disaster" by Michael Elliot, The Time, July 8, 2001.

⑤ "US and EU Economic Policy: Cartels, Mergers, and Beyond" Address by William J. Kolasky,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U.S.Department of Justice, before the Council for the United States and Italy,

Bi-Annual Conference, New York, NY. January 25, 2001. 참조.

⑥ 이상의 정황은 다음을 보라. “US and Europe split on GE takeover of Honeywell”, By Chris Marsden World Socialist Web Site, June 21, 2001.

⑦ Karl Kautsky, “Ultra-imperialism” New Left Review, 1970. no.59; Vladimir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Selected Works of V.I.Lenin, vol. I. (Moscow: Progress Publisher, 1967).

⑧ Stefan Zweig, The World of Yesterday: An Autobiography, introduction by Harry Joh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4).

홍기빈/국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1세기 벽두, 도래한 디플레이션 위기"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24> 파국의 조짐과 '인플레이션 동맹'

2004-08-11 오후 4:32:50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V. 다가오는 세계: 군사화, 인플레이션, 불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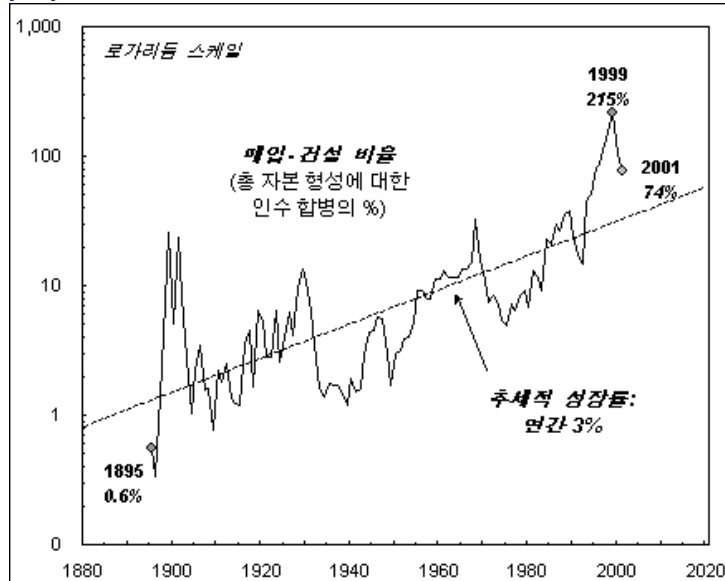
① 지배적 자본 집단과 세계 경제의 위기

앞에서 보았듯이, 21세기의 벽두는 1990년대를 풍미했던 '역사의 완성'과 지구화라는 낙관주의의 거품 너머 뒤숭숭하고 불길한 조짐들로 시작되었다. 그 불길한 조짐은 지배적 자본 집단의 차등화 축적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전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차등화 축적 차원의 위기: 인수 합병 붐의 종언

앞에서 보았듯이, 닛잔/비클러 이론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주된 추동력은 지배적 자본 집단(dominant capital)의 차등화 축적(differential accumulation)에 있다는 것이다①. 그리고 90년대에는 나스닥에서의 기술주와 금융 지구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 등장 등을 배경으로 지배적 자본 집단 간의 대규모 인수 합병이 차등화 축적의 주된 방식이 되는 '넓이 지향(breadth)' 축적 양식이 지배했다는 것이 닛잔/비클러의 주장이다. 그런데 1998년의 신흥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금융 위기 그리고 2000년의 나스닥 기술주 폭락을 거치면서 인수 합병의 붐도 함께 수그러들게 되고, 이에 넓이 지향 축적 양식은 더 이상의 차등화 축적의 주된 방법으로서의 위치를 잃게 되었다.

다음의 그림은 닛잔/비클러가 인수 합병의 추세를 살피기 위해 지표로 사용하는, '매입-건설 비율(buy-to-build ratio)'이다. 즉, 해당 기간의 인수 합병 거래액을 전체 고정 자본 형성으로 나눈 것이다.

[그림 1]

인수 합병의 최절정이었던 1999년 214%에 달하던 그 비율은 2001년에 74%로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여기서 닛잔/비클러가 차등화 축적 과정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는 논점을 기억해야 한다. 리카도 맬서스 등의 고전파 경제학이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의 '이윤율 저하의 경향'같은 것은 경제 행위 주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운동 법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차등화 축적이란 그러한 논리적인 '운동 법칙'이 전혀 아니다. 다른 사업체들보다 더 높은 이윤율을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지배적 자본 집단'—따라서 다분히 논리적 추상체인 고전파 및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총자본(capital in general)' 개념과도 크게 다르다—의 갖가지 실천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상태(stationary state)'나 공산주의 혁명이 도래할 그날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리카도나 마르크스의 자본 '축적' 개념과 달리, 이 차등화 축적은 벌어질 수도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배적 자본 집단이 자신들의 차등적 이윤율을 유지할 만한 책략이나 혁신 등에 실패하고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윤율이 평균보다 뒤쳐지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 차등화 축적(accumulation)이 아닌 차등적인 축적 감소(differential de-cumulation)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압도적인 힘과 크기를 가진 지배적 자본 집단이라고 해서 그들이 항상 차등화 축적을 이루게 해주는 보장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21세기 벽두에서 인수 합병이라는 방식이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곧 지배적 자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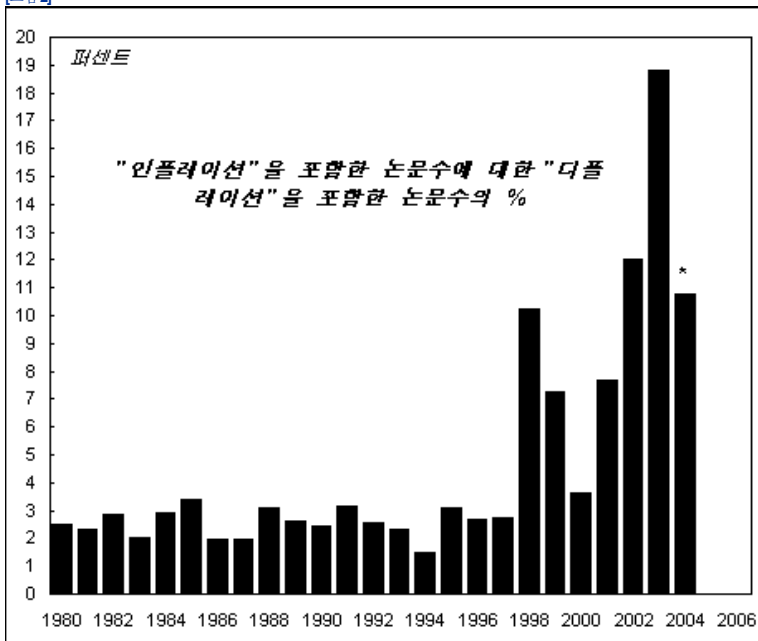
의 차등화 축적 자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큰 덩치의 인수 합병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땀 흘려 생산해 정직하고 값싸게 내다파는', 미시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맥 빠진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 활동으로 챙길 수 있는 이윤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땀 흘리는 개미'들인 약방 주인 아저씨나 중소 생산업체하고 똑같은 이윤율로 만족하란 말인가?

지배적 자본 집단에게는 이는 결코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크기와 권력을 십분 이용하여 특권적인 이윤율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위기: 디플레이션의 위협

1990년대 지구화의 또 하나의 귀결은 디플레이션의 위협이었다. 신흥 시장 그 중에서도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산업화와 엄청난 생산 수출 물량은 세계 시장 가격 하락의 주요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전 세계를 지배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보수적 금융 운영(financial orthodoxy)도 물가와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리하여 '주가는 오르고 고용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소위 '신경제(New Economy)'라는 관념이 유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②.

그런데 경제학 문헌에서 1940년대 이후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었다. 1930년의 대공황의 디플레이션 사태는 1930년대 말의 유럽 정세가 세계 대전으로 접어들고 각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소위 '군사 케인즈주의(military Keyensianism)'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수습되었고, 1940년 케인즈의 저작 <군비 조달론(How to Pay for War?)>의 출판 이후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악성 인플레이션을 막을 것인가에 맞추어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를 거쳐서 또한 이러한 디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는 처음에는 크게 들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1990년대의 말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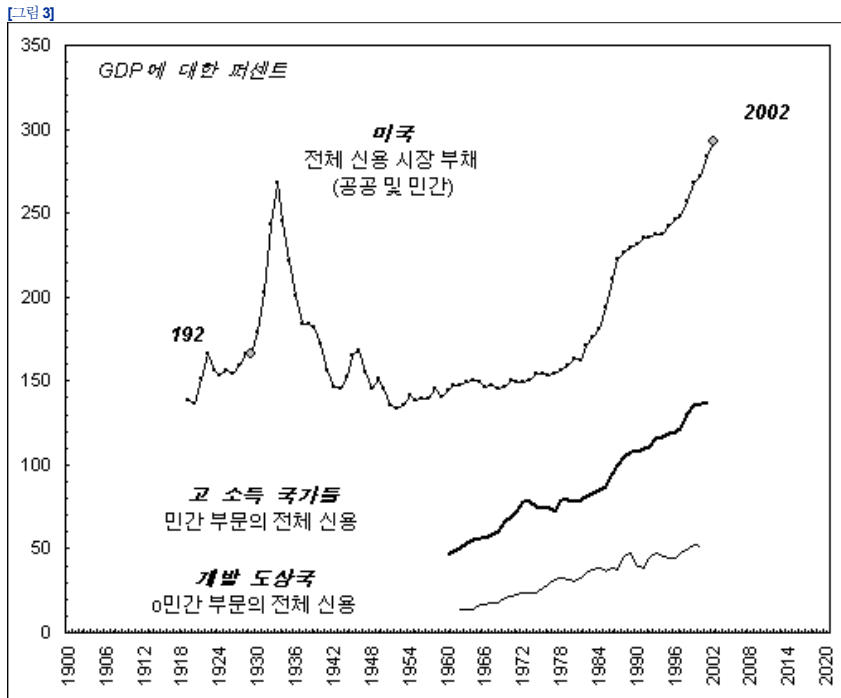
[그림 2]

198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 언급 논문의 비율은 3%를 넘지 못하는 적은 숫자였으나 1998년에 그 숫자는 네 배 정도로 늘어난다.

[그림 2]는 닛잔과 비클러가 이러한 공포의 확산을 검증하기 위해 작성한 흥미로운 시도이다. EBSCO의 Business Source Premier라는 데이타 베이스는 경제 경영 관련으로 영어로 된 2천8백개의 학술 저널 논문의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다. 텍스트 중에 인플레이션이 언급된 논문에 대한 디플레이션 언급 논문의 숫자의 비율을 매년 조사하여 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 언급 논문의 비율은 3%를 넘지 못하는 적은 숫자였다. 그러다 아시아를 필두로 한 신흥 시장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 위기가 벌어진 1998년에 그 숫자는 네 배 정도로 늘어난다. 과잉 설비 투자와 과잉 생산의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공기 중을 떠돌기 시작한다. 그러한 분위기도 1999년과 2000년의 시장 활황으로 누그러지는 듯 보였으나, 주식 시장이 내려앉았다는 것이 분명해진 2001년부터 다시 그 숫자가 급증하여 2003년 초 4개월의 기간에는 16%까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공포는 비단 지배적 자본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재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 전체의 부채 비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공포를 피할 길이 없다.

[그림 3]의 세 시계열들은 위부터 미국의 총 신용 시장 부채(공공 및 민간 부채), 선진국가들의 민간 부채,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채가 각각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시선을 잡는 것은 미국 경제의 총 부채 비율의 급증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부채 속도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재정 적자 팽창기의 그것과 맞먹는 것이었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의 불꽃 점화로 전체 금융 시장이 주저앉아버렸던 1929년과 2002년 현재 미국 경제의 부채 규모를 비교해보면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

을 수 없다. 후자는 전자의 두 배인 것이다! 대공황 직후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 GDP가 감소하면서 1934년께에는 그 비율이 바로 160%에서 270%까지 올라간 바 있다. 만약 똑같은 정도의 디플레가 오늘날 벌어진다면 미국 경제의 부채-GDP 비율은 400%가 되고 말 것이다.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상황도 크게 나을 것이 없다. 민간 부채만 가지고 1960년대 초와 비교해 보아도 전자는 3배, 후자는 4배로 그 비율이 급증해 있음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부채 속도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재정 적자 팽창기의 그것과 맞먹을 정도로 급증한다.

미국의 언론 등은 그래서 중국의 '과잉 수출'을 이러한 디플레이션 압력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보호 무역주의로의 선회를 옹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포의 확산을 반증하기라도 하듯 2002년 한 해 동안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에서 앨런 그린스펀에 이르기까지 틈만 나면 "디플레이션이 임박했다는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로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다. 누가 뭐라고 했는가. 필자도 이러한 이어지는 발언들이 오히려 그러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확인시켜주는 미묘한 효과만 낳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바 있다.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며

앞에서 우리는 인수 합병의 '넓이 지향' 축적 양식과 함께 지배적 자본 집단의 차등화 축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경제 불황을 틈탄 가격 상승이라는 '깊이 지향' 축적 양식을 논의한 바 있다. 크기에 있어서나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에 있어서나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지배적 자본 집단이다. 이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차등적인 우위를 이용하는 것에는 인수 합병—고관대작 집안끼리의 '결혼'에 비유할 수 있다—도 있겠으나, 자신들의 독점력을 가격 결정력(pricing power)으로 전환시켜 계속 가격을 높여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소위 인플레이션 악순환(inflationary spiral)이 시작되겠지만, 더 큰 독점력을 가진 이 지배적 자본 집단은 그 가격 인상 게임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이에 "평균을 능가하는(beating the average)" 차등적 이윤율의 자본 축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배적 자본이 이러한 가격 상승을 계속해 나가려면, 어느 몇몇 기업만의 가격 상승이 아닌, 경제 전체에 그러한 경쟁적 가격 상승이 하나의 규범(norm)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이미 기세가 꺾여버린 인수 합병 대신 가격 상승을 이용하여 차등적 자본 축적을 계속하려는 지배적 자본 집단에게 있어서 전체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희망 사항이 된다.

지배적 자본 집단 이외의 각 경제 행위자들도 인플레이션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 엄청난 액수의 차입을 해온 기업들 및 금융 기관 그리고 미국 정부(!) 모두에게 있어서 디플레이션과 그로 인해 발생할 자신들 부채량의 폭증과 공황은 상상하기 싫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과 지배 세력 전반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점 넓게 펼쳐지고, 그러한 단비를 불러오기 위한 가지가지의 기우제같은 행사들—중앙 은행의 팽창 기조의 통화정책 등—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진다. 즉, 지배적 자본 집단을 필두로 한 '인플레이션 동맹'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 닛잔/비클러의 진단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이 깊이 지향 축적 양식의 '인플레이션 동맹'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추 세력이 있다. 바로 우리가 오래 전에 살펴본 바 있는 군수 석유 자본 동맹(Petrodollar-Weapondollar Coalition)이다. 이들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과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현재 지배적 자본 집단과 경제 전체가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또 밀턴 프리드만 이하의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입을 모아 인플레이션이란 그저 '화폐적 현상'일뿐 '실제 경제'에는 아무런 충격도 가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귀가 아프도록 가르치지 않았는가. 과연 인플레이션은 '마법'인가.

한 가지 더.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러한 '마법'이라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무엇인가. 유럽의 마법사들은 신통력을 얻기 위해 악마와의 계약을 서슴지 않았고, 그 대가는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 영혼을 악마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마법사들도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또 다른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처음의 악마보다 더 큰 마력을 얻음으로서 그 영혼의 지불을 계속 회피해나가는 식의 계략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인들의 '카드 돌려막기'와 흡사한 이런 전술도 결국 그 말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 유명한 16세기 독일의 파우스트 박사 같은 이는 결국 온 몸이 갈가리 찢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들 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마법에 따르는 대가는 어떤 것들인가.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주(註)>

① 이 연재 1장 4절(책은 2장 4절)과 2장 2절(책은 3장 2절) 참조. 또 조나단 닛잔, 심숀 비클러 저, 홍기빈 옮김, <권력 자본론: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넘어서>(삼인, 2004) 7장 참조.

② 곧 보게 되겠지만, 닛잔/비클러의 시각에서 보면 통념과는 달리 경제 성장은 본래 디플레이션적인 경향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신경제'라는 현상은 별로 이상하거나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홍기빈/국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인플레이션을 통한 자본 축적의 비밀 "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25>** '인플레이션'이라는 마술

2004-08-23 오전 11:21:25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V. 다가오는 세계: 군사화, 인플레이션, 불황

② 인플레이션이라는 마술

앞 장에서 우리는 "인수 합병을 통한 차등적 축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배적 자본 집단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차등적 축적을 꾀한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인플레이션이 지배적 자본 집단과 일반 자본,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 커다란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이 되므로,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 현상이라는 위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립된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양쪽의 주장과 논리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닛잔/비클러는 그러한 경험적인 조사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존 경제학의 두 가지 핵심 주장을 정면에서 논박한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화폐적 중립적" 현상이 아니라 대단히 강력한 소득 재분배 장치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경제 현상에 대한 통념과는 달리 경제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70년대 주류 경제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침체(stagnation)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벌어지는 현상)'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

"인플레이션은 중립적 현상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다. "인플레이션은 소득 (재)분배와는 관련이 없다". 경제가 '실물' 부문과 '화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는 그저 전자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화폐 상품(numéraire)과의 교환 비율을 통하여 숫자를 매겨주는 장치에 불과하다. 즉 실물 교환 과정에 가격이라는 이름을 덮어주는 얇은 베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을 '고전파의 이분법(classical dichotomy)'라고 한다.

따라서 가격의 전반적 상승을 일컫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실물 부문에서 기인하는 현상일 수가 없다. 단지 화폐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는 바람에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하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MV = PQ(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가격 총액, Q는 총 거래 수량)라고 하는 화폐 수량 방정식이다. 거래량과 유통 속도는 각각 (완전)고용 수준과 제도 및 관습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 P는 결국 통화량 M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상품의 명목치만 바꿀 뿐, 현실의 '실물' 경제나 실질 소득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은 이러한 관점을 간단히 요약한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며 중립적 현상이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본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모든 물건이 10배로 커졌다고 하자. 우리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모든 물건"이 10배로 커졌으므로 그들 간의 크기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하룻밤 자고 났더니 모든 물건의 가격이 10배로 커졌다고 하자.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모든 물건"이 10배로 비싸졌으므로 그들 간의 상대 가격–즉 교환 비율–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단순명료한 논리적 힘 때문에 이 화폐 수량설에 입각한 (신)고전파의 인플레이션 이론은 16세기의 장 보댕, 18세기의 데이비드 흄, 20세기의 피셔와 프리드먼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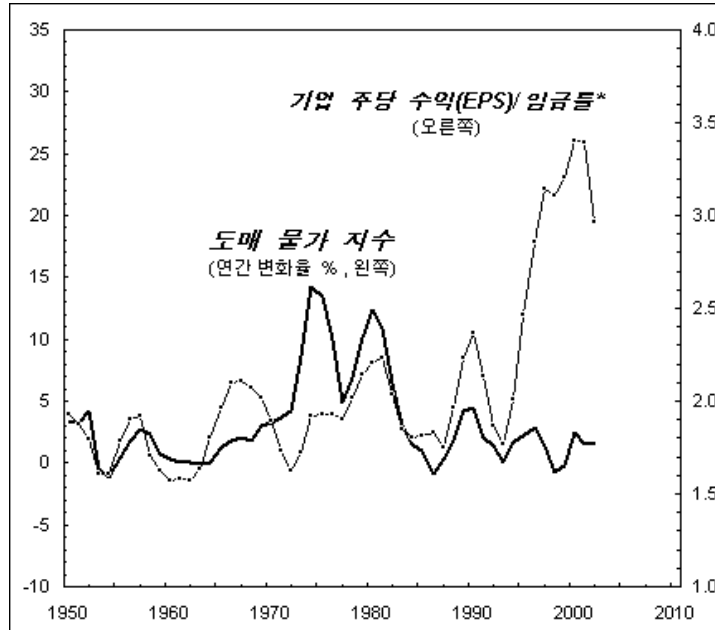
그런데 과연 그럴까. 문제는 그 "하룻밤 사이"라는 가정의 비현실성이다. 현실 세계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물건이 일제히 같은 비율로" 뛰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각각의 상품에 따라 산업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진행 속도와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 각 산업 부문별로 또 계급 계층 별로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분명히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신)고전파 이론은 이러한 현실적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은 이러한 인플레

이션의 현실적 과정을 무시하기 위한 장치로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돈 벼락(money rain)"의 예를 즐겨 쓰고 있다. (신)고전파의 이 비현실적 가정의 고질적 버릇은 수 백 년전 데이비드 흄의 저작에도 나타난다. "영국 전 화폐의 5분의 4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다고 해보자…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모든 노동과 상품들의 가격이 비례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는가?"① 아무리 '이론 경제학'이라지만 어떻게 이토록 비현실적인 가정 위에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의 인플레이션의 모습에 더욱 가깝다면,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pricing power)이 더 큰 집단은 더 먼저 더 빨리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이득–완전히 불로소득이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은 더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는 대단히 효과적인 축적 양식이라는 닛잔/비클러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이론적 사변은 별 소득이 없다. 어느 쪽이 옳은 지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벌어진 바가 어떠했는지를 경험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닛잔/비클러는 20세기 후반의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실제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자본 및 노동의 소득 재분배

[그림 1]은 1950년대 이래 미국 경제에서 자본과 노동의 소득 분배의 추이와 물가 지수의 추이를 비교해 보이고 있다. 가느다란 선으로 나타난 계열은 주당 수익(EPS: earnings per share)을 임금률로 나눈 것으로서 이것이 클수록 노동에서 자본 쪽으로 소득 분배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률은 민간 부문에서의 시간당 평균 임금으로 구하였다. 닛잔/비클러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을 개인 차원에서 포착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표를 선택하였다고 말한다. 굵은 선은 도매 물가 지수의 연간 변동률을 백분률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1] 기업 주당 수익은 S&P 500 지수에서 취하였다(주식 가격 대 PER). 임금률은 민간 부문에서의 평균 시간당 수익이다. 계열은 3년 이동 평균으로 그려졌다. 출처: Global Financial Data (series codes: _SPXD for price; SPPECOMW for price/earnings);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rough WEFA (series codes: AHEEAP for the wage rate; WPINS for the wholesale price index)

장 보댕에서 밀튼 프리드먼까지 5백년의 전통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 물가 상승률과 자본-노동의 소득 (재)분배의 변동은 대단히 긴밀한 연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50년이라는 이 계열의 시간 지평을 볼 때 그리고 미국 경제가 현대 경제학 논의의 거의 표준적인 모델인양 다루어져 왔다는 점을 볼 때에 이러한 관측 결과는 결코 우연적인 것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지난 50년간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항상 노동에 대한 자본 측의 소득 확대를 수반하였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 쪽이 인플레이션의 와중에서 얻는 소득의 재분배의 폭은 점점 커져 20세기 말엽이 되면 대단히 극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축적 양식으로 활용하는 자본의 권력이 미국 자본주의에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왔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지배적 자본 집단 및 중소 자본의 소득 재분배

닛잔/비클러는 이번에는 지배적 자본 집단과 여타의 일반적 자본 사이의 소득 재분배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중립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한다.

[그림 2]에는 두 개의 계열이 그려져 있다. 첫째, 굵은 선으로 그려진 것은 도매 물가 지수 연간 변동률이며, 가느다란 선으로 그려진 것은 포춘 5백대 기업을 지배적 자본 집단의 대표로 삼아 그 마크업을 전체 자본의 마크업으로 나눈 것이다. 마크업(mark-up)이란 보통 매출에서 순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해

당 기업이 시장에서 어느 만큼의 가격 결정력(pricing power)을 갖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인다. 따라서 가느다란 선은 전체 자본에 대해 지배적 자본 집단이 보유하는 독점적 권력과 차등적 이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닛잔/비클러는 이를 칼레츠키(Michal Kalecki)가 독점 자본의 시장 권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독점도(degree of monopoly)'의 개념과 비교한다②. 즉, 이 두 계열을 비교해보면 과연 지배적 자본 집단이 자신들의 우월한 가격 결정력 등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을 틈타 전체 자본에 대한 이윤폭을 늘리는 '깊이 지향'의 차등화 축적이 벌어졌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마크업(markup)은 매출에 대한 순 이윤의 비율이다. 포춘 500 마크업은 매출 수입에서 세금 후 이윤의 비율로 계산한다. 영업 부문 마크업은 전체 세금 후 법인 이윤 및 IVA와 CCA(국민 소득 계정에서 취하였다)를 전체 영업 영수증(business receipts)(IRS에서 취하였다)로 나눈 것이다. '마크업 비율'은 그 포춘 500 마크업을 영업 부문 마크업으로 나눈 것이다. 주의: 1993년까지는 포춘 500에는 산업 기업(매출 수입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 및 광업에서 나오는 기업)만 포함되었다. 1994년 이후로 모든 기업이 포함되게 되었다. 1992-3의 기간 동안 포춘 5백대 회사의 자료는 SFAS 106 특별 부과가 빠진 채로 보고 되었다. 모든 계열은 3년 이동 평균으로 다듬어졌다.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through WEFA (series codes: ZAADJ for total corporate profit after tax with IVA and CCA; WPINS for the wholesale price index); U.S. Internal Revenue Service; Fortune.

이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결과는 5백년 전통의 (신)고전파 이론의 참담한 패배이다. 인플레이션이 "중립적"인 현상이기는커녕 지난 50년간 미국 경제에서 두 계열의 상관관계는 너무나 긴밀하여 거의 체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대기업이 자신들의 가격 결정력을 이용하여 평균적인 기업들에 대해 차등적인 이윤을 얻는 기회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소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경제에서 보이는 바, 인플레이션은 결코 "중립적" 현상이 아니다. 노동에서 자본으로, 또 중소 규모 자본에서 지배적 자본 집단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과 대단히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는 조직적 체계적 현상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 그래서 닛잔/비클러가 주장하듯, 인플레이션은 자본이 노동을, 또 지배적 자본 집단이 평균적 자본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축적을 가속화시키는 '축적 양식'이라는 가능성이 점점 짙어진다.

<주(註)>

① David Hume, "Of the Balance of Trade"in E. Rotwein ed. Writings in Economics(Madison: Wisconsin Univ. Press, 1955). pp. 62~3.

② Michal Kalecki, "Costs and Prices", in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1933-19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p.
43~61.

이 연재는 Jonathan Nitzan과 Shimshon Bichler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료는 www.bnarchives.net에서 구해볼 수 있다. 특히 4부의 내용은 그들의 최근 논문 "Dominant Capital and the New Wars."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10 (2, August): 255-327.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논문은 http://jwsr.ucr.edu/archive/vol10/number2/ 에서 볼 수 있다.

홍기빈/국제정체경제 칼럼니스트

◀ 이전기사 다음기사 ▶ 전체리스트 필자의 다른기사 편집자에 의견보내기

"인플레이션,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일으키는가 ?"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26>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위기'

2004-08-25 오후 5:35:59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V. 다가오는 세계: 군사화, 인플레이션, 불황

3.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위기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에 관하여 경제학 교과서까지 뒤질 것도 없이 아예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유인력의 법칙 만큼이나 굳어져 있는 통념이 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과 경기 과열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며, 성장 부진과 경기 침체는 물가 하락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도 실로 그 유래가 깊은 것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논리는 20세기의 케인스 경제학에서 성립하였다. 소비, 투자, 재정 지출 등이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전체 경제의 고용 수준도 올라가고 총 산출도 늘어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그 대신 가격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하여 완전 고용 상태를 넘어설 만큼 총수요가 늘어날 경우엔 가격의 증가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케인스 경제학의 이론은 필립스 곡선(Philips' Curve)이 발견되면서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리하여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라는 통념은 한 때 신앙과 같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여기에서 전형적인 케인스주의적 경제 정책의 지침이 나온다.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개의 바람직한 목표는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다. 하나를 추구하려면 다른 쪽을 희생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 같은 것이다(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영어로, 'trade-off' 관계에 있다고들 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는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나 재정 지출 확대 등의 '성장' 위주 정책을 할 것인지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 등의 '안정' 위주 정책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엄숙한 결론을 도출한다.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비스켓을 먹고 또 가질 수는 없다"는 자연의 섭리가 다시 한번 장엄하게 확인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이러한 비장미 넘치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의식(儀式)에 한바가지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다. 물가는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건만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처박히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조합이 나타난 것이다. 한때 케인스 경제학에 밀려나 있던 (신)고전파 전통은 밀턴 프리드먼 등의 통화주의(Monetarism)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맹공을 가한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이들은 원래 경제의 고용 수준은 '실물' 부문의 상황에 따라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등의 '화폐' 부문에서의 정책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케인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한다"는 미명 아래 방만한 통화 정책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듯 실제의 고용 수준은 그런 바람은 전혀 아랑곳 않고 떨어지고 있으며, 방만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만 잔뜩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고용 수준은 인간의 뜻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 시장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신의 뜻이다. 현실의 산출 수준과 고용 수준은 바로 그 신의 뜻에 의해 결정된 '자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이제부터라도 "통화 정책을 통한 완전 고용 달성과 경제 성장"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자연적 실업률'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통화 가치 안정에나 주력하여라.

결국 전혀 반대되는 두 개의 주장이 각자 '신의 섭리'라는 거창한 차원의 옷을 입고 맞부딪히는 형국이다. 한쪽은 경제 성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것이 섭리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은 경제 성장이란 '자연적' 실업률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느 쪽 신이 경제를 지배하는 분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의 경험을 보도록 하자.

[그림 1] 불변 가격 GDP에 대한 당시 가격 평가 GDP의 비율. 주의: 계열은 20년 이동 평균으로 그려져 있다. 관측치들 사이를 지나는 부드러운 곡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 손으로 그린 것이다. 출처: 1928년까지의 자료는 The Bank Credit Analyst Research Group. 1929년 이후는 U.S. Department of Commerce through WEFA (series codes: GDP for GDP; GDP96 for GDP in constant prices).

넛잔과 비클러가 작성한 [그림 1]은 지난 1890년에서 2002년까지의 1백12년간 미국 경제의 실질 GDP(가로축)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세로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케인스주의자들이 옳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도 높아야 하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화주의자들이 옳다면 경제 성장률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아래위로 곧바로 선 막대(혹은 막대들)의 모습을 띠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결과는 양쪽 다 빗나간 것 같다. 강한 상관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림 1]은 그 둘의 관계가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소하는 음(-)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과 신의 싸움은 코미디로 끝난 느낌이다.

지난 1백년간의 미국 경제가 "예외적인" 경우일까? 넛잔/비클러는 절대 아니라고 한다.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걸쳐 다양한 나라들의 경우를 조사해보지만, 위와 같은 패턴은 항상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①. 게다가 20세기 후반의 경제학은 거의 암묵적으로 미국 경제를 '표준'적인 모델로 삼아왔다는 점을 볼 때에 더 더욱 당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케인스주의자이건 통화주의자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 현대 경제학의 스캔들의 하나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림 1]이 보여주는 현실의 경험은 결국 통념과는 정반대로, "경제 성장은 물가 안정이나 하락을 수반하며,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20세기 내내 미국 경제에 나타났던 일반적인 경향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는 케인스 이론이나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넛잔/비클러는 도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이론에 입각하여 보면 이는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설명한다②. 이 연재의 앞에서 보았지만, 베블렌은 19세기 말 폭발적인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 2차 산업 혁명 이래 현대 자본주의는 만성적인 '과잉 설비' 상태에 있다고 본다. 그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격 인하와 과당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자본의 이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생산 설비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행사하여 증대되는 사회적 생산에 "깽판을 놓는(sabotage)" 것이야말로 영리활동(business)의 핵심이요 이윤의 원천이라는 것이 베블렌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생산이 마구 증대되고 생산 설비가 증대되는 경제 성장기에 가격 수준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반면 사회적 생산의 핵심 주요 부분을 장악한 대자본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과 고용 증대를 억제하고 자신들 상품의 가격을 마구 인상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도 또한 필연적이다. 요컨대, 베블렌의 관점에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말로 대자본의 "깽판놓기"가 본격적으로 보여지는 '당연한' 현상인 셈이다.

하지만 베블렌이 옳다고 한다 해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몇몇 대기업의 가격 인상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전 경제 때로는 전 세계 경제에 걸친 전반적인 가격 수준의 상승인 것이다. 그 대

기업들이 제 아무리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또 그들의 생산물이 전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제 아무리 비중이 큰 것이라 해도 그들 몇몇의 경제적 영향력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심지어 원유와 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품조차도 그 하나의 가격 인상으로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자본주의에서의 가격 결정은 시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몇 행위자들이 섣불리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경쟁자들에 의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십상이다. 따라서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지배적 자본 집단에게 매력적인 축적 방식이라고 해도, 마치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 마음껏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전체 경제에 보편화된 정상적 행위(norm)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과 정치 경제학: 누가 이익을 보며 누가 일으키는가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1970년대 케인스주의자와 통화주의자들의 논쟁은 단순한 경제 이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위기의 70년대'를 통과하던 서구 사회가 겪고 있던 정치, 외교, 사회 전반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진단할 것인가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다.

케인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사회의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을 주요 모토로 삼는다. 이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재량적인 통화 정책을 통하여 금융 자본의 횡포를 막고 실물 투자를 조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또 재정 확대를 통해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는 길을 택한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전후 서구 국가에 보편화되었던 "조합주의적 복지 국가" 모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노동은 강력하게 조직되어 임금 인상 등의 경제적 사안은 물론 국가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왜곡된 분배를 시정하기 위해 정치 사회적인 논리와 명분을 앞세워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그래서 케인스주의 경제 이론에 대한 통화주의자들의 공박은 이러한 '복지 국가' 정치 경제 모델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이어진다. 경제는 '실물' 부문에서의 시장의 자연적 조화에 의해 지배되는 것인데 국가가 이리저리 개입한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앞에서 보았다. 이들은 그러한 국가 정책의 어리석음의 원인을 지나치게 강한 노동조합과 각종 '이익 집단'들이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에서 찾는다. 시장의 자연적인 균형과 규율에 따르기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이들 다수가 숫자를 앞세워 정치와 사회 제도 곳곳을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비슷한 시기에 사뮤엘 헌팅턴 등이 내걸었던 '민주주의의 과잉' 명제와 연결되어 정치적 이념으로 변모한다. 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고 노동자 학생 빈민 할 것 없이 모두 지나친 요구를 서슴지 않아 시장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유린된 것이 경제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하나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으로 갈무리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났던 모습은 1070년대 말 경찰과 법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분쇄하고 소위 '영국병'을 치유한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 수상에게서 볼 수 있다. "오직 개인들만 있을 뿐이다. 사회란 없다(there is no society)"라는 유명한 모토를 앞세워 시장과 사유화의 원리 이외의 복지 재정 상호 부조 등 모든 사회적 정치 경제 제도를 분쇄해버린 이 대처 정권이 바로 이후 전 세계를 휘감게 되는 신자유주의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논쟁은 시장 자본주의의 실패, '수정 자본주의'의 대두와 신자유주의로의 역전이라는 지극히 20세기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드러난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민주주의이다"라는 비판의 논점은 사실 대단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서구 사상사에서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말로 변한 것은 극히 최근인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벗겨먹기 위해 숫자로 밀고 들어오는 정치 체제"라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정의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성립된 민주주의 정부가 부자들을 벗겨먹는 방법이 바로 멋대로 싸구려 화폐를 남발하는 것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시대 숱하게 남발되었던 악화(惡貨)의 가장 큰 원인은 황제들이 평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다한 재정 지출에 있다는 비판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확립된 19세기 이래 유럽과 미국의 유산 계급은 항상 민주주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의 한 사람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신생 미국이 민중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경우 악화의 남발로 부르주아 질서가 위협 당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유명한 일이다. 이후 미국 역사에서 인민주의자들(populists)은 항상 '지폐 달러(greenback)'를 옹호하며 안정된 통화 가치를 요구하는 월 스트리트와 맞서는 이들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탐욕스런 빈민들의 염치없는 요구에 힘없이 끌려가는 민주정부야말로 화폐 가치 불안의 원인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일견 새로워 보이는 프리드먼 류의 주장은 사실 이 오래된 유럽 지배 계층의 사고방식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 조금 다른 논리적 구조를 갖추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래 물가 불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물가 인상의 주범은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는 논리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표출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자. 인플레이션의 와중에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서민들 노동자들인가?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기존의 경제의 분배 구조를 급격하게 재편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는 바는, 그러한 급격한 재편 뒤의 결과가 거의 예외 없이 '빈익빈 부익부', 즉 성경 말씀처럼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기는" 것이라는 점이다. 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험도 그러했지만, 닛잔/비클러가 작성한 위의 [그림 1, 2]는 미국의 경우에도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화폐 경제는 실로 복합적이고 복잡한 체제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그 복잡한 화폐 경제에서 시작하여 사회 구조 전체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더더욱 복잡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러한 복잡한 사정을 일체 무시해버리고 그 단순하기 짝이 없는 화폐수량설이라는 단선적 논리 하나를 내세워 인플레이션은 모두 빈민들에게 장악된 민주주의 정권의 통화 증발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프리드먼 류의 주장은 사실상 20세기 초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집산주의자의 음모(Collectivists's Conspiracy)"와 궤를 같이하는 '음모이론'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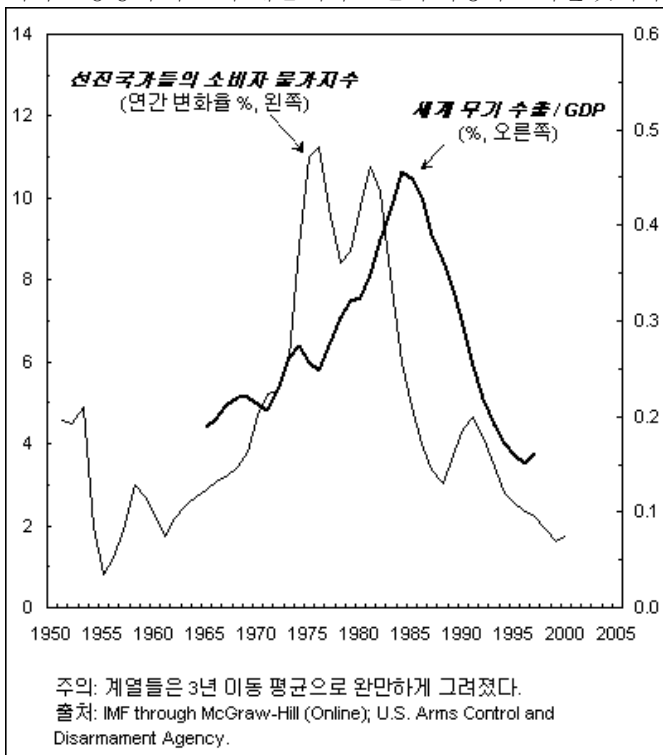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 '음모 이론'으로서도 어설픈 구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음모 이론의 첫 번째 황금률은, "주모자는 항상 그 사건을 통해 최고의 이득을 보는 집단이다." 최소한 지난 50년간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나 중소 자본이 아닌 지배적 자본 집단에게 큰 이득을 안겨주는 재분배 효과를 낳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도하는 추동력은 그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지배적 자본 집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은가?

인플레이션, 사회적 위기, 전쟁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몇몇 자본의 음모와 가격 담합 같은 것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행동 양식(regime) 차원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속어에 '개판'이라는 말이 있다. 그 정확한 어원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이 뜻하는 상황은 정치·사회학적으로 음미해볼 만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경향을 제멋대로 풀어두게 되면 전체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향을 억제하는 것이 전체 집단 차원에서의 규범(norm)이 되고,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촉발의 계기가 주어지고 그러한 규범이 흔들리게 되면 한 명 두 명 그 경향을 막 드러내게 되고, 이에 따라 모두 일제히 그 혼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전체의 규범 자체가 아예 그러한 혼란스러운 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바뀌고 만다.

노천극장 같은 곳에서는 모두 다 앉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것을 다 알기에 보통 평화롭게 앉아서 보는 행위 규범이 지켜진다. 그렇지만 꼭 중요한 장면만 되면 저 혼자 더 잘 보겠다고 일어서는 미운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도 일어서고 순식간에 모두 일어서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때는 키 큰 사람이 '장땡'이며, 올라탈 수 있는 아빠의 어깨를 가진 꼬마가 '장땡'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혼란이 벌어지려는 찰나의 상황을 지칭하는 '개판 5분전'이라는 말도 있다. 즉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전체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일종의 행위 규범이 되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모두 사람이 아닌 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바로 이 '개판'이라는 말이 지칭하는 바일 것이다.

주의: 계열들은 3년 이동 평균으로 완만하게 그려졌다.
출처: IMF through McGraw-Hill (Online);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닛잔/비클러가 이해하는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메커니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개판'과 대단히 가깝다. 시장의 구조는 보통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권력 배치 상태에 따라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구조의 균형 상태를 함부로 교란할 수는 없으며, 자칫하면 구조 전체에 의해 철퇴를 맞는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배적 자본 집단이 이러한 기존 상태의 족쇄를 벗어나 마음껏 가격을 올리는 축적 양식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재구조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일종의 '개판'과 같은 상황으로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점잖은 사회 과학적 표현으로 쓰자면,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social crisis)'가 필요하다. 이것이 닛잔/비클러의 시각이다.

[그림 2]

20세기에 걸쳐 나타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개판'에 맞먹는 사회적 위기를 수반했던 경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1차 대전 후 완전히 붕괴된 가운데 초유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1920년대 독일 사회가 그러했고, 1970년대 중동 전쟁 및 석유 위기가 그러했고, 1990년대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 2001년 아르헨티나의 부채 지불 정지 등의 상황이 모두 그러했다. 그런데 사회 전체를 그러한 '개판'과 같은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최적의 계기는 무엇일까. 닛잔/비클러는 전쟁이나 군사적 분쟁이야말로 그 대답이라고 본다. 그들은 [그림 2]를 통하여 20세기 후반 선진국가들에서의 인플레이션과 무기 수출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창궐했던 70년대가 세계적인 군사 분쟁과 갈등의 시기이기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위의 두 계열이 보여주고 있는 긴밀한 상관관계는 그러한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림의 세계 무기 수출량의 계열은 물품이 교부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인데, 무기 시장에서 계약 성사에서 실제 교부 까지는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것이 통례이다. 그것을 감안하여 무기 수출량의 계열을 3년 정도 왼쪽으로 당겨서 겹쳐본다면, 두 계열은 거의 한 쌍의 신크로 수영 선수들의 다리만큼 절묘한 일치를 선사하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치는 과연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세계적인 군사적 위기의 증대는 '사회적 위기'를 통하여 가격 결정력을 십분 이용하려는 지배적 자본 집단의 축적 전략이라는 동전의 두 측면인 것일까. 후자의 가능성이 함축하는 바는 실로 혐오스런 그림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논리로 그것을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 분명하다. 정말 닛잔/비클러가 주장하듯이 인플레이션과 거기에 수반되는 군사 분쟁과 사회적 위기가 새로운 축적 전략을 노린 지배적 자본 집단의 주도하에 벌어지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런 일을 주도하는 '지배적 자본 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집단이며 어떤 동기와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음 회에 살펴볼 내용이다.

<주(註)>

① 선진국가들의 1968년 이후를 놓고 작성한 그림은 심숀 비클러, 조나단 닛잔 저, 홍기빈 옮김, <권력자본론 :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넘어서>(삼인, 2004), 251쪽 참조. 필자는 어떤 세미나에서 닛잔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느 나라이든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를 보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

② 닛잔/비클러가 이해하는 바의 베블렌의 경제이론의 골자는 <권력자본론> 5장 참조. 또 베블렌의 자본이론에 대해서는 홍기빈 편역, <자본의 본성과 축적에 관하여>(책세상, 근간) 참조.

이 연재는 Jonathan Nitzan과 Shimshon Bichler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료는 www.bnarchives.net에서 구해볼 수 있다. 특히 4부의 내용은 그들의 최근 논문 "Dominant Capital and the New Wars."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10 (2, August): 255-327.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논문은 http://jwsr.ucr.edu/archive/vol10/number2/ 에서 볼 수 있다.

홍기빈/국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군사-석유 자본 동맹의 '화려한' 부활"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27> '부활,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

2004-08-27 오전 10:06:52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V. 다가오는 세계: 군사화, 인플레이션, 불황

4. 1990년대: 군사-석유 자본 동맹과 기술-합병 자본 동맹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본다. 1990년대에 지배적 자본 집단이 평균적 자본의 축적을 능가하는 차등화 축적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은 지구적 규모에서의 인수 합병이었다. 그런데 2000년 벽두로 들어오면서 그러한 인수 합병의 물결은 분명히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지배적 자본 집단이 평균을 능가하는 실적을 올릴 방법이 모호해지고 말았다. 만약 이렇게 되어 이들의 자산 증가율도 평균적 자본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만다면 이는 그 지배적 자본 집단의 입장에서는 참기 힘든 '차등화 축적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인수 합병 이외에 차등화 축적을 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 있다. 이는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가격 결정력으로 전환시켜 가격 인상을 통하여 매출에서의 이윤율(마크업)을 증대시키는 '깊이 지향' 축적 양식이다.

인플레이션을 그리워하는 소리는 이들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서도 나오기 시작한다. 1990년대에 계속된 경제 성장과 과잉 설비 투자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격 수준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세계 각국 경제의 부채 비율은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 위기가 촉발될 경우 그 결과는 실로 걷잡을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고, 특히 2000년 기술주 폭락 이후로 이러한 우려는 주요한 경제 행위자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기조로 옮아가는 것이 지배적 자본 집단의 이익에서나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나 강력하게 선호될 만한 조건이 창출되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최소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경제의 경험을 볼 때에,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장과 달리 노동에서 자본으로 또 중소 자본에서 대규모 자본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강한 경향을 갖는다. 또 통념과 달리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이 아닌 전체 경제의 침체를 동반하는 경향을 띠며, 따라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오히려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아야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몇몇 개별 행위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몇몇 개별 행위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행위 규범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전반적인 것이며, 또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의 구조가 재구조화되는 근본적인 '사회적 위기'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전환하기 위한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체 경제의 행위자들이 발맞추어 인플레이션으로 행위 규범의 전환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신호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전환에 필요한 전체 사회에 걸친 위기는 특히 전쟁과 같은 군사적 분쟁 갈등의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연재의 2부에서 보았던, 닛잔/비클러가 군사-석유 자본 동맹(Weapondollar-Petrodollar Coalition)이라고 불렀던 집단의 동향에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인플레이션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이 두 개의 조건을 창출하는 데에 대단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원유 가격 인상

현대의 세계 경제에서 원유는 분명히 가장 비중이 큰 기본 생산 요소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원유 가격 상승-원가 상승-국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짓는 통념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닛잔/비클러는 이러한 인과 관계 설정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다. 분명 원유가 상승이 비용 상승에 끼치는 영향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각국의 기술 개발 등의 노력으로 에너지 효율성은 두 배로 늘어온 반면 원유의 '실질'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해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80년까지만 해도 원유 생산 총액은 세계 총 생산의 7.5%를 점유했으나 2001년이 되면 2.1%까지 하락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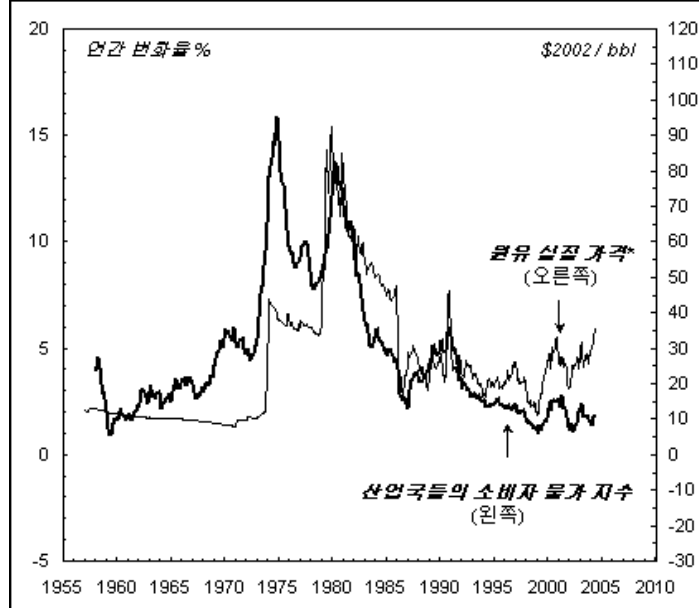
Best 클릭 기사

1. '극우 준동 역풍'에 한나라 지지율...
2. "지금 데모할 국민이 1천만, 맞아...
3. 정형근 '원희룡 맹성토', "술먹고...
4. 동아일보, 자사에 불리한 '여론조사...
5. "美, 유사시 북한에 핵 30개 투...
6. 박근혜-황장엽-조갑제, 한 자리서 ...
7. 일본영화의 한국 2차상륙 시작되다

오늘의 기획·연재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산불
hari-hara의 '생물학 카페' <28> 산불 이야기
산불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일단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끝은 파멸...

- 김태규 명리학 <170>
- 오즈의 마법사와 미국 대선
- 한국의 아르헨 차관설과 중국의 언...

하지만 이 연재의 2장에서 보았듯이, 닛잔과 비클러는 원유가의 결정 요인이 실제의 공급량이나 비용보다는 '희소성에 대한 인지(perceived scarcity)'와 같은 심리적 요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원유의 공급이 '물질적으로' 희소한가 아닌가보다 장래의 경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원유가를 좌우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원유 가격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 전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에 필적하는 강한 심리적 외상을 입은 바 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세계 경제의 원가에 끼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어떠한가와 무관하게, 1970년대에 놀란 적이 있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원유 가격의 상승은 여전히 물가 전반의 동향을 결정짓는 대단히 강력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원유 가격의 상승은 대단히 강한 예측력을 보여주는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가 될 것이다. 닛잔/비클러는 다음의 그림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림 1] 미국 소비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불변 달러로 표현한 원유가. 출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through WEFA (series codes: L64@C110 for CPI in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L76AA&Z@C001 for the price of crude oil; L64@C111 for the U.S. CPI).

1970년대 초까지의 소위 석유의 '자유 공급(free flow)'의 시대에는 원유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었기에 물가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970년대 초의 1차 오일 쇼크 이후 원유 가격의 등락과 선진국 물가 수준의 등락이 보여주는 상관관계는 대단히 밀접한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두 계열의 시간차이다. 두 계열의 등락의 시점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원유 가격의 등락이 물가 수준의 등락에 항상 몇 개월씩 먼저 벌어졌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원유가 등락, 인플레이션, 또 이윤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1]이나 또 이 전의 연재에서 나온 그림들은 모두 반세기 정도의 시간 지평에서의 추세를 보이는 것들이다. 세계 경제의 주된 행위자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되게 반복되는 추세와 패턴이라면 분명히 학습하고 인지하여 행동 결정의 길잡이로 삼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따라서 닛잔/비클러는 원유 가격 상승이 지배적 자본 집단을 포함한 전체 경제의 행위자들에게 '인플레이션'으로 행위 규범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효시(嚆矢)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2장에서 흔히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OPEC 국가들과 주요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원유 가격의 인상을 놓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닛잔/비클러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인플레이션의 촉발에 있어서 석유 자본의 동향과 위치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만한 이유이다.

1990년대: '인동초'가 된 군사-석유 자본

군사 자본에게나 석유 자본에게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지구화' 시대는 실로 고된 시절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 연재의 3장에서 보았듯이, 시장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발맞추어 벌어진 세계적 인수 합병의 축적 양식은 석유 자본 그리고 군사 자본의 이익과 정반대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어제의 세계'를 떠받치던 몇 가지 주요한 조건들이 있다. 세계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구적 자본의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신흥 시장들(emerging markets)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높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를 엔진으로 삼아 세계 경제 전체도 성장한다. 또 이러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매개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적인 금융 자본의 이동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식 가격은 안정된 상승세를 보이고 긍정적인 사업 전망

의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를 이용하여 대규모 기업들은 주가 상승의 과대 평가 효과(hyping)를 노리는 인수 합병에 착수한다. 이렇게 굴러가는 세계 경제에 '쥐약'처럼 해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가 상승과 군사 분쟁일 것이다.

[그림 2] 출처: Nils Petter Gleditsch, The Peace Dividend (Amsterdam and New York: Elsevier, 1996); U.S. Department of Commerce through WEFA (series codes: GDP for GDP; GFML for military spending).

유가 상승은 신흥 산업국들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환율 변동 등의 불확실성으로 자본의 이동성을 저해하며, 전체적인 사업 전망의 예측을 비관적으로 하거나 불투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낙관적인 장기 전망을 전제로 한 인수 합병 등의 프로젝트에 큰 걸림돌이 된다. 군사 분쟁이나 지구적인 전쟁 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중심부 국가들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국지적인 몇 개의 분쟁이면 모를까, 강대국들의 이익이 전면적으로 얽힌 지정학적 요충지나 중근동 등에서의 군사 분쟁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s)'과 '석유에 절은 세상(world awash with oil)'이 1990년대의 경향을 포착하는 두 개의 중요한 핵심어가 된다. 1980년대 초만 해도 한때 배럴 당 80$(2002년 불변 달러)에 달했던 원유 가격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락하여 1999년 급기야 10$까지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식의 축적 양식이 절정을 달리던 당시 이러한 낮은 유가는 필연적인 것이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1999년 3월 6일자 이코노미스트 지(The Economist)의 기사 "석유에 빠져 죽는다(Drowning in Oil)"는 '세계가 석유에 절어'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듯 하다'고 예측한다.

군수 자본 쪽의 상황도 좋을 리가 없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군사 지출 삭감을 막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GDP 대비 군사 지출은 대폭 삭감되고, 2000년의 3.8%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이 숫자로만 보면, 미국은 이제 2차 대전 이전의 '고립주의 미국' 수준으로 되돌아가고만 셈이다.

결국 1990년대는 군사-석유 자본 동맹에게는 실로 어려운 시절일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의 세계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들도 그 시절을 참고 버티는 것 밖에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기술-합병 자본 동맹과 군수-석유 자본 동맹

이렇게 창졸간에 '인동초'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지배적 자본 집단 내에서 군수-석유 자본 동맹의 실적이 저조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적의 추이를 차등화 축적의 관점에서 더욱 흥미롭게 고려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요소가 또 하나 있다. 이는 닛잔과 비클러가 기술-합병 자본 동맹이라고 부른 집단이다. 이 집단은 1990년대 나스닥 등에서 전성시대를 구가하던 또 거기에 근거하여 활발한 합병을 이루던 컴퓨터 서비스, 정보 기술, 이동 통신 등등의 관련 집단들을 일컫는다.

차등화 축적의 핵심은 여타 집단과의 비교 속에서 얼마나 그들을 능가하는 속도의 자산 증가를 이루었는가이다. 따라서 군수-석유 자본 동맹에게 닥친 차등화 축적의 위기의 절박함을 제대로 짚어보려면, 지배적 자본 집단 내의 경쟁 상대인 이 기술-합병 자본 동맹의 실적을 대상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림 3]은 지구적 순 법인 이윤(global net corporate profit)에서 각각의 집단이 차지하는 몫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바의 1970년대와 1990년대의 기간을 비교해보면 그 두 기간은 특히 군수-석유 자본 동맹에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과 같은 시기였음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전 세계 이윤의 20%에 육박하던 군수-석

유 자본 동맹의 이윤 몫은 90년대 들어와 3%까지 떨어지는 '모욕과 수모'를 당하게 된다. 한편, 1970년대에 군수-석유 자본 동맹에 적수가 되지 못하던 기술-합병 자본 동맹의 이윤 몫은 1980년대에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을 하는 듯 싶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 후자를 멀찍이 제치고 그 절정기였던 2000년 초에는 전 지구 기업 이윤의 14% 몫의 파이를 잘라 가져간다.

[그림 3] 주의: 순 이윤은 주식 시가를 주가-수익률(PER)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계열들은 월간 단위 자료를 나타내며 12개월 이동 평균으로 다듬어져 있다. 출처: Datastream (series codes TOTMKWD for world total; OILINWD for integrated oil; DEFENWD for defense; INFOHWD for information technology hardware; TELEQWD for telecom equipment; SFTCSWD for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

1980년대 한국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려 애쓰던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 "독이 있어야 비약이며, 바이트가 있어야 선반이며, 벨이 있어야 노동자다"라는 구절이 있다. 계급적 이익의 각성에 있어서 '독'이나 '벨'로 친다면 지배적 자본 집단이 노동자에게 뒤떨어질 리 없다. 개중에서도 실로 가공할만한 위력을 보여주었던 군수-석유 자본 동맹이 과연 '독'없이 '벨'없이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만 있었을까. [그림 3]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롭고도 극적인 반전이 보여진다. 2000년을 전후로 그렇게 '모욕적인' 군수-석유 자본의 수난은 드디어 바닥을 치고 그들의 이윤몫도 위로 솟아 오른다. 그리고 이와 궤를 같이하여 기술-합병 자본 동맹의 이윤몫은 뚝 떨어지고 만다.

이렇게 거울로 뒤집은 듯한 정확한 역상의 경향이 벌어진 것이 우연일까. 물론 아니다. 2000년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주요한 사건들-기술주 폭락, 9.11 테러,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 등-은 한쪽에는 재난이요 다른 쪽에는 호기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림 3]에 나타난 2000년 이후 두 계열이 보여주고 있는 극적인 대조는 우연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의문은 쉽사리 가지지 않고, 모습을 바꾸어 계속된다.

그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었을까.

분명히 이런 질문은 '음모 이론'의 영역에 닿아 있다.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군수-석유 자본 동맹의 이익과 어떤 '인과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쉽사리 얻어질 리가 없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계속 집착하면서 근거없는 추측을 남발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차원에서는 아무 소득이 없는 일이다. 닛잔/비클러는 구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있었던 일 공표된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 그럴 법한 설명틀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근거하여 미래의 향방에 대해 조심스런 진단을 할 뿐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련의 사건들'이 석유 가격의 인상 그리고 세계적인 군사 분쟁이라는 인플레이션 발생의 두 가지 조건과 긴밀한 사건이라는 정도일 뿐이다. 나머지의 판단과 추측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홍기빈/국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 이전기사 다음기사 ▶
전체리스트 필자의 다른기사 편집자에 의견보내기

'동남풍'만 기다린 군수-석유자본 동맹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28> "준비된 대통령" 조지 부시와 9.11

2004-08-30 오후 1:37:59

 기사보내기 기사프린트

IV. 다가오는 세계: 군사화, 인플레이션, 불황

5. "준비된 대통령" 조지 부시와 9.11

부시 대통령과 그 정권에 참여한 이런 저런 인물들 특히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인물들에 대한 각종의 비판과 폭로는 작년 이래 많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한국의 웹 공간에서는 그들에 대한 각종의 비방과 저주-항상 옳고 근거있는 것은 아니다-가 거의 과잉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최근의 세계 경제의 변화 경향의 메커니즘과 관련되는 측면에 한하여 닛잔과 비클러가 9.11까지의 부시 정권의 출현 및 경과에 대하여 추적한 바를 기록하고자 한다.

1996년, "후세인을 축출해야 '새로운 중동'이 가능하다"

게으른 오후와 같은 1990년대의 평화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군사 국가로서의 미국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것과 석유 문제를 매개로 하여 중동과 연결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당시의 평화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든 '전환'되어야 할 것이었으리라. 닛잔과 비클러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정권 시절에 나왔던 한 보고서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루살렘에 있는 고급 정치 전략 연구소(The Institute for Advanced Strategic and Political Studies)는 1996년 "깨끗한 단절: 국토 안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1990년대 클린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도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스라엘 국내의 자본 집단도 전쟁과 군수 산업보다는 하이테크와 정보 산업 등을 통하여 지구적 규모에서의 자본 유입과 인수 합병을 선호하고 있었고, 이러한 '평화 배당금'을 통한 축적에서는 중동 지역 정치 구조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기존의 이스라엘 및 중동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 '새로운 중동'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에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1970년대 키신저가 선호하던 방식의 군비 경쟁과 무장에 근거한 소위 '세력 균형'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은 터키, 요르단과 같은 전통적인 친서방 국가들과 손을 잡고 강력한 적 시리아에 대하여 영토 내 공격을 포함한 공격적인 압박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다. 이는 시리아의 힘의 주요한 근원은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강력한 동맹국 이라크의 존재이다. 따라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시리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안보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 국가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국내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 보고서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들이 전부 미국인들인데다가 그 중 다수가 차후 부시 정권에 주역으로 참여할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의 우두머리는 부시 정권하에서 국방 위원장을 맡게 될 리차드 펄(Richard Perle)이며, 그 팀에는 부시의 군사 안보 팀의 안팎을 이루게 될 더글라스 페이스(Douglas Feith), 메이라브와 남편 데이비드 우름저(Meyrav and David Wurmser), 제임스 콜버트(James Colbert) 등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후세인을 축출하고 중동 지역에 '세력 균형 체제'를 다시 회복하자는 이러한 메아리는 곧 미국 국내에서도 들리게 된다. '평화 중독자(peacenik)'로 유명한 클린턴이 아직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8년, 현재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 럼스펠드를 주축으로 한 42명의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어 '사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치적 군사적 전략'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안팎의 숱한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부시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 장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도널드 럼스펠드를 필두로 하여 그 42인 중 다수가 부시 정권에 참여하였고, 마침내 그 편지의 큰 뜻을 이루고야 말았다는 것은 이제 다 아는 바이다.

Best 클릭 기사

1. '극우 준동 역풍'에 한나라 지지율...
2. "지금 데모할 국민이 1천만, 맞아...
3. 정형근 '원희룡 맹성토', "술먹고...
4. 동아일보, 자사에 불리한 '여론조사...
5. "美, 유사시 북한에 핵 30개 투...
6. 박근혜-황장엽-조갑제, 한 자리서 ...
7. 일본영화의 한국 2차상륙 시작되다

오늘의 기획 · 연재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산불
hari-hara의 '생물학 카페' <28> 산불 이야기

산불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일단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끝은 파멸...

- 김태규 명리학 <170>
- 오즈의 마법사와 미국 대선
- 한국의 아르헨 차관설과 중국의 언...

'"동남풍'만 빠졌다", 적절한 시점에 일어난 9.11

아직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던 2000년, 그러한 이라크 공략의 구체적인 계획이 세밀하게 마련된 "미국 안보의 재구축"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미국의 21세기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를 설립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드, 폴 월포위츠, 부시 정권에서 아프가니스탄 대사로 나가는 잘메이 칼릴자드(Zalmay Khalilzad) 등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미국 정책-'평화 배당금'을 내세우면서 군사 예산을 삭감하고 조세 수입을 확대하여 정부의 흑자 재정을 일구어 나가는-이 미국의 '지구적 지도력(global leadership)'에 치명적인 공백을 안기고 말았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사비 지출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온다. 그러한 대규모의 '군사적 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가 쉽다. 모종의 지각 변동과 같은 파국적인 사태 이를테면 새로운 진주만 공격과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경사롭게도 이들은 2001년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몇 개월 후인 9월11일, 그날 밤 부시 대통령이 일기장에 사용한 용어 그대로, 미국은 "진주만 공격"을 받았다. 테러의 범인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혐의가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럼스펠드는 엉뚱하게도 당장 이라크로 쳐들어가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콜린 파월의 반대로 먼저 여론에 맞게 아프가니스탄부터 침공하는 쪽으로 겨우 결론이 난다. 하지만 결국 이라크는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 바이다.

"동남풍만 빠졌다"는 말이 있다. 삼국지연의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장강(長江)을 넘어 쳐들어 오는 조조의 군사를 막아내기 위해 오나라는 실로 기상천외의 전략까지 총동원하여 치밀한 화공(火功) 작전을 세운다. 천신만고 끝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드디어 결정적인 그 순간 빠진 것은 "동남풍" 뿐이었다. 이때 제갈량이 호풍환우의 도술을 부려 동남풍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어찌 되었을까.

9.11의 "진주만 공격"이라는 "동남풍"이 정말로 우연히 불어온 자연의 섭리였는지 아니면 도술로 만들어 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렇게 세계와 미국에 있어서의 '군사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1996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들은 9.11의 "동남풍"에 맞추어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와의 무한전"의 이름 아래 곳곳에 무자비한 화공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으로 떨어졌던 불벼락은 그 "동남풍"에 실려 이라크를 태운 바 있다. 여기에서 불이 멈출지 아니면 쿠르디스탄, 시리아, 이란 등으로 계속 퍼져나갈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홍기빈/국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